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814-01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보고서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실태와 관련 정책 발전방안

2014. 12.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이용의 주의 사항〉

1. 본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
2. 출처를 밝히면 본 보고서의 일부를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전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본 보고서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연구자의 견해이므로 이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귀중

본 보고서를 [귀농·귀촌 인구 정착 실태 및 관련 정책 발전 방안] 용역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12.

연구기관 : (사)농정연구센터

대표자 정영일 이사장

연구책임자

(사) 농정연구센터 장민기 부소장

연구원

(사) 농정연구센터 이준우 선임연구원

허재욱 연구원

김혜민 연구원

천안연암대학교 채상헌 교수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김기현 지사장

송기선 팀장

〈 차 례 〉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내용 및 방법	4
II 귀농·귀촌인 정착실태의 이해	14
1. 귀농·귀촌인 초기정착실태 및 정착현황별 특징 : 2010~2011년 전국 귀농·귀촌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4
1) 조사목적	
2) 조사방법	
3) 조사대상의 기본적 특성	
4) 귀농·귀촌 실행 초기 준비여건과 정착현황 분석	
5) 귀농·귀촌 초기 경제활동과 정착실태 분석	
6) 귀농·귀촌 초기 생활과 정착실태 분석	
2. 귀농·귀촌 중단사례 심층분석 : 경험자 3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40
1) 조사목적	
2) 조사방법	
3) 심층면접 개요	
4) 심층면접 내용분석	

Ⅲ 귀농·귀촌 정착관련 지원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63
1. 국내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체계와 내용	63
2. 시군별 귀농·귀촌 정착관련 지원정책 검토 : 도별 1개시군 지원정책 분석결과	66
3. 지자체 귀농·귀촌 현황 및 애로점 검토 : 현장의 귀농·귀촌인 지역리더 간담회 내용	84
1) 간담회 개요	
2) 주요 현황과 애로점	
3) 귀농·귀촌 실패경험자가 느끼는 정착시기 경험과 애로점	
4. 국외 귀농·귀촌 관련 지원정책 검토 : 일본의 신규취농제를 중심으로	86
Ⅳ 귀농·귀촌 초기 정착률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과 정책 제안	91
1. 지원방향.....	91
1) 정부 차원	
2) 지자체 차원	
2. 제안 정책	95
1) 농업정책적 측면	
2) 농촌정책적 측면	
3) 기존 제도·체계의 보완 측면	
참고문헌	97
[부록 1]	100
[부록 2]	110
[부록 3]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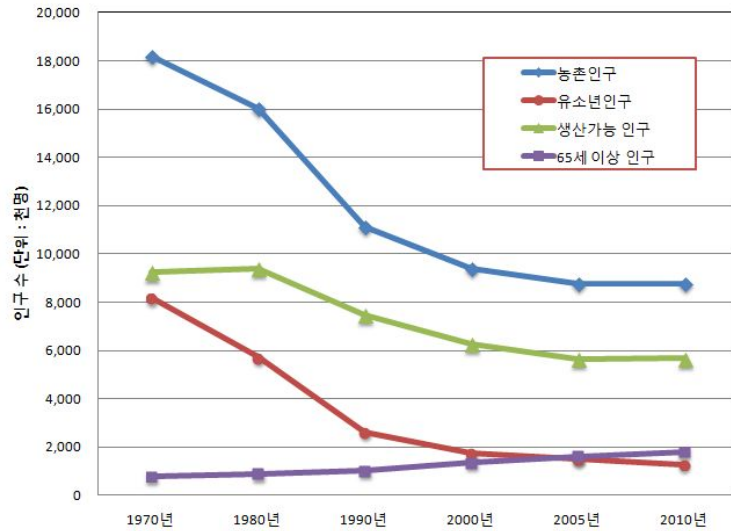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귀농·귀촌 ‘붐(boom)’과 의미

전국 인구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고, 농촌의 입장에서는 인구유출로 인한 지속적인 과소화와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2010년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20가구 이하 과소화마을은 2005년 2,048개에서 2010년 3,091개로 늘어났다.

[그림 1-1] 농가인구 변화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이 가운데 귀농·귀촌의 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귀농·귀촌의 활성화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귀농인구는 1997년 IMF 시기 이후 일시적인 급증이 있었고 이후 하락했다 2003년부터 조금씩 상승추세를 보여왔으며 2011년과 2012년 급속히 늘어났다. 특히 2010년~2011년 기간에는 100% 이상 증가했다. 한편 2013년에는 귀농인구가 10,923가구로 2012년 11,220가구보다 다소 줄어든

반면 귀촌인구는 2012년 15,788가구에서 2013년 21,501가구로 늘어 전체적인 귀농·귀촌의 인구는 상승세를 이어감으로써 향후 귀농 및 귀촌인구 각각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농촌으로의 이주와 정착은 농촌 과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주자나 기존 거주자 모두에게 상당한 사회적 부담을 부여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주하느냐보다 어떻게 정착하는지의 문제도 중요하다. 이주자는 사전 탐색, 정착 과정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민과의 갈등 극복과 해소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2) 귀농·귀촌의 실태 조사·분석 및 정착 지원 필요

귀농·귀촌의 급증은 경제 성장 속에서 삶의 가치, 그리고 농에 대한 재인식과 베이비부머(1950년대 후반 ~ 1960년대 초반 태생) 은퇴 등 경제·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에도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하고는 있으나 현재와 같은 급등 현상이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귀농·귀촌의 급증 이면에 귀농·귀촌에 실패하여 도시로 재이주하는 역귀농·역귀촌 현상도 다수 관찰되고 있다. 공식·비공식의 귀농·귀촌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공식·비공식의 귀농·귀촌 통계에는 드러나 있지 않으나 약 6.5%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¹⁾,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가 2010~12년 이주한 4,411개 세대를 대상으로 정착실태를 시범조사한 결과 도시로 되돌아간 세대가 같은 기간 귀농·귀촌한 세대의 8.3%(365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그 수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²⁾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 귀농자 4,080세대 중 221가구(약 5.4%)가 귀농에 실패하고 도시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귀농·귀촌에 대한 꾸준한 홍보·유치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인이 초기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SBS뉴스(2013년 7월31일) "절반 이상은 다시 도시로" 귀농 실패 급증
<http://media.daum.net/culture/newsview?newsid=20130731204208790>

2)새전북신문(2014년 3월10일) "귀농자 쌀직불금 받기 까다롭다"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6011>

3)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개선 필요

기존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주로 귀농·귀촌 준비 및 이주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기초 농업기술, 농촌사회 이해 교육과 농업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 용자,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주 후 경제적 성공 못지않게 지역사회 공동체에의 적응 또한 중요한 과제다. 귀농·귀촌 정착 시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제적 소득문제나 사업자금 조달, 일자리 부족 등 경제적 문제들이 가장 많이 꼽히고 있으나 이밖에 문화의료복지문제, 자녀교육문제 등도 그 못지않은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김철규 외, 2011, p.106).

귀농·귀촌이 지역 활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들의 경제·사회적 정착과 이를 포용하기 위한 기존 주민과의 융화가 필요하다. 귀농·귀촌의 동기, 연령 등 이들이 정착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현재 귀농·귀촌 인구의 초기 정착과정 실태를 최대한 현장과 밀착해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특히 정착 성공집단과 실패집단의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귀농·귀촌과 지역활력화에 기여하기 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귀농 초기정착단계의 집중적 분석

귀농은 결심-준비-실행 및 정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준비사항 및 지원요구 항목이 다르나 현재 대부분의 귀농·귀촌 활성화 관련 연구는 이러한 단계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다.

귀농의 단계에 착안한 연구가 이뤄진다 해도 귀농의 결심이나 준비, 실행단계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으며, 정착 및 적응과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귀농·귀촌 인구의 초기정착 과정, 즉 귀농의사가 이미 명확한 귀농인의 정착과정에 집중해 접근한다면 이후 귀농 실행자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장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 초기정착의 성공/실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검출

귀농·귀촌 선진사례 관련 소개나 연구는 다수 이뤄졌으나 실패사례의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분석이 연구가 부족하며, 대부분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귀농은 준비과정이 길고 전환이 전 가족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기존 연구에서는 약 2~3년 간 도시에서의 준비과정과 3~5년의 귀농지에서의 정착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귀농정착은 시간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켜볼 일이며, 한 가족에 있어서는 단순한 이사를 넘어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과정이다(구자인·서만용, 2005, p.151).

이미 귀농을 실천에 옮긴 사람들을 중심으로 초기정착 후 안정적으로 귀농·귀촌생활을 이어가는 그룹과, 실패 후 재이주한 그룹의 실태를 파악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원정책의 개선에 기여한다.

3) 농촌정착 관련 현행 지원정책 분석, 보완점 제안

현재 정부의 보편적인 귀농·귀촌 관련 지원정책은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귀농·귀촌교육 등 귀농의 결심, 준비 및 실행단계에 치우쳐져 있다.

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은 귀농·귀촌 탐색 단계를 넘어 현장 정착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서 주목해야 한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의 경우 공모형태이긴 하나 비교적 많은 수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귀농인을 모집하고 연성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거 귀농·귀촌 지원에서 진화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성적 지원 사업들에 대해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이후의 지원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귀농·귀촌 선진 지자체의 관련 지원정책 운영현황파악 및 더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귀농·귀촌 활성화 관련 적절한 역할분담체계를 제시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전제 1 : 귀농·귀촌 관련 개념, 유형 및 단계

(1) 귀농(인), 귀촌(인)의 개념

귀농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제도적, 학문적으로도 찾기 어려우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는 귀농인의 출신배경과 귀농목적에 대한 규정이 연구자들간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손상락, 2012).

통계청에 따르면 귀농인은 "통계작성 기준일 현재(매년 11월 1일) 1년 전 주소가 동(洞)지역이고 현주소가 읍·면(邑·面)지역인 자 중에서 농업경영체, 축산업등록명부,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신규등록한 자"이며 귀촌인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 단,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 제외"로 정의한다. 이 개념에 따른 통계는 실제 귀농·귀촌인 통계로 보기에 적절치 않으나 현재로서 실제 귀농·귀촌 경향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치이다.

김정섭(2009), 오수호(2012)는 귀농이 "농업에 종사하려는 목적으로 외부 도시로부터 농촌에 신규 전입하는 인구이동"을, 귀촌은 "귀농을 포함하여 도시로부터 농촌에 신규 전입하는 인구이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곧 귀농을 귀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추진 상으로나 일반적으로는 이를 구분지어 바라본다.

귀농·귀촌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귀농 범주에 포함시키는 시각도 있다. 임춘희(2012)는 농업의 영위 유무보다도 농촌지역주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농촌을 생활터전으로 삼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며, 농촌으로 이주해왔으나 농업이외의 다양한 직업생활을 하는 사람을 포함시킨 귀농·귀촌의 의미를 포괄해 귀농의 의미로 설정한다. 따라서 귀농은 '도시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목적으로 농촌으로 돌아와 농업 혹은 비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이주'로 정의한다.

농식품부는 귀농을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귀촌을 "자신의 주된 거주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지만,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영농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내 정보광장)

(2) 귀농·귀촌의 단계

귀농·귀촌의 정착 측면에서는 귀농·귀촌 단계설정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다.

농식품부(2005)는 귀농단계별 실태를 분석하면서 귀농인식단계-귀농탐색 및 결심단계-귀농준비단계-귀농실행단계 등 4단계를 제시했으며 농촌진흥청(1999)은 귀농결심단계-가족동의단계-작목선택단계-영농기술 습득단계-정착지 물색 단계-주택 및 농지구입

단계-영농수립 단계 등 7가지로 나누었다.

이시자(2010)는 귀농동기 및 준비단계-귀농탐색과 이주준비 단계-귀농실행단계-귀농 적응단계 등 4가지 단계로 제시했으며 Fielding(1974)은 이주동기의 형성-이주의사결정-이주실행 등 3가지 단계로 구분했다.

기존의 이러한 단계구분은 귀농·귀촌 실행 이후의 적응, 정착 단계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의 단계를 ①관심 - ②이주 - ③정착의 3단계로 구분하되, 정착을 ③-1 초기정착(5년 이내), ③-2 완전 정착(10년 이내)으로 추가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선행연구의 구분을 고려하면서도 조사·분석을 위해 단순화하고, 특히 초기정착 단계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귀농·귀촌 단계를 이해하면서도 면담, 지원정책 등 주요한 연구 항목에 대해서는 초기정착 단계에 집중하여 수행한다.

[표 1-1] 귀농·귀촌 단계 설정(본 연구를 위한 조작적 정의)

단계		주요 내용
①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전 2~3년 - 결심, 가족의 동의 - 정보탐색, 이주 지역 검토 및 탐방 - 교육 이수 - 왕래 및 귀농 임시 기반 확보 (소규모 토지임차 등)
② 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마련 - 단독 이주 / 가족 이주 - 완전 이주 / 임시 이주 - 귀농 기반 확보, 귀촌 일자리 확보
③ 정착	③-1 초기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후 5년 이내 - 귀농, 귀촌 임시 기반 확대 - 품목 확립 / 사업 확립 - 지역 사회활동 개시 (단체 가입 및 조직 활동)
	③-2 완전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후 5년 초과 ~ 10년 이내 - 귀농 기반 확립 [토지 매입, 시설·장비 매입 등] - 귀촌 일자리 확립 [창업, 정규 취업 등] - 지역 사회활동 주도

(3) 귀농·귀촌의 유형

귀농·귀촌의 유형은 이주형태, 이주목적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구분으로는 U-turn, J-turn, I-turn 등 세 가지가 있다. 이는 일본에서 들여온 개념으로 각각 고향 농촌에서 살다 도시로 간 후 고향농촌으로 복귀한 케이스, 농촌에서 살다 도시로 간 후 고향농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농촌으로 이주, 도시에

서 살다가 농촌으로 이주 등을 의미한다.

강대구(2007)는 도시생활 곤란 집단, 사업실패집단, 농촌생활 선호집단, 이상추구집단, 영농승계 집단, 건강문제 집단, 퇴직 집단, 기타 귀농 집단 등 8가지로 분류하고 동기별 정착과정의 차이를 분석했다.

이민수 외(2009)는 경제적 성공 추구 집단, 전원적 삶 추구, 가족생활 추구, 도시생활 회피 추구, 영농승계 추구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귀농·귀촌자를 기업가형, 소규모 창업형, 전원형, 영농승계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김철규 외(2009)는 귀농·귀촌의 동기를 경제/생계형, 대안가치 추구형, 개인생활 효용형 등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귀농·귀촌의 유형 구분은 관련된 분석의 기초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해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구분을 농업(귀농)/비농업(귀촌), 동기, 연령, 출신지[고향,타향], 이주 방식 등 기존 연구에서 귀농·귀촌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로 제시된 요소에 집중하여 구분하도록 한다. 귀농·귀촌이 일률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유형을 바탕으로 초기 정착 과정의 특징을 밝히고, 이에 따른 시사점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표 1-2] 귀농·귀촌 유형구분을 위한 핵심 변수(본 연구를 위한 조작적 정의)

항목	내용
농업/비농업	- 농업 : 농업생산 - 비농업1 : 농관련 산업 (가공, 유통, 서비스 등 6차) - 비농업2 : 타 산업 부문 (제조, 서비스, 교육 등 비관련 사업)
동기	- 경제적 목표 - 가치추구 목표
연령	- 40대 미만 - 40대 ~ 50대 - 60대 이상
출신지	- 고향 - 타향[농촌] - 타향[도시]
이주방식	- 단독 - 부부 - 가족(자녀 포함)

2) 전제 2 : 귀농·귀촌의 현황과 실패요인

(1) 귀농, 귀촌 현황에 대한 분석

첫째, 귀농·귀촌 인구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귀농인구는 1997년 IMF 시기 이후 일시적인 급증이 있었고 이후 하락했다 2003년부터 조금씩 상승추세를 보이다 2011년과 2012년 급속히 늘어났다. 최근의 귀농·귀촌 인구증가 추세는 과거와 달리 농촌의 가치에 입각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철규 외(2012)는 1990년대 말의 생계형과 달리 2002년부터는 대안가치 추구형과 개인생활 효용형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강대구(2007)는 귀농동기를 ‘농촌생활선호집단’ ‘이상추구집단’ ‘사업실패집단’ ‘도시생활문제집단’ ‘퇴직금 집단’ ‘영농승계집단’ 등의 순으로 보았다. 김성수 외(2004)는 '인간다운 삶'이 중요한 귀농동기임을 밝혔다.

둘째, 귀농·귀촌 인구의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30~40대 청장년층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2013년 기준 귀농·귀촌 인구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8.5%로 가장 많고, 40대가 22.1%, 60대가 20.7%로 그 뒤를 이었다. 은퇴 후 제2의 삶을 위한 베이비붐세대의 귀농·귀촌은 꾸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편 2011년,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를 통해 보더라도 30대와 40대의 귀농·귀촌이 꾸준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농촌을 여생을 보낼 공간으로 여겨서 이주하는 사람 외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일생의 주요 활동무대를 농촌으로 설정하고 이주하는 귀농·귀촌인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이 향후 정책적으로 더 고민되어야 한다.

셋째, 귀농의 단위가 1인, 2인 가구인 경우가 많다.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가족단위의 이주가 전제로 되어야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가족 보다는 부부 등 2인 가구로서 혹은 홀로 귀농·귀촌 하는 사례가 많다. 50대 이상 및 은퇴자의 귀농·귀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러한 귀농·귀촌 방식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가족 이주 등 보다 건실한 귀농·귀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지원정책에서는 2인가구 이상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지만, 가족 단위 유인과 함께 단독 및 2인 가구 귀농·귀촌에 대한 지역 참여와 역할 확대를 고려한 현실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표 1-3] 연간 전국 귀농인구 및 연령대별 비율(단위 : 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0대이하	761(14%)	1,202(12%)	1,292(12%)	1,253(11%)
40대	1,481(27%)	2,555(25%)	2,766(25%)	2,510(23%)
50대	1,854(34%)	3,764(37%)	4,298(38%)	4,289(39%)
60대	1,054(20%)	2,007(20%)	2,195(20%)	2,288(21%)
70대이상	255(5%)	547(5%)	669(6%)	583(5%)
합계	5,405	10,075	11,220	10,923

자료 : 통계청

(2) 귀농, 귀촌 실패요인 분석

국내 귀농, 귀촌의 실패원인과 관련한 논의는 대부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선행연구들을 통해 드러나는 귀농·귀촌 실패원인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의 일자리 부족이나 저조한 소득이 가장 많은 실패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업인재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정착에 실패한 유형의 경우, 귀농정착 실패 이유로는 ‘일자리 부족’(34.6%)과 ‘부족한 소득’(26.9%)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성주인, 2012; 채상헌, 2013에서 재인용). 경남지역 귀농·귀촌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귀농인의 경우 실패요인으로 낮은소득 때문에(25.0%)를 지목했다(손상락, 2012)³⁾ 결국 실질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위해서는 귀농 귀촌 이후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특히 소득창출에 도움될만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마을주민과 대표자가 생각하는 실패요인(귀농·귀촌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마을주민·대표자 50명 대상 의견조사)조사 결과, ‘농촌생활 적응이 어려움(38%)’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가 ‘낮은 소득 때문에(24%)’로 나타났다(손상락, 2012). 토박이주민의 입장에서 귀농·귀촌자가 부족한 소득이나 일자리보다는 농촌생활 적응에 실패해 떠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귀농·귀촌자가 농촌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지 못해왔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한 물질적인 지원 외에 귀농자가 농촌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게끔 돕는 지원 또한 필요함을 시사한다.

3) 귀농·귀촌 관련 선행연구 실태

(1) 귀농귀촌 선행연구의 유형과 접근방식

귀농귀촌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할 경우 궁극적으로 귀농귀촌 지원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대다수였다. 분석 범위에 따라서는 귀농귀촌 일반에 대한 접근과 지자체단위 접근으로 크게 분류 가능하며, 주요 연구항목에 따라서는 귀농귀촌 동기와 유형, 정착과정, 실태분석 및 효과파악, 만족도 및 애로사항, 지원정책 분석 등으로 분류 가능하다. 이 중 귀농인의 귀농동기와 정착과정, 만족도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연구 대부분은 특정 지역 귀농인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원정책은 일반적인 지원방향 및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와 특정 지자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 지원정책을 제안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3) 한편 해당 연구에서 귀촌자가 선택한 실패요인으로는 자녀교육 문제(21.7%)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1-4] 귀농귀촌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및 분류

분류	저자(발행년도)	주요내용
귀농의 동기와 유형	권도원(2013)	농촌이주 의사결정요인 파악 및 컨설팅집단/비컨설팅집단 비교 분석
	남인현(2011)	귀농자의 귀농목적에 따른 유형분류, 창업이론 틀 활용 분석
	이민수 외(2012)	귀농귀촌자 동기에 따른 유형화, 군집분석
	이수행(2012)	귀농귀촌 트렌드 분석, 유형구분(스마트형, 전원생활형, 노후생활형) 및 정책방향 제시
정착과정	강대구(2006)	J형, U형, I형에 따른 특성 및 영농정착과정 분석
	강대구(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과정변화파악 및 적절한 지원방안 제언
	박경옥 외(2012)	충북지역 귀촌자 대상 주택마련현황 파악 및 분석, 귀촌자 주거환경정책 제언
	박기서 외(2012)	지역별 이주결정요인 분석.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환경적, 지방행정 변수별 설정 지표에 따름
	이상호(2008)	각 귀농단계에서 정착이후 귀농인 만족도를 문화 복지 의료시설 측면/지역 농업인과의 유대관계 측면에서 분석
실태분석 및 효과파악	김소라(2013)	귀농인의 귀농전후 삶의질 변화인식 분석(전라도, 경상도)
	김정호(2006)	예비취농자/신규취농자 영농태도 규명 및 비교, 시사점 도출
	문승태(2012)	성별, 연령, 귀농기간, 귀농유형에 따른 삶의 질 인식수준 분석(경상도 전라도)
	오수호(2012)	설문조사를 통한 귀농귀촌인 현황 파악 및 당면문제, 정책 제언
	유학열(2011)	충남지역귀농귀촌동향분석, 귀농귀촌행태특성, 유형별 특성
	이승우 외(2012)	실태 및 정책 분석, 설문조사, 정책방향 제언
	생활만족도 및 애로사항	고상환(2011)
구지영(2013)		장흥군 귀촌 유형별 특성 및 분석, 지역에 미치는 영향
김성수(2004)		귀농자가 원하는 교육내용, 특성, 애로사항 파악 및 정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제시
마상열(2012)		귀농귀촌 관련 도시민 의식조사
박공주 외(2006)		노년기 귀농, 농촌생활 적응도와 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 분석
박성복(2013)		농촌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 간 인과관계 구조 밝히기 위해 귀농결정 요인 4가지와 귀농준비도 정주만족도 농촌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분석
박은경(2013)		영월지역 은퇴귀농인 대상 만족도 및 애로점 조사, 정책제언

지원정책 분석	박경옥(2012)	정부 및 지자체, 주거환경 지원정책-귀농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착안, 분석
	김정섭(2009)	귀농귀촌 관련 지자체 정책사업 분석 및 과제제안
	박정윤 외(2013)	개인적 차원에 치우친 귀농정책에 문제제기, 사회적 공동체적 차원의 정책 마련 제안. 설문 및 주민인터뷰
	손상락(2012)	귀농의 정의유형 분석, 귀농귀촌 현황, 경남 추이 및 지원조례 분석, 제언.
	윤석환(2010)	귀농지원 목적, 귀농지원 대상, 귀농지원 수단별로 귀농지원체계 분석
기타	박경옥(2014)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통해 생활환경적측면, 사회 환경적측면, 관리환경적측면, 지역환경적측면, 경제환경적측면 5개 대분류 및 평가지표 항목 설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귀농귀촌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적절한 지원정책을 제안하는 연구가 다양한 접근방법에 의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귀농귀촌의 단계에 주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초기 정착 과정에서 귀농귀촌인의 정착률을 위한 지원정책을 고민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 귀농귀촌인 대상 설문조사 검토

귀농귀촌인 관련 연구는 상당수가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전국 단위보다 특정 지자체 단위, 또는 특정 귀농인교육 이수자 등의 범주에 국한해 진행되었다. 11개 연구 중 9개 연구에서 분석 샘플이 500개를 넘지 않아, 1990년 이후 누적 귀농인 수가 5만여명을 육박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샘플 수가 부족하다. 귀농귀촌 시기에 따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표 1-5] 귀농귀촌 관련 주요 연구 설문조사 및 대상

필자(발행년도)	제목	설문대상
강대구(2006)	귀농자의 귀농 유형별 영농 정착과정	농림부와 전국 시군 협조받아 시군별 10명씩 추천, 귀농경력 별 3년 이내/3~5년/6년 이상으로 구분, 경력과 권역(서울/경기/강원충청 전라 경상)로 2단계 층화. 각 집단별 40명씩 총 480명 유층표집, 주소불명이나 연락불통 제외 후 395명 응답, 2개 항목 이상 무응답 있는 경우 제외 후 375명 최종분석
황정임(2012)	귀농귀촌인 영농활동 및 정주	2012년 160개 시군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담당자, 139부 회수

	지원 연구	
황정임(2012)	귀농귀촌인 영농활동 및 정주지원연구	귀농교육 수료생 643명(농촌진흥청, 농협안성교육원, 대전시농업기술센터, 한국벤처농업대학, 여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지도자아카데미 주관 교육)
고성준(2008)	귀농자의 실태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구	귀농자 수가 비교적 많은 전북도내 지역에서 무작위 표집한 52개 가구 대상 방문, 설문, 면담
구자인·서만용(2005)	귀농자의 농촌 정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귀농탐색 기간동안 귀농 관련교육 이수자, 교육수료자의 지역 분포가 골고루 퍼져있고 체계적인 귀농자들간 연락망이 구축된 부산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교육 이수후 실제 귀농한 사람 중 연락 가능한 사람. 두달간 우편조사, 250명 중 응답자 79명. 통계적으로 표본수가 유효하지는 않음.
김성수(2004)	귀농자들의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향	전국 귀농자 대상 1,200부 설문지 발송, 526부 회수 및 부적절 설문 32부 제외 및 분석. 심층 연구를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 제외 각 도별 5인 선정 비구조화된 설문지 이용 심층면접
김정호·마상진(2006)	예비취농자 및 신규취농자의 영농에 대한 태도 연구	여주농전,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재학생 273명, 졸업생(교육이수생) 중 취농자 107명(교육시간중 집단설문, 졸업생은 방문조사 및 추천 통한 우편발송 회수
김철규 외(2012)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진안군 귀농귀촌인 전수조사(면접조사), 원주민조사(진안군 11개읍면 296개 마을 대상 1,500명 설문지 배포, 457개 회수. 마을별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포함되도록 조사 실시. 마을주민과의 인식차이 비교 가능하게)
천안연암대 귀농지원센터(2010)	귀농현황 및 정착 실태조사 보고서	전국 거주 귀농, 귀촌, 역귀농자(각 시도 지자체 db 제공) 1,205명(귀농944 귀촌244 역귀농17)
이만수(2012)	도시민의 귀촌행태 유형화와 시사점	동기에 따른 군집화를 위해 22개 귀농귀촌동기 측정항목 개발
오수호(2013)	귀농귀촌가구의 이주정착특성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전국 귀농귀촌가구 718명 대상
유학열(2011)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실태 및 유형별 특징	서천군 120명, 홍성군 40명, 금산군 30명, 청양군 22명 등 총 212명 대상, 유효회답 70부

한편 본 연구의 2010년과 2011년 귀농귀촌인 데이터 기반 설문조사는 전국 귀농귀촌인 현황을 각 시군별로 최대한 비례표집함으로써 전국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과거 조사에서 부족했던 대표성을 보완하고자 한다. 또 2010년과 2011년에 귀농·귀촌한 것으로 집계되는 사람들로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특히 현 시점에서 귀농귀촌 정착시기를 보내고 있는 귀농·귀촌인에 집중해 현황을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3)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귀농·귀촌 관련 연구 검토

국내 귀농·귀촌 관련 연구에서 심층면접법을 활용한 질적연구방법을 도입한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진안군 귀농귀촌인들 및 특정 마을을 대상으로 이뤄진 바 있다.⁴⁾ 이들의 경우 질적연구방법에서 지향하는 ‘특별한 응답자’가 될 수는 있지만 진안군의 지자체 차원의 귀농귀촌 지원시스템이 차별화되어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전국적인 귀농귀촌인 실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귀농·귀촌 중단 사례 30건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도시 역귀농과 2차(이상) 귀농 사례를 함께 보여주고자 했으며 이 밖에도 귀농사례와 귀촌사례, 가급적 여러 지자체 단위에서의 귀농·귀촌 중단 경험, 은퇴농과 30대 청년의 귀농·귀촌 등 다양한 경우를 발굴하려고 시도했다.

4) 김철규 외(2012)

II 귀농·귀촌인 정착실태의 이해

1. 귀농·귀촌인 초기정착실태 및 정착현황별 특징 : 2010~2011년 전국 귀농·귀촌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 조사목적

이 조사의 목적은 ①귀농귀촌 성공/실패 요인을 특히 귀농 5년 이내 정착과정에 집중해 검출하고, ②귀농 1차 실패 후 귀농유지/도시 역귀농/2차(이상) 귀농의 유의미한 수치를 도출하며 ③각 정착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④최종적으로는 분석 결과들을 기반으로 향후 귀농귀촌인 초기정착 관련 지원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데 있다.

2) 조사방법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수령한 2010년과 2011년 귀농·귀촌인 전수명단(2010년 4,067명, 2011년 10,505명 등 총 14,572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했으며 목표 유효샘플은 1,000개였다. 2개년도 샘플을 합쳤을 때 지역별 분포는 인천·경기 436명, 강원 2,479명, 충북 852명, 충남 1,051명, 전북 1,828명, 전남 2,570명, 경북 2,867명, 경남 2,298명, 제주 159명 등이었는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전에 의사를 물어 설문응답하겠다고 한 귀농·귀촌 경험자만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최대한 지역별 귀농·귀촌 인구별 비례표집을 반영해 각 지역별 조사샘플을 추출하고 우선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 했다. 전체 14,572명 중 각 시군 귀농·귀촌자 수에 비례해 표집한 1,000개의 유효샘플을 목표로 진행했지만 전화 비수신, 거절 등의 이유로 최종적으로 701개의 유효샘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설문은 주로 설문대상자의 귀농·귀촌 초기정착 당시 준비여건이나 형태, 경험 등에 입각해 이뤄졌다. 특히 귀농·귀촌 정착 여부에 따라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각 경우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3) 조사대상의 기본적 특성

(1) 지역

총 701개의 유효샘플은 최초 귀농·귀촌시 거주지별로 강원 59개, 경기/인천 12개, 경남 108개, 경북 162개, 전북 112개, 전남 118개, 제주 7개, 충남 71개, 충북 52개 등이다. 비례표집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아 최종 조사 결과 강원, 경기·인천, 경남, 전남, 제주는 비례표집 할당에 비해 샘플수가 적었고 그 밖의 도는 할당에 비해 많이 획득되었다.

(2) 정착현황

이들의 정착현황을 귀농·귀촌생활 유지/도시 역귀농(귀촌)/2차(이상) 귀농(귀촌)으로 분류할 경우 각각의 개수는 ①귀농귀촌 유지 : 626명(약 89.3%), ②도시 역귀농 : 13명(약 1.9%), ③2차(이상) 귀농 : 62명(약 8.8%) 등으로 조사되었다.⁵⁾

이를 통해 귀농이나 귀촌생활을 중단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도시로 돌아오는 유형 외에 다른 지역으로 한 차례 더 귀농·귀촌 하는 유형도 존재하며, 이러한 2차(이상) 귀농이 심지어 도시 역귀농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일단 귀농·귀촌에 뜻이 있어 이를 시도한 사람의 경우 한 차례 귀농·귀촌을 중단하게 되었다고해서 다시 도시로 돌아오기보다 다른 귀농·귀촌지를 모색해 이주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한 별도 원인파악 및 대안이 요구된다.

한편 응답자 중 귀농중 혹은 귀농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70.6%(495명), 귀촌중 혹은 귀촌경험이 있다고 답한 인구는 29.4%(206)로 귀촌보다는 귀농이 다소 많았다.

(3) 이주시 가구형태

701가구 중 부부끼리 이주하는 경우가 24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부부와 자녀가 함께 오는 경우가 192가구로 그 뒤를 이었다. 1인가구도 176명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밖에 자녀와 함께 오는 싱글대디 혹은 싱글맘, 부부·자녀·부모가 다같이 움직

5)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각 년도별 귀농·귀촌 유지 및 중단 추세는 다음 표와 같다.

	2010년	2011년	계
합계	401명 (100.0%)	300명 (100.0%)	701명 (100.0%)
유지	357명 (89.0%)	269명 (89.7%)	626명 (89.3%)
2차(이상)	37명 (9.2%)	25명 (8.3%)	62명 (8.8%)
도시 역귀농	7명 (1.8%)	6명 (2.0%)	13명 (1.9%)

이는 경우,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과 움직이는 경우도 적게나마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표 2-1] 귀농·귀촌인의 이주시 가구 형태 (가구수,%)

가구 형태	1인 가구	부부	부부+ 자녀	본인+ 자녀	본인+ 부모, 부부+ 부모	부부+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다른 가족과	부부+ 기타 가족	자녀+ 부모	합계
개 수	176 (25.1)	243 (34.7)	192 (27.5)	29 (4.1)	21 (3.0)	18 (2.6)	12 (1.7)	8 (1.1)	1 (0.1)	701 (100)

4) 귀농·귀촌 실행 초기 준비여건과 정착현황 분석

먼저 귀농·귀촌 실행시기에 어떠한 여건과 환경을 바탕으로 이를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귀농·귀촌 성공이나 실패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와 관련한 요인들을 분석해보았다.

[표 2-2] 귀농·귀촌인의 이주시 가구 형태(가구수,%)

	1인 가구	부부	부부+ 자녀	본인+ 자녀	본인+ 부모, 부부+ 부모	부부+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다른 가족과	부부+ 다른 가족 (형제 등)	본인 + 자녀 + 부모	부부 + 자녀 + 기타 가족	합계
전체	176 (25.1)	243 (34.7)	192 (27.5)	29 (4.1)	21 (3.0)	18 (2.6)	12 (1.7)	8 (1.1)	1 (0.1)	1 (0.1)	701 (100.0)
유지	153 (24.4)	221 (35.3)	175 (28.0)	23 (3.7)	18 (2.9)	17 (2.7)	9 (1.4)	8 (1.3)	1 (0.2)	1 (0.2)	626 (100.0)
중단	23 (30.7)	22 (29.3)	17 (22.7)	6 (8.0)	3 (4.0)	1 (1.3)	3 (3.9)	0 (0.0)	0 (0.0)	0 (0.0)	75 (100.0)

주 : ‘유지’는 귀농·귀촌상태 유지 집단, ‘중단’은 귀농·귀촌상태 중단집단을 의미함

먼저 이주시 가구형태는 전체적으로 부부 2인, 부부와 자녀, 1인가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저히 떨어지는 비율이었다. 한편 귀농·귀촌을 중단한 그룹의 경우 1인귀농의 비율이 귀농·귀촌 유지집단보다 훨씬 높다는 특성이 나타났다. 귀농·귀촌 유지집단의 경우 부부가 이주한 경우 및 부부와 자녀가 이주한 경우가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1인귀농은 153건으로 그 뒤를 이었던 반면 귀농·귀촌 중단 집단 중에서는 홀로 이주하는 경우가 부부 단위와 함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이주해야 귀농·귀촌을 포기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표 2-3] 귀농·귀촌 유지 여부에 따른 준비자금(가구수,%)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 이하	1억 초과 2억 이하	2억 초과	모름/무응답	계	평균(만원)
전체	129 (18.4)	181 (25.8)	137 (19.5)	120 (17.1)	105 (15.0)	29 (4.1)	701 (100.0)	12,363.9
유지	111 (17.7)	160 (25.6)	124 (19.8)	107 (17.1)	99 (15.8)	25 (4.0)	626 (100.0)	12,721.8
중단	18 (24.0)	21 (28.0)	13 (17.3)	13 (17.3)	6 (8.0)	4 (5.3)	75 (100.0)	9,381.9

이주시 준비자금은 전체적으로 1,000만~5,000만원이 비율상 가장 많았고 5,000만원~1억원이 그 뒤를 이었지만 1,000만원 이하의 자금만을 가지고 이주하는 경우도 18.4%로 적지 않은 비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5억원 이상으로 투자하는 농가도 34개 존재하면서 평균 귀농·귀촌 준비자금은 1억2,364만원을 기록했다.

이 중 귀농·귀촌 유지 집단이 귀농·귀촌 중단 집단보다 준비자금 액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귀농·귀촌 유지 집단의 준비자금 평균은 1억2,722만원 정도였지만 중단 집단의 평균은 9,382만원 정도로 기록되었다. 또한 중단 집단의 경우 준비자금이 1,000만원 이하라고 답한 비율이 23.7%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기도 했다. 귀농·귀촌의 유지 여부에 준비자금이 영향을 미친다는 데 힘을 실어주는 결과다.

이 밖에 준비기간의 영향도 어느정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주를 위해 실질적으로 준비한 기간은 평균적으로 1년 반 정도(18.4개월)를 기록했으며 귀농·귀촌 유지자도 이와 비슷한 18.8개월의 실질적 준비기간을 거쳤지만 2차(이상)귀농·귀촌자는 15.1개월, 도시 역귀농자는 12.4개월로 평균적인 기간에 비해 단시간의 준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표 2-4] 지역이나 농지탐색 등 귀농·귀촌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기간(가구수,%)

		12개월 이하	13~24개월	25개월 이상	합계	평균
전체		471(67.2)	103(14.7)	127(18.1)	701(100.0)	18.4
	유지	417(66.6)	93(14.9)	116(18.5)	626(100.0)	18.8
	2차(이상) 귀농	45(72.6)	8(12.9)	9(14.5)	62(100.0)	15.1
	도시 역귀농	9(69.2)	2(15.4)	2(15.4)	13(100.0)	12.4

귀농·귀촌 유지 여부 및 현황에 따라 초기 농사형태나 거주형태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최초 농사형태는 전체적으로 귀농시 바로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해서 새롭게 농사를 시작한 경우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는 귀농·귀촌 유지자나 2차(이상) 귀농·귀촌자, 도시역귀농자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귀농·귀촌 유지 집단의 경우 부모에게 농사를 승계받았거나 함께 경영하는 비율이 26.4%로 다른 집단보다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 밖에 거주형태 관련 질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신축이나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42.4%)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지만 이는 모든 귀농·귀촌 그룹의 상황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 귀농·귀촌 유지그룹은 집을 새로 짓거나 구입했던 비율이 가장 많으나 2차(이상) 귀농·귀촌 그룹과 도시 역귀농의 경우 임차의 비율이 각각 37.1%와 38.5%로 가장 많았고 지역에 살고있던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살았다는 비율이 그 뒤를 이었다. 귀농·귀촌 유지 집단 중 농사형태로 승계농이 많으며 집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또한 많다는 측면에 비추어 보면 유지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갖춰놓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는 농촌에 확실하게 뿌리내리지 않은 경우 좀 더 도시나 다른 농촌지역으로의 이주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하기도 한다.

[표 2-5] 최초 귀농시 농사형태(가구수,%)

	부모에게 승계받았거나 부모와 함께 경영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해서 새롭게 농사를 시작함	나의 농지 없이 다른 농가나 농업법인에 실습자 겸 보조자로 취업	일감이 있을 때에만 일하는 일용노동자	모름/무응답	합계
전체	122(24.6)	343(69.3)	19(3.8)	10(2.0)	1(0.2)	495(100.0)
유지	118(26.4)	302(67.6)	16(3.6)	10(2.2)	1(0.2)	447(100.0)
2차(이상) 귀농	4(10.0)	33(82.5)	3(7.5)	0(0.0)	0(0.0)	40(100.0)
도시 역귀농	0(0.0)	8(100.0)	0(0.0)	0(0.0)	0(0.0)	8(100.0)

[표 2-6] 최초 귀농·귀촌시 거주형태(가구수,%)

	신축이나 구입	임차 (전세, 월세)	지역에 살고있던 가족이나 지인과 동거	임시거주 (귀농인의집, 컨테이너박스 등)	기타 ⁶⁾	합계
전체	297(42.4)	148(21.1)	153(21.8)	96(13.7)	7(1.0)	701(100.0)
유지	280(44.7)	120(19.2)	135(21.6)	85(13.6)	6(1.0)	626(100.0)
2차(이상) 귀농	14(22.6)	23(37.1)	14(22.6)	10(16.1)	1(1.6)	62(100.0)
도시 역귀농	3(23.1)	5(38.5)	4(30.8)	1(7.7)	0(0.0)	13(100.0)

귀농·귀촌 당시 동기를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1순위로 나타났고, 이는 귀농·귀촌 유지 집단, 2차(이상) 귀농·귀촌 집단, 도시 역귀농 집단 등 모든 집단에서 1순위 동기였다. 한편 귀농·귀촌유지자의 경우 이에 못지않게 퇴직 후 노후대책도 강력한 동기였던 반면 2차(이상) 귀농·귀촌 집단에서는 농촌생활 관심과 선호가 압도적인 1위였으며 농업노동을 전문적으로 하고싶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퇴직후 노후대책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

6) 기준에 자신 명의로 되어있던 고향집, 마을회관, 빈집 무상이용 등이 이에 속한다.

[표 2-7] 당시 귀농·귀촌 동기(가구수,%)

	퇴직 후 노후대책	실직이나 사업 실패	농촌생활 에 대한 관심과 선호	가족이나 친지의 농사 승계를 위해	농업노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개인사 정/건강 때문에	기타 ⁷⁾	없음/ 모름/ 무응 답	합계
전체	164 (23.4)	86 (12.3)	213 (30.4)	77 (11.0)	95 (13.6)	44 (6.3)	18 (0.6)	4 (0.6)	701 (100.0)
유지	152 (24.3)	82 (13.1)	183 (29.2)	75 (12.0)	83 (13.3)	38 (6.1)	11 (1.8)	2 (0.3)	626 (100.0)
2차(이상)	10	3	26	2	11	4	5	1	62
귀농	(16.1)	(4.8)	(41.9)	(3.2)	(17.7)	(6.5)	(8.1)	(1.6)	(100.0)
도시	2	1	4	0	1	2	2	1	13
역귀농	(15.4)	(7.7)	(30.8)	(0.0)	(7.7)	(15.4)	(15.4)	(7.7)	(100.0)

5) 귀농·귀촌 초기 경제활동과 정착실태 분석

귀농인의 경우 귀농생활 초기에 영농기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실제 국내 지원정책 중 많은 부분이 귀농교육에 할애되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한 농업생산 뿐 아니라 가공이나 판매 등의 단계도 포함되기 때문에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농사는 별도로 짓지 않거나 작은 규모로 지으면서 농업외소득을 창출하는 귀농·귀촌인도 존재하나 이 또한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 공간에서 이뤄짐에 따른 나름의 애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농업소득(순수입 기준)으로 비교해봤을 때 현재 귀농·귀촌 유지 집단과 중단 집단 모두 소득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각각 27.3%, 49.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지 집단의 경우 월 100만~300만원이, 중단 집단에서는 월 50만~150만원과 50만원 미만이 그 뒤를 이었다. 평균 농업소득에서도 차이가 크게 났는데 유지 집단의 경우 월 평균 농업소득이 186만원이었던 반면 2차(이상) 귀농·귀촌 집단의 경우 69만원, 도시 역귀농 집단의 경우 40만원 정도였다. 중단집단의 경우 귀농·귀촌 당시의 소득을 답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집단의 현재 소득에 비해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나, 유지집단 또한 이주 후 5년 이내의 초기정착시기를 겪고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농업소득의 차이가 아주 크게 나고있다고 볼 수 있다.

유지집단의 경우 월 평균 농업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농가의 비율도 17.4%로 적지 않았다. 하지만 역시 소득이 없는 층도 27.3%를 차지하면서 양극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

7) '가게 운영이나 개인사업을 위해', '농촌과 관련한 직업이 있어서', '공동체마을을 설립하기 위해' 등 농촌을 터전으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이혼 후 친정부모와 함께 거주' 등 가정사와 관계된 경우, '도시생활이 힘들어서', '그냥 쉬고싶어서' 등 개인적인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다.8)

[표 2-8] 현 거주지에서 가족이 직접 버는 월 평균 농업소득(귀농·귀촌 유지집단 대상, %)

소득 규모	소득 없음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모름/무응 답	합계	평균 (만원)
가구수	152 (27.3)	92 (16.5)	71 (12.8)	129 (23.2)	97 (17.4)	15 (2.7)	556 (100.0)	186

[표 2-9] 귀농(귀촌) 기간 가족이 벌었던 월 평균 농업소득(귀농·귀촌 중단그룹 대상, %)

	소득 없음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사례수	평균(만원)
중단그룹 전체	37(49.3)	11(14.7)	11(14.7)	10(13.3)	6(8.0)	75(100.0)	63.5
2차 귀농	29(46.8)	11(17.7)	7(11.3)	9(14.5)	6(9.7)	62(100.0)	69.0
도시 역귀 농	8(61.5)	0(0.0)	4(30.8)	1(7.7)	0(0.0)	13(100.0)	39.9

[표 2-10] 귀농(귀촌) 후 최초로 농업소득을 얻은 시기(가구, %)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상	모름/무응답	합계
유지	189(48.6)	102(26.2)	53(13.6)	45(11.6)	0(0.0)	389(100.0)
2차귀농	15(45.5)	8(24.2)	2(6.1)	1(3.0)	7(21.2)	33(100.0)
도시 역귀 농	4(80.0)	1(20.0)	0(0.0)	0(0.0)	0(0.0)	5(100.0)

주 : 농업소득이 발생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함

농업소득이 발생한 농가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이주 후 1년 이내에 수입이 생겼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귀농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소득 발생 여

8) 전체적으로 농업소득이 월 1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18개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10,000㎡ 규모 이상의 면적에서 농사를 지었고 재배작목으로는 과수에 5개 농가, 축산과 채소에 각각 4개 농가, 특용에 2개 농가, 두류(콩과)에 2개 농가, 논벼에 1개 농가 등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부만큼 액수 또한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귀농유지 집단에 3년 이내 및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응답이 귀농 중단 집단보다 많은 이유는 과수 같이 첫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작물을 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9)

상대적으로 농업외 소득에는 집단별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귀농·귀촌 유지 집단의 월 평균 농업외 소득은 65만원 정도이며 이 중 60%는 농업외 소득이 없다고 답했다. 귀농·귀촌 중단 집단에서도 2차(이상) 귀농·귀촌의 경우 평균 약 월 약 57만원, 도시 역귀농인 경우 월 64만원 정도의 농업외 소득을 창출하지만 그 빈도가 현저히 낮아 아직 까지 보편화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표 2-11] 현 거주지에서 가구 구성원이 직접 버는 월 평균 농업외소득(귀농·귀촌 유지그룹 대상, %)

소득 규모	소득 없음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합계	평균 (만원)
가구수	334(53.4)	52(8.3)	65(10.4)	63(10.1)	111(17.8)	625(100.0)	65.4

[표 2-12] 귀농(귀촌) 당시 가구 구성원이 직접 벌었던 월 평균 농업외소득(귀농·귀촌 중단그룹 대상, %)

	소득 없음	150만원 미만	15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합계	평균 (만원)
중단그룹 전체	48(64.0)	6(8.0)	7(9.3)	6(8.0)	8(10.7)	75(100.0)	57.6
2차 귀농	41(66.1)	6(9.7)	6(9.7)	5(8.1)	4(6.5)	62(100.0)	56.7
도시 역귀농	7(53.8)	0(0.0)	1(7.7)	1(7.7)	4(30.8)	13(100.0)	63.5

9) 실제 귀농 유지집단 중 최초 농업소득 발생 시점이 3년 이내 및 3년이상이라고 답한 사람 중 가장 많은 35%가 과수작목에 종사한다고 밝혔다.

[표 2-13] 본인이 참여중인(혹은 참여했던) 농업외 소득활동(%)

	농산물 가공판매 관련 업무	농촌관광 관련 업무 (체험마을 사무장, 농가민박, 농가레스토랑 등)	지역사회 서비스분야 (방과후학교, 요양보호사 등)	지역사회서비스와 무관한, 소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건설노동, 상점점원, 식당서빙, 부동산 등)	농업 외 소득활동 없음	기타	합계
유지	49(7.8)	10(1.6)	30(4.8)	143(22.8)	385(61.5)	23(3.7)	626 (100.0)
2차귀농	1(1.6)	3(4.8)	6(9.7)	5(8.1)	42(67.7)	4(6.5)	62(100.0)
도시 역귀농	1(7.7)	0(0.0)	2(15.4)	2(15.4)	7(53.8)	1(7.7)	13(100.0)

6차산업화 활성화 강조와 함께 농촌 복지를 위한 농촌사회 서비스 관련 직종에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귀농·귀촌인의 농업외 소득활동은 대부분 지역사회와는 무관한 방식으로(건설노동, 상점 점원, 식당서빙 등) 이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도시에서와 좀 더 익숙한 업무를 통해 고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농업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세대주 외 다른 가족구성원의 농업외소득 창출 여부가 귀농·귀촌인 정착에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조사결과 가족구성원의 경우 귀농·귀촌인 세대주보다 더 농업외소득 창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 집단의 본인 및 본인 가족의 농업외 소득활동 비율은 2차 이상 귀농(귀촌) 집단이나 도시 역귀농 집단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본인 외 다른 가족구성원이 참여중인(혹은 참여했던) 농업외 소득활동(%)

	농산물 가공판매 관련 업무	농촌관광 관련 업무 (체험마을 사무장, 농가민박, 농가레스토랑 등)	지역사회 서비스분야 (방과후학교, 요양보호사 등)	지역사회서비스와 무관한, 소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건설노동, 상점점원, 식당서빙, 부동산 등)	농업 외 소득활동 없음	합계
유지	23(3.7)	7(1.1)	30(4.8)	108(17.3)	460(73.5)	626(100.0)
2차귀농	2(3.2)	1(1.6)	2(3.2)	3(4.8)	55(88.7)	62(100.0)
도시 역귀농	0(0.0)	0(0.0)	0(0.0)	1(7.7)	12(92.3)	13(100.0)

6) 귀농·귀촌 초기 생활과 정착실태 분석

귀농·귀촌에 있어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득을 창출해내면서 살 수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요소이나, 농촌생활에서의 문화적 적응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주 초기 농촌생활 적응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과 정착현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귀농인은 농사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귀농 후 농사에 자신감이 붙은 시기는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에 귀농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귀농인 중에서도 아직 농사에 자신감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32%로 가장 많았으며, 귀농 중단 집단에서도 자신감이 없다는 의견이 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치상으로는 귀농을 중단한 집단에서 도리어 귀농생활을 유지하는 집단보다 더 농사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농사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집단이 조금씩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먼저 농사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채널로 따졌을 때 귀농유지 집단의 경우 지역 토박이주민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이 22.3% 그 뒤를 이은 반면 도움을 준 사람이 없다는 의견도 15.8%로 적지 않았다. 한편 귀농 중단 집단에서도 지역 토박이주민을 통해 주로 정보를 얻는다는 의견이 26.7%로 가장 많았지만 그 비율 자체로 보면 유지 집단에 비해 훨씬 적은 수치다.

[표 2-15] 농사지식이나 정보와 관련해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람(%)

	읍면 및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선배 귀농인	지역 토박이주민	농협직원	이장 또는 반장	도움 준 사람 없음	기타 ¹⁰⁾	무응답	계
유지	124 (22.3)	53 (9.5)	232 (41.7)	1 (0.2)	20 (3.6)	88 (15.8)	35 (6.3)	3 (0.5)	626 (100.0)
2차귀농	13 (21.0)	5 (8.1)	19 (30.6)	0 (0.0)	2 (3.2)	5 (8.1)	5 (8.1)	13 (21.0)	62 (100.0)
도시 역귀농	2 (15.4)	0 (0.0)	1 (7.7)	0 (0.0)	1 (7.7)	3 (23.1)	1 (7.7)	5 (38.5)	13 (100.0)

어려움의 해소 방법에서도 집단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드러났다. 유지 집단은 지역의 친한 토박이주민에게 상담한다는 의견이 38.2%로 가장 많았던 반면 중단 집단의 경우

10) 대학 때 교수, 부모 및 친지, 마이스터대학 인맥, 품목별 모임 회원, 농약사 등이 포함되었다.

34.7%의 가장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상담할 사람이 별도로 없다고 답했다. 예상 외로 같은 귀농인에게 상담한다는 의견은 유지 집단과 중단 집단이 각각 17.1%, 12.0%로 드문 편이었다.

[표 2-16] 귀농(귀촌)초기 농사 및 농사 외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해소한 방법(%)

	지역의 친한 귀농(귀촌) 선배 및 동료에게 상담	지역의 친한 원주민에게 상담	이장에게 상담	인터넷 검색, 이메일 등 온라인 귀농귀촌인 상담창구 활용 상담	상담할 사람이 별도로 없었음	기타 ¹¹⁾	모름/무응답	계
유지	107 (17.0)	239 (38.2)	40 (6.4)	77 (12.3)	122 (19.5)	11 (1.8)	30 (4.8)	626 (100.0)
2차귀농	7 (11.3)	14 (22.6)	3 (4.8)	6 (9.7)	24 (38.7)	3 (4.8)	5 (8.1)	62 (100.0)
도시 역귀농	2 (15.4)	3 (23.1)	2 (15.4)	3 (23.1)	2 (15.4)	1 (7.7)	0 (0.0)	13 (100.0)

귀농·귀촌 유지 집단과 중단 집단 사이 지역사회 활동 여부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유지 집단의 경우 지역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전체의 56.1%로 적지 않았지만 활동 중인 사람들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농민단체, 동호회 등 지역 내 토박이주민과 어우러지는 조직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2차(이상) 귀농·귀촌자와 도시 역귀농자의 경우 각각 지역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64.5%와 76.9%를 차지해 유지 집단보다 좀 더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두 집단 모두 다른 활동보다는 농업기술센터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은 각각 25.8%, 23.1%로 적지 않았지만 토박이주민들과 어우러지는 조직활동 비율은 각각 11.3%, 7.7%로 유지 집단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본인이 참여중인(혹은 참여했던) 지역사회활동(% , 복수응답)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문해교육, 방법 등)	지역 내 토박이주민들과 함께하는 조직활동(농민단체, 동호회 등)	지역 내 귀농인 조직활동(귀농귀촌인 협의회, 후배귀농인 상담, 귀농교육 등)	농업기술센터, 군청 등이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	지역사회 활동 안 함	기타
-------------------------------	-------------------------------------	--	------------------------------	-------------	----

11)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도시에 사는 친구들, 사군청 및 면사무소 공무원, 품목별 연구회, 은사님, 부모 및 친인척, 타지역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 등과 논의, 전문서적 참고 등의 방법이 포함되었다.

유지	84(13.4)	142(22.7)	84(13.4)	152(24.3)	351(56.1)	1(0.2)
2차귀농	6(9.7)	7(11.3)	8(12.9)	16(25.8)	40(64.5)	0(0.0)
도시 역귀농	0(0.0)	1(7.7)	2(15.4)	3(23.1)	10(76.9)	0(0.0)

귀농·귀촌 세대주 외 가족들의 지역사회 활동 여부도 집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세대주 외 가족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율은 세대주보다도 떨어지는 편이었으며 이마저도 유지 집단에 속하는 가구의 가족들이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본인 외 가구원이 참여중인(혹은 참여했던) 지역사회활동(% , 복수응답)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문해교육, 방법 등)	지역 내 토박이주민들과 함께하는 조직활동(농민단체, 동호회 등)	지역 내 귀농인 조직활동(귀농귀촌인 협의회, 후배귀농인 상담, 귀농교육 등)	농업기술센터, 군청 등이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	지역사회 활동 안 함	기타
유지	55(8.8)	86(13.7)	44(7.0)	75(12.0)	470(75.1)	1(0.2)
2차귀농	2(3.2)	7(11.3)	5(8.1)	5(8.1)	49(79.0)	0(0.0)
도시 역귀농	0(0.0)	2(15.4)	1(7.7)	1(7.7)	11(84.6)	0(0.0)

이 밖에 최초 귀농·귀촌 한 뒤 2차(이상) 귀농·귀촌, 도시 역귀농의 결정 및 실행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2.11년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이주한 해에 다시 떠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귀농중단 케이스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착 초기단계로 볼 수 있는 이 기간 안에 적응에 성공한다면 2차(이상) 귀농·귀촌이나 도시 역귀농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표 2-19] 귀농·귀촌 중단집단의 실행 후 이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상	평균
가구수	35(46.7)	16(21.3)	14(18.7)	5(6.7)	5(6.7)	2.11년

5) 귀농·귀촌 중단 관련 의사결정의 주요 요인 파악

귀농·귀촌인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검출하기 위해 거꾸로 귀농·귀촌을 중단한 사람들의 이유 및, 귀농·귀촌 상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향후 이주하고 싶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도시 역귀농 샘플은 분석을 하기에 양적으로 부족해 경향성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일단 전체적으로 소득부족, 농업노동 적응의 어려움, 토박이주민과의 갈등, 외로움 등을 귀농·귀촌생활 중단의 가장 큰 이유로 꼽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0] 도시 역귀농·역귀촌자의 이주 이유(%)

	생활비 부족	농업노동 적응 어려움	기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피해 이동	자녀 교육에 제약이 덜한 곳으로 이동	외로움, 고립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을 위해	직장 관계	땅이나 집이 팔려서	개인 사정	귀촌 상황이 잘 맞지 않아서	집 계약 기간 만료	합계
가구수	2 (15.4)	2 (15.4)	2 (15.4)	0 (0.0)	2 (15.4)	1 (7.7)	1 (7.7)	1 (7.7)	1 (7.7)	1 (7.7)	13 (100.0%)

2차(이상) 귀농·귀촌자 중에는 작목변경, 기후나 토양 등 농사짓기 좋은 자연환경을 찾아 이주하는 경우가 40.3%로 가장 많았다. 도시 역귀농 집단과 달리 특징적인 것은 농업노동에 애착이 있으며, 소득부족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재차 옮기는 경우가 이 중 1.6%에 그친다는 부분이다. 도시 역귀농 집단과 2차(이상) 귀농·귀촌 집단은 귀농·귀촌 생활을 중단했다는 측면은 동일하지만 각 집단 자체의 특성이 아주 다르게 나타나며 비율 측면으로도 도시로 다시 떠나는 사람보다는 2차(이상) 귀농·귀촌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향후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때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귀농·귀촌인의 이탈을 막고,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환경에 도시화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표 2-21] 2차 이상 귀농·귀촌자의 재이주 이유(%)

	작목변경 등에 따라 농사짓기 좋은 곳으로 이동	기존 지역주민 과의 갈등을 피해 이동	지원정책 혜택이 더 많은 곳으로 이동	의료, 교통 등 생활환 경 편한 곳으로 이동	자녀교육 에 제약이 덜한 곳으로 이동	다른 귀농·귀 촌인이 많은 곳으로 이동	생활 비 부족	집을 새로 지어 이동	무응답 /기타 12)	합계
가구수	25 (40.3)	4 (6.5)	4 (6.5)	7 (11.3)	1 (1.6)	2 (3.2)	1 (1.6)	1 (1.6)	17 (27.4)	62 (100.0)

한편 현재 귀농·귀촌 유지집단 및 2차(이상) 귀농·귀촌 집단에 지금의 농촌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 의향을 물어본 결과 대부분인 90.4%가 앞으로도 지금의 농촌지역에 살겠다고 답했으며, 도시로 돌아갈 생각이거나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사가겠다고 답한 사람은 각각 전체의 4.9%, 4.7%였다.

귀농·귀촌 유지 집단과 2차(이상) 귀농·귀촌자 모두 지금의 동네에서 계속 살겠다고 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특징적인 것은 2차(이상) 귀농·귀농 집단을 귀농·귀촌 유지 집단과 비교했을 때 도시로 돌아갈 의향이 유지 집단보다 비율상으로 훨씬 적은 반면, 다른 지역으로 재차 이주할 의향은 약 5.5%p 높게 나타났다.

[표 2-22] 향후 현재 사는 농촌 거주 의향(%)

	앞으로도 지금의 농촌지역에 살겠다	도시로 돌아갈 것이다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사가겠다	합계
유지 +2차귀농 그룹	625(90.4)	34(4.9)	32(4.7)	687(100.0)
유지	566(90.6)	33(5.3)	26(4.2)	625(100.0)
2차 귀농	55(88.7)	1(1.6)	6(9.7)	62(100.0)

이들이 농촌에 계속 살고싶은 가장 큰 이유로 꼽은 요소는 도시보다 정서적으로 여유

12) 기타 의견으로는 ‘빈집 지원정책의 혜택이 끝나서’,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서’ 등 거처 관련 이유,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농업노동을 하고싶어서’, ‘노후설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창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 ‘하고자하는 농업 허가가 나지 않아서’ 등 일자리 관련 이유,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분가’, ‘결혼’,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등 가정사가 포함되었다.

로운 삶(38.6%),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환경(32.9%) 등이었다. 한편 2차(이상) 귀농·귀촌자 그룹 내에서는 도시에서와 비슷하거나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27.3%)는 의견이 가장 많아 귀농·귀촌 유지 집단과 다소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2차(이상) 귀농·귀촌 집단은 지역 주민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 문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농촌에 살고 싶다고 한 비율이 16.4%로, 귀농·귀촌 유지 집단(6.1%)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다.

[표 2-23] 농촌에 계속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

	도시에서와 비슷하거나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농업노동 자체가 적성에 맞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 문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도시보다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해	자녀 교육에 좋아서	무응답 및 기타	합계
가구수	55(8.9)	57(9.2)	38(6.1)	240(38.6)	204(32.9)	1(0.2)	1(0.2)	25(4.0)	621(100.0)
유지	40(7.1)	52(9.2)	29(5.1)	229(40.5)	191(33.7)	0(0.0)	0(0.0)	25(4.4)	566(100.0)
2차 귀농	15(27.3)	5(9.1)	9(16.4)	11(20.0)	13(23.6)	1(1.8)	1(1.8)	0(0.0)	55(100.0)

한편 도시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한 34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절반인 50%가 생활하기에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의료, 교통 등 생활환경 불편(20.6%)이 그 뒤를 이었다.

[표 2-24] 도시로 돌아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생활하기에 소득이 부족해서	농업노동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지역 토박이주민 들과의 갈등 때문에	의료, 교통 등 생활환경의 불편 때문에	외로움, 고립감 등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무응답	합계
가구수	17(50.0)	2(5.9)	2(5.9)	7(20.6)	2(5.9)	2(5.9)	2(5.9)	34(100.0)
유지	16(48.5)	2(6.1)	2(6.1)	7(21.2)	2(6.1)	2(6.1)	2(6.1)	33(100.0)
2차 귀농	1(1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한편 다른 읍면으로 다시 한 번 귀농·귀촌하고싶다고 답한 경우 귀농(귀촌) 지원정책 혜택을 더 많이 보유한 지자체로 가고싶다는 의견이 31.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농사짓기에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2-25] 다시 한 번 다른 지역으로 귀농·귀촌하고싶은 가장 큰 이유(%)

	작목변 경 등에 따라 농사짓 기 좋은 곳으로 이동	기존 지역주 민과의 갈등을 피해 이동	지원 정책 혜택이 더 많은 곳으로 이동	다른 귀 농·귀 촌인이 많이 사 는 곳으 로 이동	시골생 활에 관심	주택 구입 희망	집이나 땅이 팔려서	부모, 지 인 등 으 로부터의 분가를 위 해	기타	합계
가구수	8 (25.0)	3 (9.4)	10 (31.3)	1 (3.1)	1 (3.1)	1 (3.1)	1 (3.1)	3 (9.4)	4 (12.5)	32 (100.0)
유지	8 (30.8)	2 (7.7)	9 (34.6)	0 (0.0)	1 (3.8)	1 (3.8)	1 (3.8)	1 (3.8)	3 (11.5)	26 (100.0)
2차 귀농	0 (0.0)	1 (16.7)	1 (16.7)	1 (16.7)	0 (0.0)	0 (0.0)	0 (0.0)	2 (33.3)	1 (16.7)	6 (100.0)

귀농·귀촌 유지 집단에서는 향후 강화되었으면 하는 귀농·귀촌인 지원으로 농창업비용 지원(31.8%)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농업생산물판로확대를 위한 지원(21.9%)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표 2-26] 귀농·귀촌 유지 집단의 이주 후 귀농(귀촌)인 지원 중 가장 강화되었으면 하는 분야

	현장에 도움되는 영농교육(전문기술, 경영관리, 실습) 확충	지역내 농민과 1:1 멘토링 지원	농창업 비용 지원	경지임 대차 및 휴경지 알선 지원	농업 외 일자 리 창출 및 알선 지원	지역 토박이 주민과의 관계형성 지원(집들 이, 모임, 회의 등)	농업생 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기타/모 름/무응 답	합계
가구수	46 (7.3)	30 (4.8)	199 (31.8)	62 (9.9)	62 (9.9)	23 (3.7)	137 (21.9)	67 (10.7)	626 (100.0)

한편 귀농 중단 집단을 대상으로 초기 농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물어본 결과 경영자
금의 부족이 가장 힘든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금의 용자방
식을 대신할만한 보완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7] 귀농·귀촌 중단경험 집단의 이주초기 농사 관련 가장 어려웠던 부분(%)

	어려웠던 점 거의 없음	재배 및 사육기술 터득	기계작업 및 수리 기술 터 득	판 매 의 어려움	농지 구 하는 과 여 려움	경 영 자 금 부족	기 타 ¹³⁾ / 모 름 / 무 응답	합계
가구수	9(12.0)	12(16.0)	4(5.3)	7(9.3)	7(9.3)	14(18.7)	22(29.3)	75(100.0)
2차 귀농	7(11.3)	10(16.1)	4(6.5)	7(11.3)	6(9.7)	12(19.4)	16(25.8)	62(100.0)
도시 역귀농	2(15.4)	2(15.4)	0(0.0)	0(0.0)	1(7.7)	2(15.4)	6(46.2)	13(100.0)

6) 귀농·귀촌 연령별 정착현황 및 실태 분석

13) 이장 등 토박이주민과의 관계, 장비/기계 부족, 일손부족 등이 기타의견에 포함되었다.

앞서 언급했듯 40대 이하의 귀농·귀촌자가 꾸준한 증가추세인 만큼 귀농·귀촌은 더 이상 베이비붐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며 이들의 농촌 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령별 귀농·귀촌 경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다. 연령별로 다양한 항목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28]과 같이 나이대별 귀농·귀촌 유지 및 중단 정도는 비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50대 이상의 귀농·귀촌자의 귀농·귀촌생활 유지 비율이 40대 이하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28] 연령별 귀농·귀촌 현황(%)

	귀농·귀촌 유지	2차(이상) 귀농·귀촌	도시 역귀농	계
39세 이하	58(86.6)	8(11.9)	1(1.5)	67(100)
40대	125(87.4)	15(10.5)	3(2.1)	143(100)
50대	212(91.0)	15(6.4)	6(2.6)	233(100)
60대	175(89.3)	18(9.2)	3(1.5)	196(100)
70세 이상	51(89.5)	6(10.5)	0(0.0)	57(100)
연령 미확인	5(100)	0(0.0)	0(0.0)	5(100)

준비자금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40대 이하 청장년이 귀농·귀촌할 경우 은퇴를 대비하는 50대나 60대에 비해 금전적인 여유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났다. 40대 이하의 준비자금의 전체 귀농·귀촌자 준비자금 평균에 비해서도 다소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70세 이상의 귀농·귀촌자보다는 높은 액수를 기록했다.

[표 2-29] 연령별 준비자금(%)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 1억 이하	1억 초과 2억 이하	2억 초과	모름 /무응답	계	평균 (만원)
사례수		129 (18.4)	181 (25.8)	137 (19.5)	120 (17.1)	105 (15.0)	29 (4.1)	701 (100.0)	12,363.9
연령	39세 이하	10 (14.9)	18 (26.9)	15 (22.4)	10 (14.9)	10 (14.9)	4 (6.0)	67 (100.0)	11,468.4
	40대	31 (21.7)	39 (27.3)	20 (14.0)	25 (17.5)	21 (14.7)	7 (4.9)	143 (100.0)	11,589.0
	50대	42 (18.0)	62 (26.6)	47 (20.2)	36 (15.5)	38 (16.3)	8 (3.4)	233 (100.0)	13,233.8
	60대	40 (20.4)	47 (24.0)	40 (20.4)	34 (17.3)	28 (14.3)	7 (3.6)	196 (100.0)	12,002.4
	70세 이상	6 (10.5)	14 (24.6)	14 (24.6)	14 (24.6)	6 (10.5)	3 (5.3)	57 (100.0)	11,331.5
	미확 인	0 (0.0)	1 (20.0)	1 (20.0)	1 (20.0)	2 (40.0)	0 (0.0)	5 (100.0)	30,400.0

농업소득의 경우 유지/중단 집단 모두에서 40대 이하가 70대 이상 연령대 다음으로 저조한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양쪽 50~60대 농가의 농사소득 평균이 40대 이하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아예 농사소득을 내지 못하는 농가도 30%를 넘나드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초기정착 시기를 겪었거나 겪고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농업외소득은 모든 집단에서 전체 평균이 월 100만원 이하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40대 유지집단의 경우 농업외소득 평균 액수가 월 96만원 정도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연령대에서는 농업외소득이 없다고 답한 농가가 50%를 훌쩍 넘는 데 비해(60대 제외) 48.8%가 농업외소득이 없다고 답해 비교적 농업외소득 창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연령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중단집단의 경우 여전히 40대 이하의 농업외소득 평균이 50대 이상 연령대 평균보다, 특히 50대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표 2-30] 유지집단의 현재 연령별 농업소득(월별, %, 농사 안짓는 농가 제외)

		소득 없음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계	평균 (만원)
사례수		152 (27.5)	92 (13.8)	71 (14.3)	128 (22.8)	97 (17.5)	15 (4.2)	556 (100.0)	190.8
연령	39세 이하	13 (25.0)	7 (13.5)	5 (9.6)	15 (28.8)	10 (19.2)	2 (3.8)	52 (100.0)	180.2
	40대	107 (30.8)	33 (19.6)	21 (11.2)	12 (18.7)	20 (16.8)	18 (2.8)	107 (100.0)	177.5
	50대	52 (27.5)	26 (13.8)	27 (14.3)	43 (22.8)	33 (17.5)	8 (4.2)	189 (100.0)	187.5
	60대	38 (23.9)	30 (18.9)	20 (12.6)	42 (26.4)	29 (18.2)	0 (0.0)	159 (100.0)	222.8
	70세 이상	16 (35.6)	8 (17.8)	5 (11.1)	8 (17.8)	6 (13.3)	2 (4.4)	45 (100.0)	129.4
	미확 인	0 (0.0)	0 (0.0)	2 (50.0)	1 (25.0)	1 (25.0)	0 (0.0)	4 (100.0)	206.2

[표 2-31] 중단집단의 과거 귀농·귀촌시 연령별 농업소득(월별, %, 농사 안짓는 농가 제외)

		소득 없음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계	평균(만 원)
사례수		37 (49.3)	11 (14.7)	11 (14.7)	10 (13.3)	6 (8.0)	75 (100.0)	63.5
연령	39세 이하	4 (44.4)	1 (11.1)	2 (22.2)	2 (22.2)	0 (0.0)	9 (100.0)	89.4
	40대	14 (77.8)	3 (16.7)	1 (5.6)	0 (0.0)	0 (0.0)	18 (100.0)	7.3
	50대	8 (38.1)	3 (14.3)	4 (19.0)	3 (14.3)	3 (14.3)	21 (100.0)	98.7
	60대	9 (42.9)	4 (19.0)	2 (9.5)	4 (19.0)	2 (9.5)	21 (100.0)	70.2
	70세 이상	2 (33.3)	0 (0.0)	2 (33.3)	1 (16.7)	1 (16.7)	6 (100.0)	67.7

[표 2-32] 현재 귀농·귀촌 유지집단의 연령별 농업외소득(%)

		소득 없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계	평균(만원)
사례수		334 (53.4)	52 (8.3)	65 (10.4)	63 (10.1)	111 (17.8)	625 (100.0)	65.4
연령	39세 이하	34 (58.6)	3 (5.2)	6 (10.3)	5 (8.6)	10 (17.2)	58 (100.0)	51.8
	40대	61 (48.8)	14 (11.2)	14 (11.2)	16 (12.8)	20 (16.0)	125 (100.0)	96.4
	50대	127 (60.2)	16 (7.6)	18 (8.5)	21 (10.0)	29 (13.7)	211 (100.0)	53.0
	60대	82 (46.9)	12 (6.9)	21 (12.0)	20 (11.4)	40 (22.9)	175 (100.0)	72.1
	70세 이상	28 (54.9)	5 (9.8)	6 (11.8)	1 (2.0)	11 (21.6)	51 (100.0)	36.1
	미확인	2 (40.0)	2 (40.0)	0.0 (0.0)	0.0 (0.0)	1 (20.0)	5 (100.0)	38.3

[표 2-33] 귀농·귀촌 중단집단의 과거 연령별 농업외소득(%)

		소득 없음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계	평균(만원)
사례수		48 (64.0)	6 (8.0)	7 (9.3)	6 (8.0)	8 (10.7)	75 (100.0)	57.6
연령	39세 이하	7 (77.8)	1 (11.1)	0 (0.0)	0 (0.0)	1 (11.1)	9 (100.0)	12.5
	40대	14 (77.8)	1 (5.6)	3 (16.7)	0 (0.0)	0 (0.0)	18 (100.0)	36.4
	50대	11 (52.4)	3 (14.3)	1 (4.8)	2 (9.5)	4 (19.0)	21 (100.0)	78.1
	60대	15 (71.4)	0 (0.0)	3 (14.3)	1 (4.8)	2 (9.5)	21 (100.0)	43.0
	70세 이상	1 (16.7)	1 (16.7)	0 (0.0)	3 (50.0)	1 (16.7)	6 (100.0)	192.0

농사에 대한 자신감과 관련해, 농가 중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경우(축산 등)를 제외하면 자신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유지·중단 집단 모두 39세 이하에서 자신감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과거 농사 경험 유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4] 귀농·귀촌 유지집단의 연령별 농사에 자신감이 붙은 시기(%)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상	아직 자신감 없음	농사를 지은 적 없음	합계
사례수		63 (11.3)	39 (7.0)	51 (9.2)	61 (11.0)	59 (10.6)	131 (23.6)	152 (27.3)	556 (100.0)
연 령	39세 이하	6 (11.5)	5 (9.6)	4 (7.7)	5 (9.6)	4 (7.7)	15 (28.8)	13 (25.0)	52 (100.0)
	40대	15 (14.0)	6 (5.6)	12 (11.2)	7 (6.5)	8 (7.5)	26 (24.3)	33 (30.8)	107 (100.0)
	50대	15 (7.9)	13 (6.9)	18 (9.5)	23 (12.2)	22 (11.6)	46 (24.3)	52 (27.5)	189 (100.0)
	60대	21 (13.2)	13 (8.2)	10 (6.3)	21 (13.2)	18 (11.3)	38 (23.9)	38(23.9)	159 (100.0)
	70세 이상	6 (13.3)	1 (2.2)	7 (15.6)	4 (8.9)	5 (11.1)	6 (13.3)	16 (35.6)	45 (100.0)
	미확인	0 (0.0)	1 (25.0)	0 (0.0)	1 (25.0)	2 (50.0)	0 (0.0)	0 (0.0)	4 (100.0)

[표 2-35] 귀농·귀촌 중단집단의 연령별 농사에 자신감이 붙었던 시기(%)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상	아직 자신감 없음	농사를 지은 적 없음	기타	합계
사례수		11 (14.7)	5 (6.7)	10 (13.3)	12 (16.0)	4 (5.3)	15 (20.0)	10 (13.3)	8 (10.7)	75 (100.0)
연령	39세 이하	0 (0.0)	0 (0.0)	1 (11.1)	1 (11.1)	1 (11.1)	3 (33.3)	2 (22.2)	1 (11.1)	9 (100.0)
	40대	4 (22.2)	2 (11.1)	3 (16.7)	2 (11.1)	2 (11.1)	2 (11.1)	2 (11.1)	1 (5.6)	18 (100.0)
	50대	3 (14.3)	1 (4.8)	3 (14.3)	3 (14.3)	1 (4.8)	4 (19.0)	3 (14.3)	3 (14.3)	21 (100.0)
	60대	3 (14.3)	2 (9.5)	1 (4.8)	6 (28.6)	0 (0.0)	4 (19.0)	3 (14.3)	2 (9.5)	21 (100.0)
	70세 이상	1 (16.7)	0 (0.0)	2 (33.3)	0 (0.0)	0 (0.0)	2 (33.3)	0 (0.0)	1 (16.7)	6 (100.0)

귀농·귀촌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지원분야로는 농창업비용 및 농업생산물 판로 확대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요소로 꼽혔다.

[표 2-36] 귀농·귀촌 유지집단의 강화 희망 지원분야(%)

		현장에 도움되 는 영농교 육(전문 기술, 경영관 리, 실습 등) 확충	지역내 농민 과의 1:1 멘토링 지원	농창업 비용 지원	경지 임대차 및 휴경지 알선 지원	농업외 일자리 창출 및 알선 지원	지역 토박이 주민 과의 관계 형성 지원 (집들이 , 모임, 회의등)	농업 생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기타	모름 /무응 답	합계
사례수		46 (7.3)	30 (4.8)	199 (31.8)	62 (9.9)	62 (9.9)	23 (3.7)	137 (21.9)	14 (2.2)	53 (8.5)	75 (100.0)
연령	39세 이하	4 (6.9)	3 (5.2)	22 (37.9)	4 (6.9)	7 (12.1)	1 (1.7)	13 (22.4)	0 (0.0)	4 (6.9)	58 (100.0)
	40대	9 (7.2)	7 (5.6)	35 (28.0)	10 (8.0)	15 (12.0)	3 (2.4)	31 (24.8)	4 (3.2)	11 (8.8)	125 (100.0)
	50대	16 (7.5)	9 (4.2)	72 (34.0)	21 (9.9)	19 (9.0)	11 (5.2)	41 (19.3)	4 (1.9)	19 (9.0)	212 (100.0)
	60대	13 (7.4)	9 (5.1)	51 (29.1)	21 (12.0)	16 (9.1)	7 (4.0)	40 (22.9)	3 (1.7)	15 (8.6)	175 (100.0)
	70세 이상	4 (7.8)	2 (3.9)	19 (37.3)	5 (9.8)	5 (9.8)	1 (2.0)	9 (17.6)	2 (3.9)	4 (7.8)	51 (100.0)
	미확 인	0 (0.0)	0 (0.0)	0 (0.0)	1 (20. 0)	0 (0.0)	0 (0.0)	3 (60.0)	1 (20. 0)	0 (0.0)	5 (100.0)

7) 소결

(1) 귀농·귀촌 유지 집단과 중단 집단의 차이점

사실상 기존 귀농·귀촌자 중 90% 이상이 이 상태를 유지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 그룹의 특성을 요약하거나 특별히 유형화시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귀농·귀촌 중단집단과 비교되는 요인을 중심으로 정리하자면 이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초기 준비자금을 비롯해 이주 이후의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등을 취하는 비율과 액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업소득도 높게 나타났으며 농업외소득 중 지역 내 일용직 노동이나 상점 점원 등을 병행하는 비율도 훨씬 높았다. 이는 생활하기에 적은 농업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물질적인 요인이나 하드웨어만이 귀농·귀촌 유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물질적인 요소만큼 중요한 요소로 파악된 것이 가구형태였다. 혼자 귀농·귀촌할 경우 부부 등 가족형태로 이주할 때보다 이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밖에 토박이주민과의 교류 또한 귀농·귀촌 유지 집단에서 좀 더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역사회 내 동아리 등의 활동은 유지 집단이나 중단 집단 모두 아주 활발하지는 않고 다만 농업기술센터 등의 귀농교육 참여율만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2) 귀농·귀촌 중단의 원인

귀농·귀촌 중단의 원인은 2차(이상) 귀농·귀촌자와 도시 역귀농자가 다르게 나타난다. 현재 도시 역귀농자의 경우 소득 부족, 힘든 농업노동, 지역 토박이 주민들과의 갈등 등이 원인이며 귀농·귀촌중인 사람 중에서도 도시 역귀농을 원하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소득부족이었다. 한편 2차(이상) 귀농·귀촌은 이와 달리 작목 변경 등의 이유로 작목이 잘 자라는 환경을 찾아서 움직였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귀농·귀촌 생활에 실망하고 이전에 살던 도시환경으로 돌아가는 실패와, 농촌생활은 좋지만 좀 더 농사를 잘 지어 보기 위해 다른 지역을 물색하는 실패는 의미가 다르다.

소득 부족, 농업노동, 주민간 갈등과 같은 주요 이주 원인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요인은 아니며 이미 귀농·귀촌 관련 논의들을 통해 충분히 언급되어 왔다. 그렇다면 귀농·귀촌 희망자는 소득부족에 대응할만한 수익구조를 미리 수립해놓거나, 교육을 통해 농업노동의 경험을 충분히 겪어보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그러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귀농·귀촌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이고 진지한 접근을 독려하지 못하는 시스템상의 문제도 존재한다. 정책적 접근은 이러한 귀농·귀촌 중단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귀농·귀촌 초기 지원정책 수립에의 함의

귀농·귀촌 초기에 겪는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소득부족, 농업노동의 어려움, 농촌지역 내 문화적 충돌 등을 크게 꼽을 수 있으며 이번 설문을 통해서도 그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귀농·귀촌 후 다시 도시로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난 사람들의 경우 최초 이주 후 이탈까지 2~3년 정도가 소요되며 머문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상에 비춰볼 때 귀농·귀촌 초기의 지원정책은 지자체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 시기는 귀농·귀촌인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다.

귀농·귀촌 초기 정착 시기에 이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주자가 귀농·귀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를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해 배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2차 이상의 귀농·귀촌이 도시 역귀농보다 더 많으므로 이 두 그룹 각각의 요구를 인지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가 50~60대 귀농·귀촌자에 비해 준비자금,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농업에 대한 자신감 등 다양한 요소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귀농·귀촌인의 느끼는 어려움들은 농업과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정착지원자금 등 일회성의 비용 지원을 하기보다는 우선 그러한 구조적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작게나마 하나씩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귀농·귀촌에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좀 더 높은 소득을 창출하고 농업의 가치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귀농인 인증을 시행하는 방법, 귀농·귀촌과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돕는 민간단위 마을 중간지원조직 개설에 협조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2. 귀농·귀촌 중단 사례 심층분석 : 경험자 3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1) 조사목적

정부나 지자체 차원, 매스컴 등을 통해 귀농·귀촌 성공사례가 다수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 귀농·귀촌 현실을 들여다보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 게 현장에서의 의견이다. 하지만 귀농·귀촌을 중단한 사례는 해당자 대부분이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조용히 이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귀농·귀촌의 경험은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재차 이주

했거나 도시로 돌아온 사례를 경험의 순서대로, 특히 그 과정에서의 애로점을 중심으로 청취함으로써 귀농·귀촌 정착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에 좀 더 현장중심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초기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조사방법

지역 현장의 귀농·귀촌자, 지역 혹은 귀농·귀촌 중간지원조직, 귀농·귀촌인 교육기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귀농·귀촌을 시도했다가 다시 떠나온 경험이 있는 30명을 추천받았다. 이 과정에서 귀농 경험자와 귀촌 경험자, 은퇴 귀농·귀촌과 청년 귀농·귀촌, 최대한 다양한 지역에서의 귀농·귀촌 경험자의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했다. 심층면접은 1회 방문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면접시간은 평균 1시간30분이었다.

3) 심층면접 개요

심층면접은 다음 3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시 역귀농(귀촌) 사례는 30건 중 13건, 2차(이상) 귀농(귀촌) 사례가 17건이었다. 연령은 30대 3명, 40대 10명, 50대 11명, 60대 4명, 70대 2명 등이었다. 이 중 귀농만 경험한 사례가 15건, 귀촌만 경험한 사례가 5건, 귀농·귀촌을 모두 경험한 사례가 9건, 귀촌·귀어를 경험한 사례가 1건 등이었다. 가구 구성으로 볼 때 완전히 ‘나홀로 귀농(귀촌)’ 했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간 사례가 10건이며 이 밖에 다른 20개 사례는 한 때나마 부부단위, 혹은 자녀나 부모님과 함께 이주한 경험이다.

이들이 귀농·귀촌지를 떠나게 된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심층면접 내용들을 토대로 귀농·귀촌 단계별 경험을 애로점 위주로 보여주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농가 단위의 노력이 시도되었다면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설명한다. 귀농 경험자와 귀촌 경험자 사이 구체적 경험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귀농 사례와 귀촌 사례의 경험을 구분해서 정리한다.

[표 3-1] 심층면접 대상자 30인 목록 및 특성

	성함(연령)	종류/횟수	기간	동반 귀농·귀촌가구 및 관계	가구내 경제 활동인원	초기 투자비용	당시 부업 여부/종류	가장 큰 중단원인
1	이OO(46)	귀어 1회	1998~2000년	4명(부부, 자녀 2명)	2명	1억원 이상	사교육(귀촌)	1차 : 경영난 2차 : 남편 일자리 이주
		귀촌 1회	2000~2007년					
2	김OO(54)	귀농 1회	2012~2013년	2명(본인, 어머니)	1명	1억5천만원	없음	낮은 도시접근성
		귀농 1회	2013~					
3	이OO(60)	귀농 1회	2005~2009년	1·2차 : 2명(부부) 3차 : 1명(본인)	1명	6억원 이상	목공예	1차 : 투자 부지 재계약 불발 2차 : 마을 부지확보 실패
		귀농 1회	2009~2010년					
		귀농 1회	2010~					
4	장OO(48)	귀농 1회	2003~2005년	4명(부부, 자녀 2명)	2명	6천만원	없음	친환경농사가 힘든 지역
		귀농 1회	2005~					
5	김OO(50)	귀농 1회	2013~2014년	1명(본인)	1명	2천만원	없음	토지 매입과정에서 문제 발생
		귀촌 1회	2014~					
6	장OO(37)	귀촌 1회	1999년	1차 : 2명(부부) 2차 : 3명(부부, 자녀 1명) 3차 : 4명(부부, 자녀 2명)	1명	3천만원	없음	1차 : 오지생활 적응 어려움 2차 : 육아의 어려움 3차 : 남편의 장기출장으로 인한 외로움과 고립감
		귀촌 1회	2001년					
		귀촌 1회	2002년					
		귀촌 1회	2011~					
7	장OO(53)	귀농 1회	1993~1998년	4명(부부, 자녀 2명)	2명	-1천5백만원	원고작성	잡은 개발로 농지확보 어려움
		귀농 1회	1999~					
8	김OO(49)	귀농 1회	2002~2004년	3명(부부, 자녀 1명)	2명	1억원	없음	1차 : 귀농·귀촌인 마을 지원 지 자체로 이주 2차 : 부상으로 농사가 힘들어짐
		귀농 1회	2004년					
		귀촌 1회	2004~					

9	강OO(51)	귀농 1회	2000~2001년	2명(본인, 자녀 1명)	1명	2천만원	없음
		귀농 1회	2001~				
10	김OO(49)	귀농 1회	2008~2010년	1명(본인)	1명	7천만원	SNS 마 관련 출
11	한OO(51)	귀촌 1회	1999년	1차 : 2명(부부) 2차 : 3명(부부, 자녀)	1명	4천만원	원고작성
		귀농 1회	1999~2004년				
12	노OO(54)	귀농 1회	2012~2014년	4명(부부, 장인, 장모)	2명	4억5천만원	없음
13	송OO(49)	귀농 1회	2010~2013년	2명(부부)	2명	1억원 미만	없음
14	김OO(57)	귀농 1회	2011~2012년	2명(부부)	2명	1천만원 미만	일용직
15	박OO(56)	귀촌 1회	2009~2012년	2명(부부)	2명	3천만원 미만	없음
16	임OO(71)	귀농 1회	1998~2001년	2명(부부)	2명	1억원	타농가 노동
		귀촌 1회	2011~				
17	이OO(71)	귀농 1회	2009~2013년	2명(부부)	2명	3억1,500만원	없음
18	김OO(66)	귀농 1회	2011~2013년	2명(부부)	2명	1억원 이상	없음
19	김OO(52)	귀농 1회	2012~2014년	1명(본인)	1명	1억원	없음
20	변OO(53)	귀농 1회	2010년	1명(본인)	1명	없음	없음
21	양OO(67)	귀농 1회	2011~2014년	1명(본인)	1명	1억원	없음
22	박OO(58)	귀촌 1회	2013~2014년	2명(부부)	-	2억원	없음
23	김OO(46)	귀농 1회	1998~2003년	1차 : 4명(부부, 자녀 2명) 2차 : 1명(본인)	1차 : 2명 2차 : 1명	5천만원	없음
		귀촌 1회	2004~2005년				

24	안OO(35)	귀농 1회	2010~2012년	4명(부부, 자녀 2명)	1명	3천만원	병원 직원
		귀농 1회	2012~				
25	최OO(40)	귀농 1회	2008년	1명(본인)	1명	-	2차 : 두 조, 납품 촌)
		귀촌 1회	2011년				
26	서OO(47)	귀농 1회	2000~2013년	1명(본인)	1명	-	없음
		귀농 1회	2013~				
27	반OO(45)	귀촌 1회	2011년	1명(본인)	1명	-	산 촌 유 터 교 촌)
28	송OO(62)	귀농 1회	2011년	1차 : 1명(본인) 2차 : 2명(부부) 3차 : 1명(본인) 4차 : 1명(본인)	2차(2명) 제 외 모두1명	7천만원	없음
		귀농 1회	2011~2013년				
		귀농 1회	2014년				
		귀농 1회	2014년				
29	이OO(37)	귀촌 1회	2012~2014년	1명(본인)	1명	5천만원	IT회사 (귀촌)
30	권OO(46)	귀촌 1회	2002~2003년	1명(본인)	1명	-	없음
		귀촌 1회	2014~				

4) 심층면접 내용분석

(1) 귀농 중단사례 주요내용

귀농 경험자에게는 귀촌과 달리 농사와 관련한 어려움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농사부지 매입부터 집 신축 혹은 빈집 구하는 과정, 농사 실무, 판매와 마케팅, 수익 창출 등 농사과정 전반에 예상되는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귀농 포기 경험자가 말하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농업기반 관련 어려움

귀농 경험자의 경우 농사부지 매입이나 빈집을 구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은퇴자금 투자 방식으로 1억원 이상 규모의 액수를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부지 매입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비교적 적은 액수의 돈으로 귀농하는 사람에게도 제한된 예산 내에서 농사부지나 빈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했다.

불안정한 농업기반이 귀농 중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례는 8건이다. 이 중 3건은 대규모 농사부지 매입 및 계약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경우, 4건은 임차한 농사부지 주인의 뜻이나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밀려난 경우, 1건은 농사에 부적절한 토지 지형(경사지)으로 인한 어려움 끝에 포기한 경우였다. 매매 계약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빌려 쓰던 농지를 내줘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의 귀농이나 도시로의 역귀농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농사부지의 질적인 문제를 매입 후 알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지 못하기도 했다.

이OO(60)씨는 과거 2차례 귀농을 거쳐 지금의 지역에 정착했지만 1차귀농시 6억여원의 투자금을 손해봤다. 소속되어 있던 야생화 동호회에서 방문한 한 지역의 풍광에 매료되어 해당 지역 이장과 만나게 되었으며 공동체 마을 및 야생화 단지 조성 논의를 하게되었다. 개인적으로 입주민을 모집하고 논밭 40만평을 이장으로부터 임대받았으며 야생화단지 조성에 쓰일 곤드레, 산나물 종자대금으로 3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모집한 11개 가구가 함께 거주할 터를 닦는 과정에서 당시 소개해준 이장이 입구의 땅을 사서 시세보다 비싼 가격(평당 30만원)을 요구했고, 이듬해 빌린 논밭에 대한 임대 재계약조차 해주지 않았다. 결국 종자대금을 손해본 것은 물론 마을 입주 계약까지 파기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금

을 이OO씨가 개인 돈으로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이후 다른 지역으로 아내와 함께 이동해 빠가사리, 다슬기 등을 잡아다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지만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아내와도 이혼하고 지금의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김OO(50)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귀농교육을 통해 만난 사람 10여명과 함께 같은 지역으로 귀농해 영농조합을 꾸리고 하우스를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단체로 귀농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체 2만여평의 부지를 임대하기로 했으며 계약금 수억원은 이 중 한 명이 전액 빌려주다시피 해서 일단 지불했다. 김OO씨의 친언니가 해당 지역에서 이미 귀농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언니에게 소개 받은 지역주민의 땅을 임대계약하게 된 것이다. 영농조합법인을 위한 출자금은 1명당 평균 1천만원 정도였다. 김OO씨는 함께 귀농한 사람들과 계약금을 지불했던 땅 일부에 자리잡고 있던 하우스 한 개 동에서 피망과 파프리카를 재배했지만 그 사이 임대계약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집단간 잡음이 생기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한 차례 했던 하우스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마지막에 피망 다섯 상자만 지인에게 나눠줬을 뿐이었다. 현재 계약금을 많이 투자한 사람이 소를 제기해 관련 건이 재판중이어서 결과를 기다리고있는 상황이다. 김OO씨 개인적인 손해는 2천만원 정도라 손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지만, 친언니를 통해 알게된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다는 자책감 등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지금은 홀로 다른 지역에 귀촌중이다.

박OO(64)씨는 아내 친구의 형제들인 지역 주민들을 통해 2만3천평 규모의 임야를 원래 가격보다 500만원 싸게 판다고 소개받아 별 의심 없이 지역 내 법무사를 통해 임야를 구입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주인이 2명이며 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확인해보니 아내 친구의 형제들이 아내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받아 다운계약, 등기분할 등의 업무를 법무사에 맡겨 진행하면서 해당 임야의 절반을 형제 중 한 명의 명의로 돌려놓은 사실을 알게되었다.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진행했고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지만 패소했다. 아내는 특히 충격이 심해 우울증에 시달렸다. 아내 친구의 형제들이 사과라도 하면 귀농생활을 이어가려고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가까운 집에 살기 힘들 것 같아 현재 서울에 머물고 있다. 민사소송을 다시 준비중이라 땅을 팔지는 못했고 소송이 끝나면 추후에 팔 계획이다.

귀농은 아니나 귀어생활에서 비슷한 손해를 본 사람도 있다. 이OO(46)씨는 김가공공장 및 기계 등의 설비 일체를 한꺼번에 구입해 지역으로 이주했지만 잦은

기계고장 등의 문제로 공장을 운영하면 할수록 빛이 늘어가는 악순환을 반복해야만 했다. 부부 모두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대출금을 10년간 갚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사부지를 임대받아 사용할 경우 불안정한 농업기반에 따른 어려움은 더 클 수 있다. 여러 농지의 주인한테 조금씩 빌리거나 농지를 돌려줘야 할 때마다 다른 농지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나 지속적으로 머무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편 임대한 땅의 경우 작목의 가격이 오르거나 주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본인의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땅을 내줘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었다. 물론 임대계약을 정확히 하지 않거나 따로 임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은 귀농인에게 있겠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도 계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농사부지를 도로 가져가는 경우도 시골마을에서는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다.

장OO(53)씨는 도시에서 1,500만원을 빚지고 경기도 고향으로 귀농했다. 농사 짓던 땅이 개발계획으로 인해 매립되고 공장으로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2년 이상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다.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터전이 없어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힘들었다. 결국 친환경유기농산물 판로개척이 원활한 지역을 소개받아 2차귀농했으며 지금은 자신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정착해 살고있다.

송OO(49)씨는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다 지역에 있는 친척에게 마늘농사를 권유받아 귀농했다. 당시 원하는 규모의 땅을 사기에는 자금이 부족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계약서를 쓰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시기 마늘 값이 많이 오르자 땅을 빌려준 주인은 계약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땅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했다. 노인이 대부분인 시골에서는 계약서가 효력 발휘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들면 동네 사람들 얼굴을 앞으로 안 볼 생각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다. 땅 문제 때문에 한 군데에서 계속 지은 규모는 1천여평에 불과하고 나머지 1~2천평은 계속 임차했다 내주고 다시 임차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옮겨다녔다. 땅 문제만 없었어도 지역에 계속 있고 싶었는데 이로

인해 지역에 정을 붙이기까지 힘들어져 젊은 귀농인들간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다른 지역으로의 귀농을 준비중이다.

서OO(47)씨는 국유지 1,500평 경작권을 가진 노인 한 분에게 권리금을 지불하고 이에 대한 임대권을 받아서 농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부지가 정부의 4대 강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3년 이상 진행했고, 결국 국책사업 법적조항에 따른 보상을 받아 군 내 다른 지역으로 땅을 매입해 이주했다. 당시 근방에서 함께 유기농업을 하던 생산자조합 농가들이 개인 형편에 따라 뿔뿔이 흩어지면서 조합 또한 유기농시장 경쟁에서 밀리는 어려움을 겪었다.

안OO(35)씨는 지역 내 땅을 임대받은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땅을 빌렸기 때문에 계약을 구두로 진행했다. 좋은 땅이라고 소개를 받았지만 전기나 물도 안 들어와 겨울에는 방치했고, 멧돼지가 난입하며 묘목 도난도 심심찮게 있었다. 결정적으로 땅의 실제 주인이 재계약에 응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른 땅을 찾아 이주하게 되었다. 친환경인증을 위해 필요한 농지원부는 땅에 대한 계약서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 정식 계약과정이 필요하기도 했다.

한편 한OO(51)씨는 귀농 시기 빨리 자리를 잡고싶어서 당시 비교적 싼 가격에 나온 땅을 집과 함께 매입했지만 스스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땅에는 맹지가 많고 진입로가 적절치 않은 데다 경사가 가팔라서 농사를 짓기 굉장히 위협했다. 산 위에서 농사를 짓느라 고생이 많았고, 결국 첫해 이후에는 농사규모를 줄여나갔다.

② 농사 실무 관련 어려움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귀농인 대상 기술교육을 강조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귀농인 중 농업기술 자체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 이 중 대부분이 어릴 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더라도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지역의 농민들에게 자문을 구해 농사를 짓는 데 큰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서의 교육은 특정 작목을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고 종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농사기술 부족으로 농사가 잘 되지 않아 문제를 겪은 사례는 총 30사례 중 2건이었다.

김OO(50)씨는 계약중인 땅 안에서 하우스 2동을 빌려 피망을 생산했다. 5~6명 정도가 함께 농사를 지은 것이었지만 모두가 파프리카와 피망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피망을 파프리카와 비슷한 조건에서 키워버렸다. 결국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고 냉해를 입어 뿌리 성장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잎도 다 떨어졌다. 100~200상자 물량이 생산돼야 함에도 최종적으로 5상자만 수확하게 되어 아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말았다. 파프리카와 피망의 생육온도가 다른데 의욕만 갖고 뛰어든 결과라고 본다.

송OO(62)씨는 유기농업을 직접 해보자는 목표로 농창업을 시도했다. 고추가 주요 작목이었지만 친환경농법을 고집하다보니 5번 고추농사를 짓는데 5번 모두 탄저병을 겪었다. 결국 나중에는 고추의 친환경재배는 포기하고 탄저병 약을 쳐서 키웠는데, 이 때문에 습진도 오고 호흡기 질환도 걸렸다고 생각한다. 당시 농창업비용 용자를 받았는데 고추농사가 계속 잘 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그 빚이 남아있어 부담을 주고 있다.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2명의 귀농자 외에 대부분의 귀농자들은 당시 생산한 작물의 품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농사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고된 농업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현재 농업교육이 생산기술만을 위주로 단편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나 노동량, 노동환경 등을 충분히 인식시켜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귀농을 접은 사례도 드물게나마 관찰된다.

김OO(54)씨는 밭 1,400평 정도를 매매해 고사리, 감나무 및 채소를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고자 했지만 농약을 안 하다보니 잡초 때문에 예상보다 일손이 많이 달렸다. 땀벌에서 홀로 밭일을 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침 일찍 일을 시작했는데, 날이 아주 더울 때에는 쉬면서 일을 하다보니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었다. 냉해 때문에 감나무도 열리지 않아 다른 지역의 버섯재배사시설로 2차귀농했다. 버섯의 경우 생육온도는 18~20도이기 때문에 농사 환경이 이전보다 쾌적하고, 특용작물이다보니 소득창출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노OO(54)씨는 부부와 장인, 장모가 다 같이 귀농해 하우스농사를 지었다. 투자금액이 용자까지 4억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투입비용을 최소화했어야 했고 비싼 농기구를 구입하지 않다 보니 지나치게 육체적으로 무리하게 되었다. 도시생활을 했던 장인과 장모도 농사를 지으면서 고생이 많았고, 결정적으로 노OO씨 본인이 허리를 다쳐 수술을 하면서 농사를 더 지을 수 없게 되었다.

김OO(57)씨는 1,200평 규모의 과수원에서 아내와 함께 사과농사를 지었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항상 할 일이 많았고 농번기에는 인력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추가 지출이 되면서 합당한 소득을 올리기 힘들었다. 인터넷 판매도 해보고는 싶었지만 일을 마치고 별도 시간을 내서 SNS를 관리할 여유가 별도로 나지 않았다.

한편 김OO(66)씨는 쉬엄쉬엄 일을 하면서 용돈도 별 생각으로 감나무 농사에 뛰어들었는데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수확 후 판매가 끝난 겨울에는 또 다시 나무에 퇴비를 뿌리고 각질을 벗겨서 해충을 없앤 뒤 유향약재를 쳐야하는 등 실 틈 없이 일이 주어졌다. 결국 그 정도 강도로 일을 한다면 도시에서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회의가 들었다. 여기에 태풍을 맞아 농작물을 거의 팔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가 심각했다. 그 전에 농협의 권유로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상금으로 90만원을 받은 게 전부여서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다.

김OO(49)씨는 농업이 아닌 한봉에 종사했다가 2010년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토종별집단폐사의 피해를 봤다. 농사와 달리 첫 해부터 수익이 발생했고 군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매월 지급되어 2년간 일을 유지했지만 3년째 토종별 집단폐사로 별들이 죽어가자 다시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상처를 입고 도시로 복귀했다.

③ 판매와 마케팅 관련 어려움

귀농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사례는 22개였으며 중단했던 사례를 기준으로 생산량의 일부에 대해서라도 독자적인 판매망을 적극적으로 갖춰나간 사례는 5개였다. 이와 별도로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협에 납품할 수 있었던 3개 사례, 농협공판장이나 중간도매업자 등에게 생산품 대부분을 맡기는 4개 사례를 제외하고는 마케팅이나 판매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첫 귀농지에서 겪은 시행착오나 준비

성 결여, 또는 가정 내 맞벌이 인력이나 부업 보유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판매수익이 예상보다 훨씬 떨어지자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기보다는 주변 지인에게 알음알음으로 팔거나 아예 공짜로 주면서 자가에서 소비하는 방식이 많았다. SNS 등 다른 판로를 개척하려다 실패한 사례도 있다.

장OO(48)씨는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 귀농을 했지만 빈집을 찾아 들어간 동네 주변이 인삼밭이었고 약을 치는 농가가 많아 뜻하던 방식의 농업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1년만 지내다 바로 옮길 생각으로 거주했다. 임대한 논 일부에서 벼농사를 지었고, 귀농하자마자 가까운 생산자모임 회원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출하처는 있었지만 생산량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아 수익을 따로 창출하지는 못했다.

강OO(51)씨 또한 빈집 매물을 찾아 본래 생각했던 지역과 가까운 곳으로 떠났는데, 어린 자녀와 단 둘이 귀농해서 양육에 주로 신경을 쓰다보니 상업적으로 농사를 짓지는 못했으며 아이를 맡아줄 시설도 주변에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염두에 두고 육아에만 전념했다.

임OO(71)씨는 산세가 좋고 한적하면서 저렴한 집과 근처 땅을 사서 귀농했기 때문에 사전에 재배환경이나 작목 선택, 소득창출 방법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 일조 조건이 나빠 적합한 작목을 선택하기 힘들었고 벼농사를 일부 했지만 판매할 정도의 물량이 되지 않았다. 대부분 자가소비하거나 지인에게 주거나 모임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었으며 고정된 판로는 없었다.

한편 양OO(67)씨는 지역에서 많이 하고있거나 권장하는 작물보다 호두, 체리, 피칸 등에 관심이 많아서 3년 전에 본래 논이었던 토지를 일부러 개량해서 심었고 지금 재배가 되고 있다. 하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에게 함께 귀농하자고 설득하는 데도 실패하면서 현재 밭을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다. 지역에서 대단위로 하고 있거나 권장하는 작목의 작목반에 소속된다면 묘목비용도 지원받고 농협수매로 저렴하게나마 판로가 보장될 수 있는데 혼자 '독불장군'처럼 실행에 옮겼다가 손해가 커졌다고 생각한다. SNS 판매 등에 의욕도 있었지만 고통으로 인터넷 화면을 10분만 쳐다봐도 눈이 아파서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

④ 투자비용에 비해 낮은 수익으로 인한 어려움

귀농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다 소득부족이 대표적인 것으로 본다. 처음 농지선정부터 농사기술이나 판매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익창출 측면에서 실패하는 귀농인이 많고, 이는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농사 외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극복하기 힘들게 마련이다.

농업에 필요한 다른 요인들은 대부분 충족시켰거나 해당하지 않으나 수익창출에는 실패했고, 이것이 주요 귀농 중단 의 원인이 된 사례는 22개 귀농경험 농가 중 8개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이 농가들 모두가 다시 2차(이상) 귀농을 하지 않고 도시로 역귀농했다는 점이다. 수익창출을 중요한 목적으로 상정하는 귀농농가들의 경우 특히 농사 수익구조를 인지하고 나서 다시 도전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김OO(57)씨는 과수원을 운영하다 이를 중단하게 된 고향친구의 제안으로 아주 낮은 임대료로 3,000평 규모 사과 과수원을 임대해 1년간 귀농생활을 하다가 도시로 복귀했다. 과거부터 지역에 들어오는 지정된 도매업자에 판매를 위탁한 결과 소득이 형편없이 낮았고 농한기에는 부부가 함께 농촌에서조차 일용직 일자리를 구해 무리하게 일을 하다보니 농촌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가 밀려와 1년 만에 이를 청산했다.

노OO(54)씨는 한국 기업의 중국 주재원 생활 20년 생활에 지쳐 귀농을 택했다가 2년만에 털고 나왔다. 아내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귀향을 원하는 장인장모와 함께 장인장모의 고향으로 가자고 아내를 설득, 퇴직금을 투자해 귀농한 사례인데 본인과 아내 뿐 아니라 장인 장모까지 농사에 투입되었지만 농협수매자금이 턱없이 낮아 연간 순수익이 500만원도 채 되지 않다보니 생활을 더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고된 농사로 허리수술까지 받았다. 지금까지 당시 매입한 부지와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장인과 장모는 귀농지에 머물고 있지만 노씨는 일자리를 구해 아내와 함께 서울로 왔다.

이OO(56)씨 또한 퇴직금을 투자해 2,900평 규모 밭농사를 지었지만 5해 쯤에 이를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게 되었다. 결정적인 이유는 아내와의 불화와 이혼이었지만 이러한 계기를 제공한 것은 고된 농사일에 비해 그에 대한 보상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이었다. 그는 재배작목의 일부는 도매시장에, 일부는 지인을 통해 판매하고 농산물 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에는 직거래 장터에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판로를 모색했지만 농자재구입 등 경영비의 추가지출에 비해 턱없이

낮은 농산물 구매가격의 타격을 받았고, 부부가 서로 과다한 노동력을 소모하다 보니 상호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지면서 생활고까지 겹쳐 이혼을 하게 되었다.

최OO(40)씨는 한 농업교육기관의 멘토농가에 들어가 1년간 전통 유기농업을 배우며 일했고 멘토농가의 기존 판로나 제철채소 공급 꾸러미 등을 통해 본인의 생산물의 판매도 가능했기 때문에 농사 일반에 대해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사규모가 크지 않아 항상 수익이 지출을 메우는 수준밖에는 되지 않았고, 이듬해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 씨앗과 모종에 드는 비용 및 겨우내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힘들 것으로 보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주위 과수원 등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했지만 이마저 안정적이지는 않아 어려움을 느끼고 도시로 돌아왔다.

송OO(62)씨는 농업경영과 농업노동 경험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목사 일을 하면서 농목회를 통해 알게된 인맥들의 농장에 고용되어 현장에서 농업노동 경험을 해보고자 했다. 하지만 고용되었던 사회적기업, 한우농가, 젓소농가 등이 전부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단기간만에 그만두곤 했다. 직접 경영할 때에는 고추농사를 하면서 친환경 농업의 원칙을 지키려다 매해 탄저병이 와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생산물의 판매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또는 도시 지인 및 기존 인맥을 통해 100% 직거래했지만 수익창출의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트랙터, 씨앗, 거름, 농자재, 하우스 및 농번기 인력조달 등 영농비에 투자가 지속됐기 때문이었다.

변OO(53)씨는 드물게 농창업이 아닌 농업노동자로 취업한 경우이며 3개월만에 도시로 복귀하게 되었다. 다니던 직장의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상태에서 자녀 학비조달 문제 때문에 제주에서 돈을 벌자는 생각에서 홀로 귀농했다. 투자할만큼의 큰 돈이 없어 제주시 귀농지원센터에서 소개받은 한 인턴 고용 농가에 월 80만원을 받고 일한다는 조건으로 들어갔지만, 해당 농장주는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이유로 월 50만원만 지급했으며 한 달이 지나자 바로 그만두라고 통보했다. 인턴농가는 있지만 이에 대한 사후관리나 검증 제도가 갖춰져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의 소개를 받아 고용된다 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다. 부부가 함께 일을 하거나 가족이 함께 이주하지 않는 이상 홀로 귀농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느꼈다. 일방적인 해고에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소득 창출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귀농을 시도한 사람들이다. 농업기술보다 농가의 현실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한 때라는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반면 농업소득 부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한 이들(p.36 사례 4와 7 등)은 귀농·귀촌에 대한 의지가 초기부터 뚜렷했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정착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다시금 2차, 3차 귀농을 하고 있다. 친환경재배 등으로 기존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농사수익의 부진을 메우기 위해 부업을 하거나 배우자에게 별도 고정수입이 있기도 하다.

(2) 귀촌 중단사례 주요내용

귀촌사례의 경우 생활에서 각각의 사례에서 겪는 애로점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겪은 어려움을 단계별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귀농에 비해 부지 매입이나 주거 마련에서 힘든 점은 없었지만 지역 일자리를 구하기까지의 단계, 비전이 없거나 급여가 낮은 일자리로 인한 어려움 등의 내용이 관찰되었다.

반OO(45)씨는 자영업을 하다 경영난으로 이를 정리하고,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 도시에서 삭막하게 살기 싫다는 생각을 했다. 산촌유학센터 교육담당자 모집에 이에 응시해 채용되면서 홀로 귀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산촌유학의 취지해 공감해 해당 일을 하게 되었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지만 지역의 기관이어서 수익구조나 복리후생이 취약해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를 느꼈다.

권OO(46)씨는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껴왔고, 저녁시간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귀촌을 결심했다. 처음에는 특정 운동을 위한 수련원에 등록하면서 귀촌의 기회가 생겼고 해당 지역에서 강사 자리를 찾아 취직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온라인으로 구직 공고를 찾아서 많은 지역을 돌았는데 정착 구직자 측에서 도시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놀기 위해 지역에 왔다는 시각으로 보면서 배려없이 대할 때가 많아 상처를 받았다.

최OO(40)씨는 과거 귀농생활을 하면서 고립감을 느껴왔지만 서울과 멀지 않은 곳에서 귀촌생활을 하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지역 내 한 영농조합법인의 두부가공 및 납품 업무 담당자로 취직하면서 귀촌했다. 하지만 두부가공과 납품을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허리디스크가 심해져 다른 업무로의 교체를 원했지만 대체인력도 없는 데다 다른 일자리까지 없어 좌절했던 적이 있다.

(3) 귀농·귀촌 생활 전반에서의 사회·문화적 어려움

초기 정착과정에서 경제적요인 못지않게 관건인 것이 도시지역과는 상반되는 농촌지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분위기에 적응하는 문제이다. 이로 인해 지역 토박이주민과의 갈등도 생기지만 같은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의견충돌이 나타나곤 한다.

지역 토박이주민들의 경우 도시의 생활습관을 농촌에서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귀농·귀촌인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귀농·귀촌인은 도시생활에서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방식의 논의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하지만 귀농·귀촌 중단 사례에서는 거꾸로 귀농·귀촌인들이 지역 토박이주민들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불편을 겪은 정황이 종종 관찰된다.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니 호의적으로 대해줬다는 의견도 있어, 지역 분위기나 개인별 성향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함께 귀농·귀촌한 가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중요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부부가 뜻을 함께 해 귀농·귀촌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배우자 한 명은 귀농·귀촌을 원하지 않아 초기에는 그 중 1명이 우선 먼저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함께 귀농·귀촌할 경우, 여성의 사회활동이 크게 제한되어 귀농·귀촌을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경우 교육문제 또한 이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곤 한다.

① 토박이주민/귀농·귀촌자 사이 괴리와 갈등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토박이 주민과 귀농·귀촌자 사이 갈등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이OO(60)씨는 1차귀농시 귀농·귀촌인은 지역에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배려 차원에서 지역 노인들에 봉사했지만 그러다보니 토박이 주민들은 귀농·귀촌인의 도움을 권리로 생각하고 부리기 시작했다. 농사를 도와달라며 꼭 비탈경사지의 힘든 부분의 농사만 부탁하고, 항상 호박이나 옥수수 등을 나눠드리다 물량이 달려 못 드리면 “왜 안갖다주냐”며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김OO(57)씨는 지역주민이라서라기보다 노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다. 사생활에 참견이 많은 것은 물론 서운한 일이 생기면 시비를 걸고,

서로 다 이야기하고 홍보는 일이 허다했던 것이다. 특히 아내가 좀 더 힘들어했다. 도시라면 상대하지 않으면 되지만 농촌마을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울리려고 했지만 어울리면 어울리는대로 힘들고 지루했던 것이다.

안OO(35)씨는 지역의 첫 블루베리농가로서 친환경재배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주위의 시선을 받으면서 스스로 고립감도 많이 느껴왔다. 특히 친환경 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어르신들의 간섭이 심했기 때문에 더 오기가 생겨서 농사를 지었다. 작목에 대해 함께 논의할 사람이 없어서 더 외롭기도 했다. 하지만 2차귀농으로 지역을 옮기면서 농업기술센터 수업을 함께 수강한 젊은 농부들과의 커뮤니티가 생겼고 이전보다 인맥이 많아졌다. 김OO(66)씨는 감 수확 시 인부를 구하기 위해 부녀회장 등 지역 내 명망있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 항상 사례를 하곤 했다. 그냥 부탁한다고 보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내오는 인부들도 다른 지역 토박이 농가 일을 다처리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조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관공서에서도 토박이 주민에는 쉽게 해주는 것을 귀농인에게는 차별적으로 온갖 원리원칙을 다 적용시켜서 힘들게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 밖에 지역에서 농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농기계 등을 구입할 때 이를 담당하는 지역업체는 귀농인들에게 시가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귀농인은 지역 주민들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김OO(52)씨는 50평 하우스 4동 및 기계 등 인프라 구축에 1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후 시세를 따져보니 하우스 4동에 4,000만원을 투자했지만 2,500만원이면 충분했다. 기계와 차량 등도 지나치게 비싸게 샀다. 김씨에게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다.

이를 지원금의 폐해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OO(66)씨와 송OO(62)씨는 특정 시설 설치자금의 50%가 지원될 경우 지역 내 업자가 가격을 일부러 높게 책정한 뒤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않는 지원이라고 주장한다.

직접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지는 않았지만 귀농·귀촌인 스스로가 느끼는 괴리감도 적지 않았다.

장OO(48)씨는 원하던 지역에 빈집이 나왔다는 소식만 듣고 1차로 이주했지만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여서 사생활 보호에 취약했던 데다가 주변에 젊은 사람이나 귀농·귀촌인은 한 명도 없고 노인들만 살고있어 아내가 특히 적응하기 힘들어했다. 귀농인이 많이 거주하는 친환경농업마을로 이주해 정착한 상태인데 1차 거주지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다.

한OO(51)씨의 경우도 토박이주민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마찰은 없었지만 마을의 유교적인 분위기와 주민들의 배타적인 눈빛 등을 오며가며 경험하고 100일 만에 다른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반면 지역주민들과 별다른 마찰 없이 원활하게 적응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OO(46)씨는 산골 귀촌시 절에서 사회사업을 하는 남편과 함께 문화행사 등에 참여하면서 동네 토박이 주민들과의 정을 쌓았다. 폐교반대 운동 등을 통해 학교를 살리는 등 지역에 도움되는 일들을 나서서 하자 토박이 주민들도 이들 내외를 좋아하고 잘 어울려지내게 되었다. 다만 집을 비웠을 때나 자고있을 때 자신들이 친환경으로 짓는 텃밭에 제초제를 뿌려주고 가는 토박이주민들이 있어, 이러한 부분은 사생활침해라고 느낀 적도 있다.

한OO(51)씨는 2차귀농지역에서 농사를 할 때 트랙터가 없어 애를 많이 먹었다. 사자니 돈이 많이 들고, 빌리자니 한씨의 농지가 경사지역이라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랙터를 끌고 온 한 토박이주민에게 예쁜 간식상을 차려서 대접했더니 그 주민이 “이런 건 처음 받아본다”며 감동을 표했고, 그 이후로는 항상 도움을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었다.

박OO(56) 씨는 본래 농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농촌 생활 적응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도움을 받은 케이스이다. 함께 귀농한 인근 가구 2곳은 골프를 치면서 휴양을 즐기는데 반해 염소와 화초답을 키우며 항상 토박이 주민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씩씩하게 대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귀농·귀촌인의 경우 값을 치러야만 임대 가능한 밭을 무상으로 받아 그 곳에서 농사를 일부 지을 수 있었다.

② 가족과의 문제

함께 귀농·귀촌한 가정이나 이로 인해 떨어져 사는 가정, 특히 부부간의 갈등은 중요한 귀농·귀촌 실패 요인이다. 특히 부부간 갈등이 있을 경우, 배우자가 귀농을 원치 않는 가운데 한 명이 이를 강행했다가 소득창출에까지 실패하게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징적인 부분은 소득창출이 아닌 이상추구나 농촌생활의 가치에 목적을 두고 귀농·귀촌을 택한 경우 대부분 부부가 사전 합의를 이뤄내 가족간의 갈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지만,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귀농한 경우 가족간 갈등이 중요한 포기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관찰되었고 이 경우 다른 곳으로 재이주하기보다 대부분 이전에 살던 도시로 역귀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OO(56)씨는 퇴직금을 투자해 농업기반을 마련하고 2년 차에는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순수익도 올렸지만 그만큼 고된 농사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지속적인 부부갈등 끝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이씨는 이혼 후 도시에서 다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박OO(56)씨는 귀농을 실습해본다는 생각으로 1년간 염소사육(12마리)과 양계(관상닭 100여마리)를 시도했지만 규모가 작았고 대규모로 시도하지 않는 이상 돈벌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렇게 시도를 해보는 기간동안 소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박씨의 아내는 지역의 모텔에서 숙식하며 청소일을 하면서 버텼지만 낮은 지역에서 부부가 떨어져 사는 어려움을 못 견디고 도시로 복귀하게 되었다.

김OO(57)씨는 친구에게 헐값에 임대받은 과수원을 운영했지만 부지런히 일해도 생활비 벌기가 힘들어 김씨는 김씨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일용직을 구해 일하곤 했다. 김씨의 경우 고향친구들이 곁에 있고, 토박이주민과의 마찰이 있어도 함께 술을 마시며 풀곤 했는데 아내는 새로운 친구를 소개시켜줘도 워낙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즐겁게 어울리지 못했다. 이는 소득부진만큼 귀농을 포기하게 만든 큰 요인이 되었다.

반OO(45)씨는 홀로 귀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족과의 괴리가 심해졌다고 생각했다. 초기에는 사업실패에 대한 절망감으로 떠나왔지만 가족과 떨어져서 일을 하다보니 만날 시간이 없었고 그동안 아내와 아들은 도시의 문화에 아주 잘 적응하고 있었다. 소득 문제 때문에 도시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귀촌 생각이 있는데, 아내와 아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 거리감을 느낀다.

③ 도시생활에 대한 향수와 고립감

최OO(40)씨는 30대 중반에 이주했는데 또래집단이 별로 없어 문화적 고립감을 느꼈다. 또 서울에 있을 때에는 자연과 함께 있고 싶었는데, 1~2달 지나니 도시생활에 대한 향수도 생겼고 경북 봉화에서 서울 친구들을 만나러 자주 왔다 갔다하다 보니 차비가 많이 지출되어 문제였다.

권OO(46)씨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친구들과 잘 만나지 못해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다. 귀촌생활 초기에는 서울로 자주 가서 친구들을 만났지만, 지역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친구들이 멀리 사는 사람의 편의를 잘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되었다. 지역에서는 움직이기 힘든 평일 시간에 약속을 잡아버리면 자연스럽게 모임에 참여할 수 없게 될 때 고립감을 느꼈다.

도시 지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거꾸로 오히려 귀촌 후에 도시의 인맥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경험담도 있다.

이OO(37)씨는 관광지에서 2년간 귀촌해 있으면서 서울에 살 때보다 오히려 서울 친구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다. 도시에서 살다가 여행을 때 이씨를 항상 찾기 때문이다. 이씨 입장에서는 귀촌생활을 하는 동안 해당 지역에서도 새롭게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고, 도시에 있던 친구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더 좋은 경험이었다.

한OO(51)씨는 생산물을 팔기보다 항상 지인들에게 나눠주었다. 도시에서는 '도시빈민'에 가까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도 항상 사주기보다는 얻어먹는 입장이었고, 받는 것이 습성이 되면서 굴욕감도 많이 느꼈다. 하지만 귀농생활을 하면서는 스스로 생산한 것을 가족, 친지, 친구 등에게 나눠주면서 줄 수 있다는 데에서 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4) 지원정책관련 요인

심층면접 대상인 귀농귀촌자 중 상당수가 2009년 농식품부의 귀농귀촌종합대책이 마련되기 전 이를 실행에 옮겼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고,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 지원정책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2009년 이후 귀농귀촌을 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면접대상이

정책적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김OO(54)씨는 농가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았으나 이사비용 지원은 이미 마감되어 받을 수 없었다. 노OO(54)씨는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구입지원사업에 따른 용자지원을 받았다. 김OO(49)씨는 지자체 차원의 부지 조성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정부에서 기획한 항목이 아니라 김씨를 주축으로 이들이 직접 제안해 채택된 내용이다.

다음은 이들이 초기정착시기 경험한 주요 문제점들이다.

① 부지/주택의 매입/임대/신축 문제 : 귀농귀촌 초기정착단계에 나타나는 어려움 중 대표적인 것은 부지나 주택매입 혹은 임대 관련 문제다. 지역의 땅과 집에 관한 정보는 도시민으로서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귀농귀촌인이 많다. 하지만 상단의 경제적 요인에서 설명했듯 지역내 지인을 믿고 소개받은 경우에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 임대해 손해보는 경우나 문제가 있는 땅을 소개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빈집을 수리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역의 빈집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 도시민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빈집을 구해 귀농한 면담 대상자 대부분이 지역의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은만큼 해당 정보가 일원화되어있지 않고 불평등하게 제공되는 게 사실이다. 한편 농지의 경우 초기단계부터 매입할 경우 보통 해당지역 토박이 주민보다 비싼 값에 사게 되지만 귀농 후 지역내에서 신뢰를 쌓은 뒤 지역 토박이주민에게 거의 무상으로 임대를 받는 경우도 관찰되어, 정착하자마자 땅을 매입하려고 들면 오히려 과도한 정착자금 투자로 인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② 지원창구의 비일원화 : 상주, 고창 등의 지역에서 귀농귀촌TF를 꾸림으로써 귀농귀촌 관련 업무를 일원화시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관련 업무들이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은 일원화되지 않은 지원체계 때문에 귀농귀촌자가 직접 정책적 지원에 대해 상세하게 문의하려면 직접 각 담당 과를 들러야 한다는 불편이 있다.

③ 일회성 비용지원 문제 : 지방비로 이뤄지는 귀농귀촌지원의 경우 정착지원금, 빈집수리비 등으로 1회에 그친다는 아쉬움이 있다. 귀농귀촌실패자 일부는 귀농인이 지역에 정착할 때까지 월급을 주는 방식의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는 실제 강원도에서 2015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농부월급제와 비슷한 내용이다.

④ 중간지원조직의 사후관리 부재 문제 : 군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귀농귀촌 관련 관차원의 지원조직이 직접 농가-귀농인 연계 알선 등의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연계로 끝날 뿐 이후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특정한 지원제도에 의한 연계가 아닐

경우 귀농인이 정해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이 경우 호소할 수 있는 곳도 명확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농산업 인턴제의 경우도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다기보다는 선도농가의 양심에 모든 책임을 맡기는 구조라는 데 문제가 있다.

⑤ 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과열 : 현재 농식품부의 귀농귀촌지원정책에 대한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귀농 경험자들이 정착 초기단계에 해당 지원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정착지원금, 빈집수리비 등이 각 시군 예산 안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귀농귀촌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홍보되는 측면이 있다. 매스컴을 통한 성공사례 소개와 과대포장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다. 귀농귀촌인을 많이 유치하는 것보다 이주 후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좀 더 현실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⑥ 판로관련 지원정책의 문제 : 고소득작물을 하지 않는 귀농귀촌인에게 판로는 소득창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친환경 유기농법을 지향하는 귀농자가 많아 직거래, 생협출하 등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귀농귀촌인도 있다. 하지만 그 정도로 특화되지 않은 귀농귀촌인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정부의 지원정책 중 귀농귀촌인 교육은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을 뿐 전문적으로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지에 대한 마케팅 기술에 대한 내용이나 지원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도시 인맥에 의존해 직거래를 하는 농가의 경우 간혹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강매'라고 생각하는 귀농인도 있는만큼 좀 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⑦ 귀농인 위주 지원정책 : 현행 농식품부의 지원정책, 특히 초기정착과 관련한 지원정책 중 귀촌인을 위한 지원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하지만 농업소득만으로 온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로 수익을 내기는 기존의 농민들에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인구유입을 위해 귀농귀촌자 유치를 필요로 한다면 귀농인 뿐 아니라 귀촌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귀촌인 일자리발굴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Ⅲ 귀농·귀촌 정착관련 지원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1. 국내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체계와 내용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크게 중앙정부와 시군단위에서 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농식품부 차원에서는 대부분 귀농 관심 및 실행단계와 관련이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 이밖에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인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의 경우 선정된 각 시군 단위에서 도시민 유치를 목적으로 이를 운영하기 때문에 관심단계 사업으로도 볼 수 있으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정착과정에 필요한 사업들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2013년부터 시작된 농식품부의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지원사업 또한 일부 시군에서 정착단계 귀농인을 위한 지원책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실습지원, 고용노동부의 농산업인턴지원 같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위주의 교육 또한 정착단계 지원정책으로 볼 수 있다.

각 시군 차원에서 이뤄지는 기술교육·이주비·주택수리비·창업자금지원 등은 정착단계의 대표적인 지원정책이다. 중앙정부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지원시스템을 단계별로 명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현행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단계별 지원내용 및 대상

단계	구분	지원내용	대상(자격)
1단계 (관심)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농촌진흥청)	상담전화 1544-8572, 홈페이지 http://www.returnfarm.com · 종합정보 제공, 상담(방문)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251개 시군별 상담센터와 연계	예비 귀농 · 귀촌 인 등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농식품부)	· 2014. 6. 20 ~ 22(3일간) · SETEC(서울무역전시장) · 정부, 지자체 등 귀농 · 귀촌 관련 종합정보제공	예비 귀농 · 귀촌 인 등
	도시민농촌 유치지원 (농식품부)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활동 활성화 지원 · 40개 시군, 3년간 6억원 지원 · 상담, 교육, 귀농체험소개, 빈집정보 제공 등	도시민유치를 희망하는 시군 (공모사업)
2단계 (실행)	귀농 귀촌 교육 농식품부	· 대학, 민간단체 등 36개 기관 44개 과정(공모사업) · 3주 ~ 2개월 과정 · 기초소양(농촌이해), 농업경영(기술, 판매 / 유통 등), 농촌 비즈니스, 주택 및 농지 등 창업과정 운영	귀농 · 귀촌 관심 및 희망자 등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4,000명 · 기초 영농교육 (이론 및 실습)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신축자금 (농식품부)	· 농지, 축사, 농기계 구입 및 시설비(최대 2억원 용자) :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주택구입 및 신축(최대 5천만원 용자) : 연리 2.7% (65세 이상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신규 농업인
3단계 (정착)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 (농식품부)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입주)하면서 농촌체험, 교육 등 귀농인 인큐베이터 사업 지원 *2013년도(제천, 영주), 2014년도(홍천, 구례)	예비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촌진흥청)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 습득 · 실습지원 5개월 이내(120만원 지급) · 신청 : 시군농업기술센터 560명, 104시군	5년 이내의 귀농인 (신규농업인)
	농산업 인턴지원 (고용노동부)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 습득 · 인턴훈련 6개월 임금의 1/2 지원 (80만원 한도)	미취업자, 농고, 농대 졸업자 등 (만15~44세)
	지자체 지원 (각 지자체)	기술교육, 이주비, 주택수리비, 창업자금 등	귀농인 등

자료 :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표 2>와 같이 농식품부 지원 중 가장 큰 예산비중(연간 700억원)을 차지하는 항목은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신축 자금 지원, 귀농·귀촌 교육 지원으로, 주로 정착이후 단계보다는 관심 및 실행 단계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표 4-2]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 귀농·귀촌 지원사업 예산 현황

구분		'13년 예산	'14년 예산	비고
합계		752억원	859억원	
농업이차 보전사업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600억원	700억원	용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귀농·귀촌 교육	21.1억원 - 2,000명	24억5천만원 - 2,350명	민간 경상 보조
	도시민 귀농·귀촌 교육	35.8억원 - 35개시·군	40억9천만원 - 40개시·군	지자체 ·민간경상보조
	귀농·귀촌창업박람회	5억원	4억원	민간경상보조

	(‘14.6.20~22)			
	귀농인 농업창업 보육센터(신규)	-	10억원 - 1개소	지자체자본보조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80억원 - 2개 시군	80억원 - 2개시군	지자체자본보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2014)

지자체지원정책 또한 아직까지는 일회성을 띠는 것이 많다. 도에서는 도차원의 지원조례에 따라 주로 시군단위 귀농·귀촌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¹⁴⁾ 중앙정부 귀농·귀촌지원에 따른 예산 매칭 이외에 도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집행해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정보제공이나 홍보를 제외한 실질적인 자금지원이나 새로운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시행하는 곳도 일부 존재하나 그 비중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시군단위에서 주로 담당하는 빈집수리비나 정착지원금 등의 항목 예산을 좀 더 보강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도 한다.¹⁵⁾ 도단위에서는 대부분 홍보, 정보제공과 같이 시군 인구유치를 위한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다.

현행 지원정책에 대해 일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신축자금 지원에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투여하나 사실상 이는 용자지원이어서 담보를 제시해야만 용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귀농인들에게는 정작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농업종사자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특성까지 더해져 자체적인 예산을 대거 편성해 귀농·귀촌지원에 할애하기는 힘들다는 애로를 겪는다. 이 때문에 시군단위 예산지원조차 빈집수리비나 정착지원금 등 일회적 지원이 많으며 대부분 예산부족 문제로 귀농자 중 극히 일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이다.¹⁶⁾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농식품부의 도시민유치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시군은 3년간 6억원의 관련 예산을 보장받기 때문에 각 시군 입장에서는 귀농·귀촌 관련 예산부담을 덜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안에서 귀농인 사회적일자리 프로그램이

14)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등 9개 도단위에서 귀농·귀촌 지원조례를 수립한 상태이나 실질적인 지원과 관련해 큰 의미를 지니지는 못하고 있다. 홍보설명회, 초청프로그램, 지역안내, 빈집정보제공, 홈페이지 개발 등, 예비 귀농·귀촌인이 시군단위로 접근하기 이전 단계에서 거쳐갈 수 있는 성격의 지원이 대부분이다.

15) 경상남도는 도차원의 귀농교육기관인 ‘경남귀농학교’를 도비 90%와 자부담 10%로 운영해 특징적이다. 경상북도는 도내 150농가를 대상으로 도 차원에서 귀농인정착지원자금을 가구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정착지원자금은 일부 시군에서 시비나 군비로 마련하고 있지만 경북도는 정착지원자금 지원이 따로 없는 도내 시군, 또는 귀농·귀촌인 유치실적이 우수한 시군 등에 대해 도에서 추가적으로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16) 정해진 예산 안에서 비용을 지원하다보니 날로 늘어가는 귀농인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타시군에 비해 귀농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다양하고 액수가 큰 편인 하동군의 사례만 봐도 귀농인 빈집수리비의 예산은 연간 2억5천만원이므로 아무리 많아도 최대 50가구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동아리 운영지원 등 다양한 항목의 예산 편성도 가능해 각 시군별로 지역의 현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밖에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실습지원이나 고용노동부의 농산업인턴지원의 경우 기간이나 나이제한 측면 등 운영방식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는 하나, 정착 단계의 귀농인에게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외에 현장과 가까워지는 데 요긴한 수단이기 때문에 향후 더 적합한 방향으로의 개선 및 유지가 요구된다.

2. 시군별 귀농·귀촌 지원정책 검토 : 도별 1개 선진시군 지원정책 분석결과

대부분의 시군단위에서는 과도한 인구유출 및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귀농·귀촌TF팀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¹⁷⁾ 귀농·귀촌자 정착과정과 관련한 업무는 대부분 시군단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의 경우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이라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시군에서 기획운영하는데 그 과정에서 귀농인협의회 등 지역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각 시군별로 지자체장이 귀농·귀촌인 지원정책에 대한 의지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관련 인력분배나 지원예산에 차이가 나며, 같은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이라도 귀농·귀촌인 유치에 대한 목적과 관점에 따라 지원 방식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연락처와 같은 현장중심의 세심한 지원은 중앙정부 보다는 시군단위에서 담당하는 편이 적합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현재까지의 시군단위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선행한 뒤 바람직한 지원시스템과 지원방식 등을 고민하도록 한다.

1) 분석을 위한 방법론

① 조사방법 : 귀농·귀촌인을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는 시군을 도별 1개(전북의 경우 2개, 제주 제외)씩 선정해 해당 시군의 귀농·귀촌담당자 및 민간단위 귀농·귀촌협의회 관계자 직접면담 및 문헌조사를 통해 현행 귀농·귀촌지원체계의 목적과 방향, 주요 예산항목, 지원·협력체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귀농·귀촌 초기 연락처를 위한 지원정책 비중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했다. 도별 조사대상 시군은 귀농·귀촌분야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의 추천을 바탕으로, 각 도에서 최근 3년간 귀농·귀촌인 유치순위 3위 안에 드

17) 현재 고창군, 상주시 등에서 귀농·귀촌 TF팀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귀농·귀촌 역량집중 및 원스톱 지원을 꾀하고 있다.

는 지역으로 선정했다.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을 진행중인 시군이 대부분이었으며,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없이 귀농·귀촌인을 꾸준히 유치하는 경우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이를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 한 곳(괴산군)도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켰다.

② 주요 분석항목 : 귀농·귀촌과 관련한 해당 시군의 일반적인 배경, 귀농·귀촌 관련 행정의 기능, 민관 거버넌스 방식, 시군차원의 지원항목, 도시민유치지원사업 항목 등을 기준으로 각 시군의 정착지원정책 내용을 파악 및 비교분석하고자 했다.

2) 각 시군별 귀농·귀촌인 지원 관련 정책의 내용과 특성

시군에서 직접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차 시군비를 할애하는 사업으로는 해당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흔하게 이사비용, 정착지원금, 빈집수리비, 집들이비용, 비닐하우스 지원 등이 있다. 이 중 빈집수리비의 경우 지원예산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항목이나 예산규모는 시군의 의지나 예산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시군비를 통해 일회적으로 지원되는 이같은 항목 외의 지원에 대해 대부분의 시군에서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한다.

① 경상남도 하동군

경남 하동군의 귀농·귀촌 인구는 2009년 91명, 2010년 108명, 2011년 186명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1~2분기에만 111명을 기록하기도 했다(하동군, 2014).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을 진행한 뒤 2014년부터도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시군에 선정되어 이를 운영하고 있다. 귀농·귀촌 관련 행정업무는 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인력계에서 담당하며 유치활동전담기구이자 상담창구라고 볼 수 있는 귀농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지원항목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선정 시군은 해당 조직을 별도로 두는 추세이며, 하동군도 귀농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귀농·귀촌관련 전담공무원 1명 외에 귀농상담요원 1명 등 총 2명이 상주하고 있다.

민간에는 ‘하동을 사랑하는 귀농연구회’라는 명칭의 귀농인협의회가 존재하나 아직까지 활동이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형태이지만, 귀농멘토 100인제에 따라 멘토로 활동하는 귀농인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귀농인의 정착을 돕는 등, 민간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순수지방비 지원 항목은 귀농인 빈집수리비(연간 2억5,000만원)와 소득기반조성사업(연

간 1억5,000만원), 영농정착보조금 지원(연간 1억원) 등이다. 이 밖에 전입세대 지원금,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등은 군의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표 4-2] 하동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운영현황

항목	내용
하동군 귀농·귀촌 관련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 5기부터 귀농·귀촌인 유치가 군의 공약사업으로 포함, 적극적으로 추진 - 군 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차원에서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과정 - 도시민유치지원사업 2회연속 선정(2010~2012, 2013~2015)
귀농·귀촌 담당 행정부서 및 유치관련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담당 : 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 교육인력계 - 유치 담당 : 귀농·귀촌지원센터(귀농·귀촌 전담공무원 1명 및 계약직 귀농상담요원 배정, 군에서 귀농상담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 교육 담당 : 군 농업기술센터
민관 거버넌스 방식	<p>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전담 팀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담당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민관 거버넌스체계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며, 민간차원에서는 현재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단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동귀농인연구회’ 조직 : 2013년 하동군 귀농·귀촌인으로 구성된 민간조직으로 결성, 운영경험이 짧음 - 귀농멘토 100인제 : 귀농연구회 회원을 비롯한 기존 귀농인 100명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신규 귀농인을 위한 멘토활동을 하며, 군에서는 이에 대해 유류비 등 소정의 활동비 지원
군단위 지원항목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 빈집수리비 : 세대당 1,000만원 한도내 지원, 수리비 5백만원까지 전액/5백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초과금액의 50% 지원 - 소득기반 조성지원사업 : 세대당 1천만원 한도내 지원, 보조 50% 자부담 50% - 영농정착보조금 : 세대당 1백만원(영농의지 보상 50만원, 농자재구입지원 50만원) - 전입세대 지원금 및 전입학생 지원금 : 행정과 담당, 각 30~70만원 수준 - 귀농문화예술인창작지원금 : 문화관광과 담당, 200만원 이내
2014년 도시민유치 지원사업 주요 지원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웨어 : 귀농하기 좋은마을 우선선정된 마을 대상으로 임시체류형 주거공간(귀농인의방) 운영에 따른 집 유지보수비용 지원,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영농규모 확대에 따른 시설확충 및 개보수비용 지원), - 소프트웨어 : 도시민유치지원 전담팀 운영(담당주사 1인, 전담공무원 1인, 상담요원 1인) 및 귀농상담/홈페이지 및 귀농DB 관리/귀농귀촌 정보수집/귀농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 담당, 귀농인턴제(지역내 선도농가 선정 지원), 귀농하기좋은마을 운영(도시민유치실적 우수마을 인센티브) 하동 귀농인 서울 직거래장터 운영(연간 3회, 하동군 귀농인 농특산물 홍보 및 도시민 유치 목적), 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홍보 마케팅·홍보물 제작·귀농유치 홍보전 개최(신규귀농귀촌인 유치활동), 예비귀농인 현

	장교육 유치, 귀농인 교육
하동군 귀농·귀촌 정착관련 지원정책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 관련 군 차원 지원은 대부분 1회성 지원금임(빈집수리비, 소득기반조성사업 등), 항목이 다양하고 액수가 비교적 크다는 차이가 있음¹⁸⁾ - 귀농인의 집과 별도로 단기거주형 공간(귀농인의 방)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적임 - 귀농멘토 선도지도자를 군 차원에서 육성해 귀농인이 1대1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경상남도 차원의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그 특징	<p>경남도 차원에서는 관심, 실행단계와 관련된 신규 귀농자 유치활동과 귀농교육기관 개설운영 등을 지원, 도 차원에서 귀농교육기관을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차원의 귀농교육기관 개설 운영 : 연간 도내거주 18세 이상 65세 미만 귀농인 80명을 대상으로 경남귀농학교를 운영, 교육기간은 연간 4~10월 주 1회 6시간이며 부산대·경상대·남해대·특성화교육사업단 등이 위탁운영, 도비 90%, 자부담 10% 임 - 신규 귀농·귀촌인 모집활동 : 부산, 창원, 서울 등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도시민유치박람회에 참가해 귀농설명회, 귀농상담실 운영 등을 통한 유치활동 진행 - 귀농하기 좋은마을 100선 선정 홍보 : 귀농·귀촌 홍보자료로 마을현황, 귀농기반 현황, 자랑거리, 지원시책 등의 정보를 책자로 제작해 배포함

※ 특이점 : 귀농·귀촌 지원정책 대부분은 중앙정부, 혹은 시군 차원에서 집행하며 도 차원에서는 예산을 매칭하거나 박람회 참가·도차원 유치지원센터 설립 등 각 시군을 홍보 관련 업무인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경남의 경우 ‘경남생태귀농학교’를 운영하고, 특히 경남지역 내 도시민으로 대상을 한정시켜 대상을 모집함. 벤치마킹 등 현장 교육과정에서는 하동시를 포함한 경남지역 내 시군 및 선도농가와 긴밀하게 협력함.

② 경상북도 상주시

경북 상주시는 2012년부터 귀농·귀촌인 특별지원팀을 별도로 꾸리고 이에 따른 인력도 3개 반에 따라 10명(팀장 1인, 총괄기획 3인, 유치홍보 3인, 기반조성 3인)을 편성하면서 귀농·귀촌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역량을 집중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2010년부터 3년간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진행 이후 2014년 또 다시 도시민유치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벌일 수 있게 되었다. 귀농·귀촌인 특별지원팀을 운영하면서 귀농·귀촌인 유치실적이 좋아져, 귀농·귀촌인 수가 2011년 135가구, 2012년 520가구, 2013년 539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18) 빈집수리비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나, 하동시는 1,000만원 한도 및 500만원 이내에서는 전액, 500만원을 초과분에 대해 50%를 지원한다.

특히 상주시는 귀농·귀촌 상담 및 홍보 등 유치관련 업무 인력을 타지자체와 비교해 많이 고용하고 있다. 상주시 내에 위치한 귀농·귀촌정보센터는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진행하며, 상주시 귀농·귀촌 서울사무소(공무원 2명, 무기계약직 1명 근무), 상주시 귀농·귀촌 부산사무소(공무원 1명, 기간제 1명 근무) 또한 적극적으로 해당 도시 지역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데에도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크게 귀농·귀촌 관련 행정은 귀농·귀촌인 특별지원팀, 귀농·귀촌 홍보 및 유치는 귀농·귀촌정보센터, 유치 이후 교육 등과 관련한 업무는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상주시는 귀농·귀촌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보다 귀농·귀촌인 특별지원팀이 중심이 되어 관에서 주도하는 방향을 따른다. 한편 귀농·귀촌정보센터장(무급 봉사)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에게만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이들은 모두 농사를 하면서 사무를 겸하는 귀농인으로 구성되어, 간접적으로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형태다.

정착지원과 관련해서는 농가주택수리비, 귀농인영농지원 등 타시군에서 흔하게 이뤄지는 지원 외에 소규모 귀농·귀촌마을 조성, 귀농·귀촌인 설계수수료 감면 등 공간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들을 군 차원에서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4-3] 상주시 귀농귀촌 지원정책 운영현황

항목	내용
상주시 귀농·귀촌 관련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고, 수확할 수 있는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 귀농에 적합(1년간 수확 가능) - 시에서 인구유입 차원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 2014년, 통계청에 상주시 귀농·귀촌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 상주시 기획감사실 공무원과 통계청 직원이 교환근무
귀농·귀촌 담당 행정부서 및 유치관련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담당 : 상주시 귀농·귀촌인 특별지원팀(3개반-총괄기획, 유치홍보, 기반조성-10명 배치) - 유치 담당 : 상주시 귀농·귀촌정보센터/서울사무소/부산사무소 등 3곳에서 귀농·귀촌 홍보 및 상담 지원 - 교육 담당 :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민관 거버넌스 방식	<p>군 주도 지원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민간 귀농인모임과의 협력은 거의 이뤄지지 않음</p>
군단위 지원항목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주택수리비 500만원/1세대(보조 80%, 자부담 20%) - 귀농인 영농지원사업 :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지원으로 농가당 5백만원 이내(보조금 80%, 자부담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지원 40만원/1세대 - 귀농·귀촌인 설계수수료 감면(50%) - 귀농인 농기계 임대료 감면(50%) - 소규모 귀농·귀촌마을조성(5~20호) : 도시에서 여럿이 함께 귀농·귀촌할 경우 도로, 수도 등 기반 마련(7천만원~1억원 지원)
2014년 도시민유치 지원사업 주요 지원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웨어 : 연중무휴 귀농·귀촌인 유치상담실 운영, 상주시 귀농·귀촌 서울/부산사무소 운영 - 소프트웨어 : 귀농·귀촌인 교육 진행(사랑방운영, 공동체귀촌학교, 집고치기학교 등),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등
상주시 귀농·귀촌 정착관련 지원정책의 특징	<p>타시군에 비해 신규유치활동 비중이 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과 부산에 별도로 상담창구를 개설해 도시민에게 홍보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대상으로 주말에 공동체 귀촌학교/귀농건축학교/현장 실습체험 등 진행 <p>정착지원정책 다양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시군과 차별화된 군차원 정착지원 정책으로 소규모 귀농·귀촌마을조성, 귀농·귀촌인 설계수수료 감면, 귀농인 농기계임대료 감면 등이 있음 - 직접적인 자금지원 이외에 상주귀농인사랑방을 통해 귀농인의 문화생활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원
경상북도 차원의 귀농·귀촌지원정책과 그 특징	<p>대부분 도 차원에서 각 시군으로의 유치를 위한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나, 경북의 경우 각 시군의 귀농·귀촌 실적에 따라 직접적인 정착지원에도 일부 예산을 지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 이내 지원(도내 150농가 대상, 보조금 80% 자부담 20%) -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용자 지원사업 : 농기계 구입·하우스 설치 등 시설확충 및 농자재 구입에 따른 용자로 연1% 금리, 농가당 5,000만원 이내(시군별 2명)

[그림 4-1] 상주시 귀농·귀촌 TF 외관



※ 특이점 :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귀농·귀촌 전담 부서를 신설해 인력 1~2명을 배치하거

나 혹은 관련 특정부서 소속 인력에게 귀농귀촌 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게끔 하지만 상주시는 분리된 사무공간을 마련해 귀농귀촌TF를 별도로 꾸리고, 필요한 인력을 3개 팀으로 나눠 구성함.

③ 강원도 화천군

강원도 화천군은 귀농·귀촌관련 군비 투자항목 중에는 특징적인 항목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2010~2012년, 2013~2015년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에 강원도 내에서는 귀농·귀촌 지원정책 운영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자체다. 현재 군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지원과 소속 공무원 1인이 귀농·귀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귀농·귀촌 상담센터가 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지만 이 기구의 운영 또한 해당 공무원이 진행중이다.

관에서 민간의 귀농인 조직과 직접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해 귀농·귀촌을 지원하지는 않으나, 화천군 생태귀농자협의회라는 모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화천현장귀농학교를 통해 귀농인 인큐베이팅과 동시에 화천군으로 귀농·귀촌인구를 유입시키고자 하고 있다. 화천현장귀농학교는 기숙형 귀농학교로 3~11월에 거쳐 거의 1년간의 장기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기관들과의 차별성이 있다. 군에서 직접 귀농학교 등록금일부를 지원해주므로 9개월 교육비 200만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정착과 관련해서는 주택수리비, 귀농인 비닐하우스 지원 등 대부분이 1회성 자금지원이나, 도시민유치지원사업 내에서 귀농학교를 거점으로 교육 및 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게끔 하고있다.

[표 4-4] 화천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운영현황

항목	내용
화천군 귀농·귀촌 관련 배경	- 전업농이 많은 타도에 비해 소규모 복합농이 많은 농업환경 - 2회연속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선정
귀농·귀촌 담당 행정 부서 및 유치관련 기구	- 행정담당 : 화천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지원과 농업인력육성팀(유치업무 동시 운영)
민관 거버넌스 방식	- 뚜렷한 민관거버넌스는 아니나, 군내에 특화된 민간 귀농학교를 군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협력이 이뤄짐
군단위 지원항목 및 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 세대당 150만원(전입하여 주택매입후 수리세대애 한함, 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귀농인 비닐하우스 지원 : 비가림하우스 등 설치시 50% 보조

	- 전입(정착)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이상 타지역에서 전입하여 1년 이상 실 거주한 2인이상 세대에 1인당 20만
2014년 도시민유치 지원사업 주요 지원 항목	- 하드웨어 : 귀농자 인큐베이터센터 운영, 현장귀농학교 기숙사 확충, 소규모전원마을 기반조성 - 소프트웨어 : 화천군 귀농·귀촌스토리텔링 및 홍보사업,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화천 귀농·귀촌홍보관 운영, 화천 귀농·귀촌장기발전계획 수립, 화천 귀농·귀촌 희망자 초청 워크숍, 화천군 현장귀농학교 운영, 새내기 화천군민교류활동 지원 등
화천군 귀농·귀촌 정착관련 지원정책의 특징	- 군농업기술센터의 귀농·귀촌 담당 부서에서 행정, 상담을 모두 지원하는 체계이며 귀농·귀촌 전담부서는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행정인력이 부족한 편임 - 그럼에도 군의 차별화된 귀농학교 운영 및 꾸준한 홍보활동을 통해 2회 연속 도시민유치지원사업 대상군으로 선정됨
강원도 차원의 귀농·귀촌지원정책과 그 특징	- 농가주택수리비 등에 대한 매칭 외에 도차원의 별도지원은 없음, 2015년 '귀농인 농부월급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할 계획임.

④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고창군은 지난 해 귀농·귀촌인구 1,045세대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서 귀농·귀촌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최근 손꼽히고 있다. 2007년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홍보되기 시작했으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군 차원의 1인당 지원 액수가 큰 편이다. 농사지을 밭이 많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기후와 토양이 뒷받침된다는 환경적 측면도 귀농·귀촌지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귀농·귀촌 업무만 담당하는 귀농·귀촌 TF팀이 고창군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있으며 귀농인 유치팀/정착팀/행정지원서비스팀 등 3가지 분야로 분류되어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별개로 운영하는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고창군귀농인 협의회가 운영함으로써 강력한 민관 거버넌스체계를 형성한다.

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는 고창군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사단법인화되면서 적극적으로 군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사진 23명, 대의원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가 무급으로 봉사한다. 지역별 14개 읍면지회로 분류되고 각 지회마다 지회장이 있어 향후 작물별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현재도 신규 귀농자에게 원할 경우 협의회에 차원에서 멘토를 지정해주고 있다. 읍면지회는 월 1회 모임을 가지며 여기에서 필요한 영농교육이나 요구사항, 문제점 등에 대한 건의가 이뤄진다.

이밖에 2009년 정부에서 시행했던 농어촌뉴타운 시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고창

읍 월곡리 고창지구에 조성된 뉴타운에 110세대 분양을 마친 상태다. 뉴타운사업의 일환으로 부안면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간인 커뮤니티센터가 지어졌으며 이 건물 내에 귀농·귀촌인협의회(귀농지원센터) 사무실이 입주해있다.

[그림 4-2] 고창군 커뮤니티센터 외관



[표 4-5] 고창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운영현황

항목	내용
고창군 귀농·귀촌 관련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기준 전국 최다 귀농·귀촌인구 기록 - 넓은 밭농사부지, 농사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 등 귀농에 유리한 환경적 측면 -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외에 농어촌뉴타운공모에도 선정되는 등 관련 정부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시행중임
귀농·귀촌 담당 행정부서 및 유치관련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담당 : 귀농·귀촌 TF팀 전담, 유치팀/정착팀/행정지원서비스팀 분리 - 유치 담당 : 귀농·귀촌지원센터(고창군귀농인협의회가 인건비 없이 봉사로 위탁운영)
민관 거버넌스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의 귀농·귀촌TF팀이 귀농·귀촌 관련 행정을 전담하고 민간의 귀농인협의회가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위탁운영 - 군과 민간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적극적인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음
군단위 지원항목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영농정착금 :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 전가족 전입시 100만원 추가지원 - 소규모 귀농·귀촌마을 기반조성사업 : 입주자 주도형으로 5~10세대 소규모공동체거주지를 조성하고자하는 귀농·귀촌 세대 대상, 3개소에 각 1억원씩 지원해 진입로개설·상하수도 등 기반조성 지원(부지매입, 개발행위, 인허가 등 주택신축 전반 입주자 담당) - 귀농·귀촌유치 우수마을 지원사업 : 행정마을 기준으로 5가구 이상 또는 귀

	<p>농·귀촌인 수 10명 이상의 유치실적이 있는 마을 중 유치실적이 높은 4개마을에 마을당 5천만원씩 안길포장, 하수도정비 등 소규모 숙원사업비 용도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mily5563 정착프로그램 : 국비와 군비의 4:1 매칭으로, 55~63년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도시민 및 초기 귀농·귀촌인 대상 문화강좌·집들이사업·귀농·귀촌 학교 및 심화교육 등을 포함한 12개의 프로그램 운영. 고창군 수도권귀농·귀촌 학교 교육시설에서 진행됨 - 귀농인 농지구입자금 용자지원(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활용) : 5천만원 한도, 연리 2%,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도비와 매칭) : 세대당 5백만원 이내 - 수도권귀농학교 운영(도비와 매칭) : 자부담 10%
2014년 도시민유치 지원사업 주요 지원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웨어 : 귀농·귀촌도우미센터 운영, 전북귀농·귀촌 홍보관 운영, 체재형 귀농·귀촌 체험등지 사업 - 소프트웨어 : 도시민농촌유치 홍보활동, 수도권 귀농예정자 고창반 운영, 홈스테이 프로그램, 읍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고창군 귀농·귀촌 정착관련 지원정책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성인 군비지원 항목이 다양하고, 1인당 지원예산규모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아 군 차원의 귀농·귀촌인 유치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Family5563이 정착 초기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신규 귀농·귀촌자에 맞춤형 교육 및 활동혜택 - 귀농인구가 많고 농사에 유리한 지역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품목별로 전문화된 교육 요구가 큼,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이를 위해 작목별 멘토를 총 100명까지 육성할 계획임
전라북도 차원의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그 특징	<p>도 차원에서는 도단위 귀농·귀촌지원센터 및 수도권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신규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음, 그 외의 항목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국비나 시군비와의 매칭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 콜센터, 홈페이지운영 및 DB구축 - 수도권주요거점 귀농·귀촌 홍보 : 10개소, 언론홍보 등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 농가주택 리모델링 비용, 시군비 매칭 - 수도권 귀농·귀촌홍보관 운영 : 콜센터, 귀농·귀촌 안내 - 귀농인 실습 및 현장교육지원 : 시군비 매칭 - 수도권귀농학교 : 시군비 매칭

⑤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군은 2009년 귀농·귀촌종합대책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주민주도형 상향식 발전모델을 기반으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진행했으며 그 일환으로 2006년 마을간사제도를 시작했다. 이 제도 운영의 경험을 확장하고 도시민 인재의 농촌 정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6년 말에는 ‘귀농1번지 프로젝트를 구상, 행자부 혁신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련 실태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했으며 2007년에는 도시민유치지원시

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각종 귀농·귀촌 관련 사업을 진행해올 수 있었다. 특히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의 경우 2007~2010년, 2011~2013년, 2014~2016년 등 3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선정, 운영되고 있어 타시군에 비해 귀농·귀촌 역사가 길고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가장 차별적인 점은 귀농·귀촌을 인구증가보다는 마을만들기의 한 부분으로 접근해 진행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 항목이나 내용이 일회적인 자금지원보다는 농촌지역사회 활성화 및 선순환에 도움을 주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제 진안군은 향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지원정책보다는 이미 유치한 상태의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사회 안에서 원만하게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좀 더 집중하는 추세이며, 군비지원이 거의 없이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예산을 정책에 많이 활용한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의 경우처럼 귀농·귀촌 관련 실무도 민간기구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사단법인 마을엔사람) 내 귀농·귀촌활성인협의회나 마을간사협의회 등 관련 조직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형태로 진행될 때가 많으며 군의 경우 전략사업과 마을만들기팀에서 관련 사업개발이나 예산분배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구조이다. 크게 봤을 때 귀농·귀촌 관련 행정을 군 전략사업과 마을만들기팀에서 담당하지만 상담 및 홍보창구로 볼 수 있는 귀농·귀촌활성화센터는 진안군귀농·귀촌인협의회가 위탁운영을 하고있다. 여기에 집수리비나 영농정착금과 같이 타시군에서 많이 도입한 군비지원은 하지 않고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잘 어울려 활력있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커뮤니티 활동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이밖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인 현장실습 등의 기술교육을 담당한다.

농사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고 오히려 귀촌인을 위한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도 다수의 시군과 차별화된 부분이다. 따라서 지역을 대표하는 품목도 다양하지 않으며 농지도 부족한 등 농업환경이 썩 좋지 않은 지역임에도 귀농·귀촌인이 꾸준히 찾고 있다.

[표 4-6]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운영현황

항목	내용
진안군 귀농·귀촌 관련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찍이 귀농·귀촌 지원활동 수행 : 귀농·귀촌종합대책이 수립되기 전인 2006년 살기좋은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마을간사제, 귀농·귀촌 1번지 프로젝트 등 관련 활동이 이미 진행되었음 - 귀촌자 중심 지원 : 다른 시군에 비해 농업에 열악한 자연환경이지만 귀촌자의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귀농·귀촌자가 다수 유입될 수 있었음
귀농·귀촌 담당 행정부서 및 유치관련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담당 : 군 전략사업과 마을만들기팀 - 유치 담당 : 귀농·귀촌활성화센터(진안군귀농·귀촌인협의회 위탁운영, 내부에 상주직원 1명과 멘토 18명을 지정해 활동하도록 함) 외 마을만들기지원센터

	<p>내 관련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담당 :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민관 거버넌스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마을만들기팀에서 행정을 담당하나, 사업기획이나 지원방향 등과 관련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내 다양한 조직 관계자들과 사전 논의를 거침 - 일회성 자금 지원사업이 없이 대부분 사업이 지역활성화와 관계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실무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함 - 강력한 민관거버넌스 모델, 시각에 따라서는 민간주도적인 모델로도 볼 수 있음 - 관의 담당 공무원은 주기적으로 교체되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담당자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아 전문성있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짐
군단위 지원항목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간사제도 : 8명, 1인당 120만원 보조(귀농·귀촌인 및 예정자) -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 지원 : 연 2회, 회당 3백만원 -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사업 : 3개지구, 4가구 이상 마을 조성시 지구별 100만원 이내
2014년 도시민유치지원 사업 주요 지원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웨어 : 귀농·귀촌협의회 상근인력지원, 귀농·귀촌인 카페 조성 - 소프트웨어 : 귀농·귀촌 정책 홍보물 제작배부, 귀농·귀촌인 상담 및 현장 안내, 귀농·귀촌 박람회 및 설명회, 수도권 홍보관 운영, 귀농·귀촌 소식지 발행, 귀농·귀촌학교 운영, 귀농·귀촌인 멘토링,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 집들이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화합분위기 조성사업, 귀농·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기여사업, 귀농·귀촌 문화제
진안군 귀농·귀촌 정착 관련 지원정책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지원자금이나 이사비용 등 1회성 자금지원이 전무 : 초기 귀농·귀촌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에 대한 지원에 집중 - 귀농보다 귀촌에 입각한 지원사업이 대부분임 -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의 대표적인 항목인 귀농·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기여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활동비를 지급받는 형태라 민간영역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전라북도 차원의 귀농·귀촌지원정책과 그 특징	고창군과 동일

⑥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군은 지리산 아래 위치한 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기존에 귀농인보다는 귀촌인의 비율이 높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은퇴형 귀촌인이나 예술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이주하고 있다. 2011년 172명, 2012년 297명, 2013년 336명 등으로 귀농·귀촌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정작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구례군에서는 신규 귀농·귀촌인 유치활동 외에 기존에 정착해있던 많은 귀농·귀촌인의 사후관리 및 교육작업도 중요하게 인식, 진행하고 있다. 2012년 군 차원에서는 드물게 귀농·귀촌유치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

립하고, 특히 같은 농업인 지원이라도 1차생산보다는 귀농인이 도시에서 보유했던 재능을 6차산업화를 통해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집중지원계획을 내세웠다.

전라남도도는 2011년 ‘귀농인 1만가구유치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구례군의 경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는 2011년 제정되었지만 업무 단일화 및 전담직원 배치는 2012년에 이뤄졌다. 군 도시경제과에서 전원마을 등에 대한 하드웨어 일부를 담당하지만 그 외의 귀농·귀촌 관련 행정 업무는 기존의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에서 전담하게 되었다. 홍보 및 유치를 담당하는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군에서 군청 앞 별도 사무실에서 운영하며 공채로 고용한 기간제공무원(전 귀농·귀촌협회 총무) 1명과 무기계약 근로자 1명 등 2명이 상주하고 있다.

구례군은 2013년에 처음으로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을 시작했고 2014년에는 농식품부의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최근 귀농·귀촌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2015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이후에는 귀농·귀촌전담팀이 TF팀 형태로 바뀌어 해당 건물로 옮겨갈 예정이다. 귀농·귀촌 관련 행정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 모임으로는 귀농·귀촌협회, 귀농·귀촌네트워크 등 두 개 조직이 있으나 행정과 긴밀하게 협력하거나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하지는 않고 있다.

2014년 대규모 친환경유기식품 클러스터단지인 아이쿱생협 자연드림파크가 설립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 사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군 차원에서 조성하는 소규모전원마을 3곳 중 1곳이 아이쿱생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지이다.

[표 4-7] 구례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운영현황

항목	내용
구례군 귀농·귀촌 관련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산 아래 자리잡은 지역으로 귀촌인, 예술인이 많이 이주해온 곳임 - 2012년 귀농·귀촌유치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2013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유치 군으로 선정됨 - 전국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의 51% 점유, 생산량 1위
귀농·귀촌 담당 행정부서 및 유치관련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담당 : 군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 유치 담당 : 귀농·귀촌지원센터(별도 공채 고용, 구례군 귀농인 포함) - 교육 담당 : 군 농업기술센터
민관 거버넌스 방식	관 주도형, 비교적 최근인 2012년 관련 정책이 만들어졌으며 민간 귀농인협의회가 존재하긴 하나 행정과의 거버넌스 형태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순수 군단위 지원항목 및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지원 : 15개소

내용	- 귀농인 정착농업시설지원 : 20개소
2014년 도시민유치지원 사업 주요 지원항목	- 하드웨어 :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도시민 체류형 임시거주공간 마련 - 소프트웨어 : 홍보물 제작, 박람회 참여, 지역주민 마인드함양 교육(정주의향단계),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도시민 힐링캠프, 귀농·귀촌 워크숍(이주준비단계), 귀농·귀촌 멘토링, 이웃주민 초청행사(이주실행단계), 재능나눔 지원사업, 귀농·귀촌 모임체지원, 소식지발간(이주정착단계)
구례군 귀농·귀촌 정착 관련 지원정책의 특징	- 2012년 귀농·귀촌유치활성화 종합계획과 함께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관련 하드웨어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임 - 1차생산 뿐 아니라 유통, 가공 등의 6차산업 영역에서 귀농·귀촌인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귀농·귀촌활성화 방향을 종합계획을 통해 밝히고 있음
전라남도 차원의 귀농·귀촌지원정책과 그 특징	2011년 귀농인 1만가구 유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귀농인 신규유치에 대한 도 차원의 의지를 표출함, - 귀농 홈페이지 및 도 상담센터 운영 - 찾아가는 귀농설명회 개최(수도권) - 귀농안내매뉴얼, 성공사례 제공 - 귀농교육, 귀농상담자 DB 구축 - 주택수리비 : 최대 5백만원(시군별 6~10동) - 귀농인 창업자금·주택구입비 지원(매칭) 이와 함께 귀농 외에도 베이비부머의 본격적 은퇴에 대비해 2012년 ‘700만 베이비 부머를 위한 휴양 및 전원마을 조성 투자유치 계획’ 아래 도시민 유치활동을 진행할 방침을 세웠으며 은퇴도시 지원조례를 공포, 은퇴도시담당관실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⑦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군의 귀농·귀촌 인구 가구수 추이 파악 결과 2011년 귀농 34가구 귀촌 10가구, 2012년 귀농 41가구 귀촌 20가구, 2013년 귀농 45가구 귀촌 23가구 등으로 많은 수는 아니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천군은 2007년 도시민유치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한 이후 2013년에 1차례 더 선정된 상태다. 서천군내 농경지는 전체 1만3,594ha 중 논이 10,939ha, 밭이 2,655ha를 차지해 밭에 비해 논 면적이 월등하게 넓다(국가통계포털). 일반적으로 논농사는 밭농사에 비해 큰 규모로 운영해야만 수익창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귀농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사여건에도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인 수가 증가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민간 차원의 귀농인 협의회 활동이 활발하고,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군의 움직임이 귀농·귀촌인들의 이러한 활동과 맞물려 시너지를 내고 있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서천군의 귀농·귀촌 관련 행정은 군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 귀농·귀촌 담당 공무원 2명이 전담하고 있다. 서천군귀농인협의회는 군의 위탁을 받아 귀농지원센터를 현재 519㎡ 규모의 폐교를 리모델링한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는 따로 없으며 군에서 연간 공과금 등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서천군은 비교적 열악한 농사여건 때문에 귀촌자의 일자리 제공을 바탕으로 마을만들기를 진행하는 진안군의 모델을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영역이 아직까지 진안군처럼 귀농·귀촌 활동을 이끌고 가는 단계는 아니나, 군의 귀농·귀촌자 지원이나 도시민유치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천군 경제진흥과는 2011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서천 주민기업 등의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천군 일자리종합센터 설립 등 군내 사회적경제 조성에 관심을 두고 기반을 닦아왔으며 당시 충남도내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시군종합평가에서 서천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귀농인협의회 또한 2011년 충남형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인건비 지원을 받았으며 귀농인 협의회 내에 존재했던 다양한 동아리-생태건축, 목공, 농산물 꾸러미 등- 중 일부는 충남형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거나 별도 법인을 꾸려 독립하게 되었다. 초기 귀농·귀촌인의 지속적인 수익창출에 사회적기업 선정은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한편 현재 서천군귀농인협의회는 충남형사회적기업지원이 종료된 뒤 2013년부터 근무인원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도나 중앙정부 사업 및 회원기부 농산물 장터 판매 등을 통해 운영비를 벌여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다. 2013년에는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자연에서 행복만들기 귀농체험교육’ 과정으로 농식품부의 귀농·귀촌우수교육과정공모에 선정되어 교육비를 지원받아 이를 운영중이다. 이밖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귀농 영농정착 교육프로그램은 초급, 중급 등 수준별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 군 차원에서는 국립생태원에 서래장터를 열어 서천군귀농인연합회 회원들도 해당 공간에서 농산물을 팔 수 있게끔 하며, 귀농인협의회 차원에서도 더 다양한 판로구축을 위해 격주로 아파트단지를 찾아 직거래를 주최하는 등 협의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귀농·귀촌자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돕고 있다.

[표 4-8] 서천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운영현황

항목	내용
서천군 귀농·귀촌 관련 배경	- 귀농자가 적응하기 힘든 농업환경에도 귀농·귀촌인 수가 꾸준히 증가함 - 군 차원의 사회적경제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이 귀농·귀촌인의 활동에 도움을 줬음

	- 2007년 도시민유치지원시범사업 진행, 이후 2013년 3기 도시민유치지원사업 군 선정
귀농·귀촌 담당 행정부서 및 유치관련 기구	- 행정 업무 :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2인 - 상담 업무 : 서천군귀농·귀촌지원센터(서천군 귀농인협회의 위탁운영) - 교육 업무 :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센터(자연에서 행복만들기 : 귀농 투어, 귀농선진지 견학교육, 목공교육, 생태건축 및 조경교육, 영농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민관 거버넌스 방식	- 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 전담 계가 마련되어 행정을 담당하고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서천군귀농인협회의 위탁운영, 적극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조 - 교육의 경우 타시군처럼 군 농업기술센터 주관 프로그램과 별도로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목공교육, 생태건축 등 귀촌인이 필요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을 차별화시켜 진행하고 있음.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한다는 이점이 있음
군단위 지원항목 및 내용	- 귀농·귀촌 전문교육(2개과정) : 초급(뉴파머), 중급(그린라이프), 선진지교육 등으로 구성 - 귀농인협회 운영지원 : 귀농지원센터 운영지원(사무장 인건비), 귀농·귀촌설명회 운영, 귀농현장애로지원단 운영 등 - 서천군 빈집DB 구축, 귀농상담시 제공
2014년 도시민유치지원 사업 주요 지원항목	- 하드웨어 :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운영(상시인력 인건비, 운영비), 귀농지원센터 리모델링(내부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 영농정착자금지원 - 소프트웨어 : 홍보물 제작, 전국단위 박람회 참가, 농촌일자리발굴(서천군일자리종합센터와 연계한 귀농·귀촌일자리 발굴), 귀농·귀촌인 교육 및 워크숍, 귀농 선배 멘토링제, 학습동아리(귀농인 꾸러미), 지역주민 화합프로그램
서천군 귀농·귀촌 정착관련 지원정책의 특징	- 영농, 정착에 대한 1회성 지원이 전무하며 귀농지원센터 및 귀농인협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주로 이뤄지고 있음 - 귀농인협회 내부에 사업단 형태의 소모임이 다양하게 존재, 귀농·귀촌인 창업 시 마케팅 및 판로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음
충청남도 차원의 귀농·귀촌지원정책과 그 특징	충남도의 경우 대부분 시군과 매칭 형태로 지원하지만 귀농현장애로 지원단, 젊은 농촌마을학교 등은 다른 도단위에 없는 독창적인 아이템임. - 귀농지원센터운영(충남도 사업, 도비·시군비 매칭) - 귀농현장애로 지원단 운영(충남도 사업, 도비·시군비매칭) : 귀농선배와 공무원이 협력하여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와 시·군별 특성에 맞는 귀농지원단 운영 - 젊은 농촌마을학교(국비, 도비 매칭) : 충남으로의 귀농을 희망하는 20대~30대를 대상으로하는 현장견학 프로그램 - 귀농 현장교육(국비·도비 매칭) - 찾아가는 귀농교육(국비·도비 매칭) - 귀농인의집 조성(충남도 사업, 도비·시군비 매칭)

	<p>- 귀농·귀촌 설명회 개최(충남도 사업, 도바·시군비 매칭)</p> <p>이 밖에 3농혁신 시책에 의해 농어촌역량강화사업단 산하 3개 팀 중 하나로 귀농·귀촌팀이 개설되는 등 귀농·귀촌인 유치가 충남의 주요시책으로서 진행되고 있음</p>
--	---

※ 특이점 : 서천군 귀농지원센터는 서천군내 폐교를 리모델링한 건물을 군의 지원으로 무상임대해 운영하고 있음. 사무실, 회의실, 귀농·귀촌인 상품 전시관, 예비귀농·귀촌인 교육장, 지역 학생 공부방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어 활용도가 높음.

[그림 4-3] 서천군 귀농지원센터 관련 사진



⑧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군은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는 군임에도 귀농·귀촌인 수가 2010년 118명, 2012년 539명, 2013년 546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괴산군 유기농산업과가 귀농·귀촌 관련 업무를 담당하나 이를 전담하지는 않으며, 대신 민간 영역의 귀농·귀촌인 모임이 비교적 활성화되어있다.

수도권과 가깝다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도 귀농·귀촌 지역으로 각광받고있으며 유기농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특히 친환경 유기농업을 원하는 귀농자들이 정착하기에 적합한 지역인 것으로 평가된다. 군 차원의 지원정책은 교육훈련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농업기술센터의 귀농지원센터 운영(농업기술센터 산하 귀농·귀촌연구회 위탁) 등이며 귀농지원센터의 지원은 홍보, 상담 및 귀농인의집 알선 등이어서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항목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곳에는 농민운동 ‘1세대’가 다수 소속되어 있던 괴산군농민회가 위치한 지역이고 이에 따라 흙살림연구소, 한살림영농조합, 흙사랑영농조합법인 등 친환경유기농 관련 조직 및 사업체들이 터를 잡고 활동하게 되었다. 특히 귀농·귀촌인들이 친

환경유기농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한살림생산자회원이거나 흙사랑영농조합(사단법인 흙살림 감물면지회)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한살림, 흙살림 등에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출하하며 흙살림의 자재를 이용하는 등 지역내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내 위치한 귀농지원센터에서는 괴산군 귀농인 1인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상담 홍보 및 네트워킹 관련 기능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 곳은 귀농·귀촌인이 모이는 사랑방 기능을 하며 귀농자 농산물 교환 등이 이뤄지기도 한다. 현재 민간에는 ‘느티나무’라는 귀농자모임이 2000년부터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군 차원에서는 귀농·귀촌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유기농업과 관련한 사업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유기농업군 선포식을 가졌으며 충북유기농업연구센터를 괴산군 내에 건립중이다. 2015년에는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유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유기농거점사업의 일환으로 유기농관광사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유기농작물 관련 자원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4-9] 괴산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운영현황

항목	내용
괴산군 귀농·귀촌 관련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 - 정책적으로 귀농·귀촌을 강력하게 지원하지는 않으나, 귀농인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유기농업은 군의 특화사업으로서 육성되고 있음 - 괴산군농민회를 시초로 한 친환경유기농업 조직들이 지역 내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귀농·귀촌 담당 행정부서 및 유치관련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업무 : 괴산군 친환경농업지원과 담당 - 유치 업무 : 괴산군 귀농지원센터(농업기술센터 산하 귀농·귀촌연구회가 운영) - 교육 업무 :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민관 거버넌스 방식	- 민관 일부 협력 : 관 차원의 특별한 귀농·귀촌지원정책이 적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귀농지원센터의 민간운영 지원과 같은 측면에서 일부 거버넌스 형태가 관찰됨
군단위 지원항목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당 수리비 지원(도와 매칭) : 세대당 200만원 한도 - 귀농인의집 운영
2014년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주요 지원항목	해당 없음
괴산군 귀농·귀촌 정착 관련 지원정책의 특징	정책적 특이사항 없음, 민간영역 또한 귀농·귀촌자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지는 민간 차원의 소모임이나 연구회 활동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귀농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음.
충청북도 차원의 귀농	도 차원의 귀농·귀촌 지원은 비교적 부족한 편임(현행 지원제도 : 농가주택

귀촌지원정책과 그 특징	수리비-시와 매칭)
--------------	------------

3) 특징 및 함의점

도별 귀농·귀촌 지원정책 수행 선진시군의 경우 정책의 지원체계나 항목에 공통점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빈집수리비, 정착지원금 등 거의 모든 시군에서 지원하는 항목도 물론 있었지만 시군 단위에서 귀농·귀촌 유치목적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지원 예산의 항목, 특히 도시민유치지원 프로그램의 항목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반면 농업적인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임에도 귀농·귀촌 선진시군으로 평가되는 서천군이나 진안군의 경우 귀농인 뿐 아니라 귀촌인의 일자리 창출, 넓게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인 지원 정책의 체계가 잘 짜여져있으며 이와 관련해 귀농인협의회 등 민간영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이 밖에 괴산군의 경우 시군차원의 특별한 지원이나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이 부재함에도 선진시군으로 평가받는 데에는 수도권과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무엇보다 귀농·귀촌인이 관심을 갖는 아이템인 ‘친환경유기농업’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특징 및 지역 내 관련 민간협력사업체가 많다는 이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3. 지자체 귀농·귀촌 현황 및 애로점 검토 : 지역 현장의 귀농·귀촌인 지역리더 간담회 내용을 중심으로

1) 간담회 개요

연구 진행과정에서 귀농·귀촌 현장의 의견과 고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귀농·귀촌 관련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3개 시군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 지역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4~5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각각 충남 당진시 신평면(2014년 7월4일 진행, 참여인원 5명), 전남 구례군 구례읍(2014년 8월13일 진행, 참여인원 5명), 경북 상주시 함창읍(2014년 8월14일 진행, 참여인원 4명) 등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대부분 은퇴후 귀농·귀촌한 경우, 또는 귀향(U턴)인 경우가 많았다.

간담회에서 거론된 주요 현황과 애로점을 요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주요 현황과 애로점

(1) 경제적 측면

① 농기계 운용 : 귀농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농기계 운용이 어려워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면 부채 부담 등이 우려된다. 하지만 농기계 투입을 하지 않으면 규모가 적어 소득 확보가 곤란하다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시 귀농·귀촌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도 하나 이 경우 토박이주민이 귀농·귀촌인 명의로 빌려 사용한다는 부작용도 있다.

② 고부가가치 작목 투자시 위험부담 문제 : 귀농의 꿈을 안고 버섯, 시설채소 등 투자가 큰 품목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컨설팅, 자재업자 등이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세 변동, 판로 미확보, 기술력 부재로 인한 시설 환경 대처 미흡(온도 관리 실패 등), 재해(수해, 화재), 종자 문제 노출 등 여러 이유로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설 투자를 위한 연대 보증 등으로 묶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③ 판로부족 문제 : 초기 귀농인의 경우 안정적인 판로 부재로 인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규모가 작고 작목반의 문턱이 있어 농협 계통 출하가 여의치 않기도 하며 친환경 농업을 할 경우 결국 직거래를 선택하지만 대부분 작은 규모라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는 무리가 있다.

④ 직불금 혜택 미적용 문제 : 직불금 지급은 경지구입시기와 연결되어 있어 귀농·귀촌인의 경우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2) 사회문화적 요인

① 마을사회 적응의 개인차 : 특히 귀촌인의 경우 마을과의 교류를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귀농·귀촌인 스스로 마을주민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정착에 유리하다. 기존 마을의 활동방식, 공유재 등에 대한 개인의 권리 포기 등과 같은 문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첫단추’의 중요성 : 이주 당시 적극적으로 마을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주민과 관계를 트기 어려워지는데, 도시에서의 생활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귀농·귀촌자의 경우 이 때문에 지역민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귀촌인은 진입로, 주택 신축 등을 위해 ‘측량’부터 시작하는 단계에서 농로 등을 두고 마을 주민과 정착시기부터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③ 토박이주민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시각 : 첫째, 귀농·귀촌인들이 정책적 지원을 적용받으면 막상 기존 주민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데 따른 토박이 주민들의 반감이 있다. 둘째, 최근 귀농인협의회 등의 단체 활동이 각 시군마다 확산되면서 귀농인이 귀농인에게 농업기술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의 농촌생활 적응 차원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농업기술이나 토박이 주민과의 융화 차원에서는 저해 요소가 존재한다. 한편 귀농·귀촌인이 증가하다보니 이러한 세태를 수궁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3) 지원정책관련 요인

① 토지·주택확보 문제 : 정착 초기에는 토지·주택 확보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귀촌인은 주택을 확보해 신규로 집을 짓고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되지 않으나, 귀농의 경우 초기단계에 경지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다. 도시에서 이주한 직후 매입·이차를 하더라도 현지인보다 훨씬 높은 값에 거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적절한 정보 중개인 부족 문제와도 연관되지만 이주민에 대해 배타적인 지역 풍토의 영향이기도 하다. 비싼 토지가격은 귀농정착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 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 인턴제 관련 문제 : 고용노동부의 창직인턴제나 농촌진흥청 멘토제 등 인턴방식이 있으나, 농가의 입장에서 노동수요(6개월 단위가 아니라 1~2개월이 필요한 경우)와 안 맞고 농가의 자부담률 및 귀농인의 부족한 작업능력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직인턴의 경우 나이제한 때문에 폭넓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다.

③ 귀향인의 귀농인 미인정 : 고향으로 돌아온 귀농인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귀농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지원정책 대상에서 배제된다.

4. 국외 귀농·귀촌 관련 지원정책 검토 : 일본의 신규취농 지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농업·농촌인구의 고령화, 과소화지역의 활성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일본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것은 1990년대 베이비부머(단카이세대)의 은퇴 시기 도래와 함께 사회적으로 농산어촌이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부터다. 이들은 U, I,

J턴 등 귀농귀촌의 유형을 고려하면서 농업인력 확보, 과소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의도적인 유치활동과 함께 베이비부머의 은퇴라는 사회적 현상을 결합하여 일정한 흐름을 창출했다. 농림수산성의 총괄적인 지원 아래 각 도도부현과 지역의 기업 등이 주요 주체가 되어 실행하는 시스템에 주목할만하며, 국내 귀농·귀촌자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만큼 젊은 인력에 눈높이를 맞춘 점도 함의가 크다.

1) 지원체계 및 관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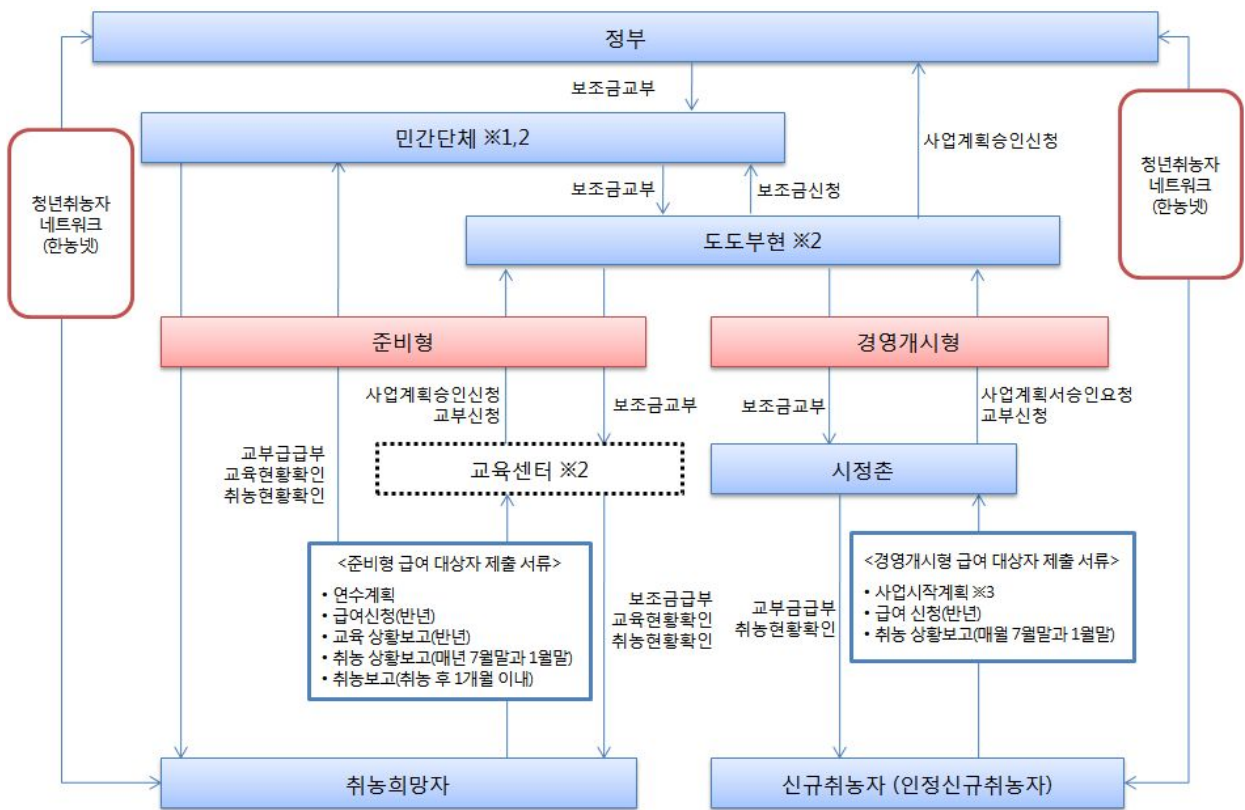
큰 틀에서 농림수산성은 취농관련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국토교통성과 총무성이 농촌이주(귀촌)관련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여 범정부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앙단위 정책과 지역단위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귀농관련 시책은 일본 농림수산성 경영국의 ‘사람·농지 계획’ 과 이에 일부 포함된 내용이기도 한 ‘신규취농제도’ 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우선 사람·농지계획(人·農地プラン)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경작포기 농지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도도부현의 농지 중간관리기구가 농지 대여를 원하는 지주와 출자자의 중간관리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지의 중간관리기구는 각 지역과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 농업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게끔 지역의 농지를 집약화, 재편성을 추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다. 경작포기 농지의 영농을 담당할 경우 청년 취업 영농교부금(45세 미만의 인정 취업 영농인으로 독립·자영 농업을 시작하는 자 대상), 슈퍼 L자금의 당초 5년간 무이자화(인정농업자), 경영단체 육성 지원사업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며, 농지를 빌려줄 경우 일정정도의 협력금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시읍면 및 관계기관, 지역 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은 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사람·농지 계획을 기획, 검토를 통해 시읍면 단위의 정식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이 시책에서 특히 귀농인에 대한 지원으로 주목할 부분은 ‘청년취업 영농교부금(경영개시형)’이며, 이는 일본의 적극적인 귀농지원시책으로 평가되는 신규취농제도의 두 종류 중 하나다.

신규취농제도는 사람·농지계획보다 좀 더 직접적인 귀농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시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연령이 45세 미만이며 초기 농업에 진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준비형과 경영을 개시한 경영개시형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된다. 하나의 큰 원칙은 준비형의 경우 연수계획, 경영개시형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도도부현에 제출해 인정을 받아야만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준비형의 경우 농업경영자 육성 교육기관이나 선진농업법인 등에서 취농에 필요한 기술 등을 습득하는 연수를 받게 되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연간 150만엔을 최장 2년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취농자들을 교

육시키는 교육센터 또한 도도부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영개시형은 취농 직후 경영이 불안정한 사람에게 사람·농지 계획에 입각해 사업 궤도에 오르기까지 교부금을 부여하는 방침으로, 최대 5년 연간 150만엔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부부가 함께 농업을 시작할 경우, 복수의 신규 취업 영농인이 법인을 신설해 공동경영할 경우 등에는 지원금이 추가되기도 하며, 보조금을 제외한 전년 소득이 250만엔을 넘은 경우나 경영개시 계획에 충실한 영농을 하고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등에는 지원이 중단되기도 한다. 지원체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4] 일본의 신규취농 지원 메커니즘



- 주) ※1은 공모에 의해 선정된 단체이며 2014년도에는 전국농업회의소가 선정된 상태임.
 ※2 : 준비형은 도도부현 또는 청년농업자육성센터(소재하는 도도부현의 취농을 기본으로 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자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서 지급 가능. 이 경우 연수 후 취농상황은 민간단체, 취농업체, 도도부현이 협력하여 확인)
 ※3 : 마을에서 개정농업 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근거한 농업경영기반강화 촉진 기본구상 수립 이후 신청할 경우

이밖에 취농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시책을 취농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취농 준비 기간에는 소득확보와 교육, 상담에 대한 지원이 주로 이뤄지며 취농개시 단계에는 독립·자영 취농자에 대한 교부금이 주어지는 한편 법인의 고용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이 이뤄진다. 경영 확립 단계에는 연수경비, 단기융자(슈퍼 L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취농제도의 두 가지 종류 중 준비형의 경우 취농준비기간에 해당하는 지원, 경영개시형의 경우 취농개시기간에 해당하는 지원인 것이다.

[표 4-10] 취농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일본 중앙정부 시책(2014)

구분	취농준비	취농개시		경영확립
		법인으로 취농	독립·자영취농	
소득확보	청년취농비용 ¹⁾	법인 등에 대한 고용사업 ²⁾	청년취농비용 ³⁾	농업법인 등 차세대 경영인 육성 ⁴⁾ 프로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목표
기술 및 경영력 습득	농업경영자 육성교육의 수준증가를 위한 조성 ⁵⁾			
기계 및 시설도입			청년 등 취농자금(무이자)	슈퍼L 자금
			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농지확보, 취농상담	각 도도부현 신규취농 상담센터 운영		농지중간관리기구에 의해 지원	

- 주 1) 현 농업대학교 및 선진농가·농진농업법인 등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기간중에 대하여 연간 150만엔을 최장 2년간 혜택
 2) 법인에 취직한 청년에 대한 연수경비로서 연간 최대 120만엔을 최장 2년간 조성, 고용한 신규 취농인의 새로운 법인설립·독립을 위한 연수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연간 최대 120만엔을 최장 4년간 조성(3년 이하는 최대 60만엔)
 3) 사람농지 계획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증 신규취농인에 대하여 연간 150만엔을 최장 5년간 혜택
 4) 법인 등의 직원을 차세대 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파견연수의 경비로서 월 최대 10만엔을 최장 2년간 조성
 5) 취농 희망자 및 영농발전을 목표로 하는 농업인 등에 고도의 농업경영자 교육을 행하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
 자료 : 농림수산성

2) 지원규모

신규취농제도에 따른 청년취업 영농 교부금을 수령한 취농자는 2013년을 기준으로 준비형 2,195명, 영농개시형 7,890명으로 총 10,085명이며 이 중 계속적인 지원의 대상자가 아닌, 새롭게 채택된 취농자는 준비형 1,331명, 경영개시형 3,184명으로 총 4,515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간 최대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면 144억6천9백만엔이 투입된다고 볼 수 있다.

3) 시사점

일본의 신규취농제에서 특징적으로 봐야할 점은 이 제도가 각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을 기반으로 지역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농지 계획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 인구증가나 청년고용 활성화 차원의 단순한 접근보다는 지역농업의 큰 그림을 고려하면서 이를 위한 혜택으로 청년에 대한 영농 교부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신규취농제도의 세부적인 원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 리스크가 특히 클 수 있는 초기에 경비를 지원한다는 점 이면에 심사제도가 있는 것이다. 경영개시형의 경우 5년 후 실현가능한 취농계획을 제출해 인증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귀농자라고 해서 무조건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농사자금을 지급해주는 것이다. 이밖에 각 지역 안에서 농업회의소, 농업교육기관 등 취농 관련 기관들이 역할을 나눠 협력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일본전국농업회의소(2014)는 매년 2만명 신규취농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현에서는 신규취농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표 4-11] 일본 지역단위 취농관련 지침 현황

취농관련 지침	주요내용
청년 등 취농 촉진을 위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신규 취농인 확보의 필요성 ■ 연간 신규 취농인 목표 제시
청년 농업인 등 확보·육성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농을 위한 기술습득 및 시설정비 등 제시
취농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농계획인증, 취농지원자금(용자) 시행 ※ 취농계획인증제도는? <p>일정한 기준에 의해 취농계획의 인증을 받은 취농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인증을 통한 취농인에게 안정적인 자금 지원</p>
취농 관련 기관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농업회의소, 농업상담센터, 농업대학교, 금융기관 등의 협력 및 역할분담을 명시

IV 귀농·귀촌 초기 정착률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과 정책 제안

1. 지원방향

1) 정부차원

(1) 단순 인구증가 차원이 아닌,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염두에 둔 방향 설정

: 현재 각 지자체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귀농귀촌인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선불리 이주했다가 정착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시군의 경우 유치를 위한 일회적 지원조차 예산 등의 문제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해 지금의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이나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와 같은 다양한 공모사업을 기획해 시군으로 하여금 귀농귀촌과 관련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귀농·귀촌인 모두를 배려하는 지원정책 강화

: 현재의 정부 지원정책은 귀농에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귀촌과 관련한 지원정책은 전무하다. 하지만 귀촌인도 분명 지자체 인구유입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귀촌 또한 낯선 곳으로 생활무대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귀촌 이후의 적응 또한 귀농 이후만큼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산업인턴제와 같이, 귀촌인들에게도 지역사회 내 일자리 매칭을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그만한 일자리가 확보되어야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각 시군 단위에서 진안군의 귀농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기여사업과 같이, 적은 액수의 지원으로도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귀농귀촌인들이 스스로 기획해 사업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작업이 중요하며 이에 대해 정부는 예산을 매칭하거나 공모를 통해 지원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귀농인이라도 첫해부터 소득을 창출해내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일자리 창출 지원책의 도움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귀농귀촌인 유형별로 세분화된, 좀 더 섬세하고 유연한 지원정책 필요

: 귀농귀촌의 목적과 준비자금 등에 따라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용자의 경우 담보가 필요하고 감정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해 절실하게 용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욱이 적용받기 힘들다. 청년 귀농귀촌인은 특히나 적용받기 힘든 지원이다. 현재 저금리 기조에서 지금의 3%대 고정이자로는 그리 저렴한 수준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 차원에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각 읍면사무소에서 귀농귀촌자의 신상파악을 위한 포맷을 만들어 전입신고서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만들면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농촌에서 하고싶은 일과 자신의 할 수 있는 일 및 재능에 대해 기록한다면 각 지역에서 해당 귀농귀촌인이 필요한 곳으로 매칭을 시켜주기도 좀 더 수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귀농귀촌인 정보키트는 귀농귀촌인신고서를 수령한 귀농귀촌인에게만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각 읍면별 귀농귀촌인 파악 절차의 의무화를 바탕으로 예를들어 적은 자금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에게는 용자제한을 좀 더 느슨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귀농인에게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멘토농가를 추천해줄 수 있고, 귀촌인에게는 지역에서 해당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귀농귀촌인 유형파악을 바탕으로 좀 더 현실적이고 섬세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현행 귀농귀촌지원사업 검토 및 선진사업 확대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농산업인턴 등 귀농귀촌인의 초기적응과 긴밀하게 연관된 사업들이 개발되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해 지역 내 사소한 문제들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으로 하여금 지역내 귀농귀촌인협의회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귀농귀촌 지원과 관련한 민관 거버넌스가 형성되어가고있는 점이 관찰된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아직 실질적으로 가동한 시군은 없지만 귀농을 원하는 도시민이 지역사회에 곧바로 진입하기 전 짧지 않은 기간 지역에 적응하며 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를 더하고 있다.

농산업인턴제 또한 현장의 농업경험이 전문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용돈을 벌면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무대가 되어주고 있다. 하지만 선도농가에 모든 교육과정을 위임하는 현재의 인턴제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의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의 경우 각 시군 차원에서 어떻게 사업을 편성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진안군은 이를 활용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소모임과 소규모 사업들을 배출해냄으로써 귀촌자들의 정착을 좀 더 지원하고 있어 타시군과 뚜렷하게 다른 진안군만의 귀농귀촌인 지원방향을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예산 내에서

풀어나가고 있다. 그만큼 각 시군 차원의 귀농귀촌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 활발한 논의 결과가 예산배분상에 반영되는 것이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센터 내에서의 학습 뿐 아니라 지역 각 읍면 현장의 실습을 가미한 프로그램이 여기에 반영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에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필요에 따라 꼭 건물을 신축하지 않더라도 각 시군의 폐교와 같은 공간을 리모델링해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 농촌진흥청 귀농인 현장실습지원사업이나 고용노동부 농산업인턴제의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으며 일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개 농가에서만 5~6개월씩 일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귀농인 및 귀농희망자가 이를 통해 다양한 영농경험을 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고, 고용주의 입장에서 일손이 필요한 기간은 정해져있는데 5~6개월이라는 기간에 부담이 따르게 된다.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작물의 선도농가들을 선정해 귀농인들에게 1달씩 다른 농가에서 경험을 쌓게 해주는 방식 등으로 이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

(5) 귀농지원과 6차산업화의 연계, 공모사업 강화

: 농사를 처음 해보는 귀농인이 1차산업으로 수십년 농사를 지어온 지역 토박이주민들보다 소득을 올리기에 무척 취약하다. 귀농인의 가공판매 관련업 종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이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참신한 농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공모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귀농귀촌인이 기반을 잡아가는 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자체 차원

(1) 일회성 지원정책 추진의 지양 및 새로운 정책 개발

: 시군비 부담이 크고 이에 비해 효과는 부족한 일회성 지원정책(농가주택 수리비, 정착지원금 등)보다는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잘 어울리고 계속 머무를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돕는 성격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2) 민관 거버넌스의 활용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

: 귀농을 희망하는 이들은 대부분 선배 귀농인들의 경험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귀농귀촌인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고창이나 서천, 진안같은 지역에서는 귀농귀촌인지원센터 업무를 민간단체인 귀농귀촌인협의회가 위탁운영함으로써 현장의 귀농귀촌인 정착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협의회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군도 대거 존재하고 있어, 그러한 시군에서는 선진시군의 민관 거버넌스 방식 검토 및 벤치마킹과 같은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3) 유치 이후에도 세심한 사후관리 필요

: 귀농귀촌인 유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돌아간다면 정착지원은 무의미해질 뿐 아니라 토박이 주민들과 지역주민 사이 크고 작게 상처만 남게 된다. 유치 당시의 도움도 중요하나 각 지자체에서 귀농귀촌인의 근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사후관리 기능을 해준다면 귀농귀촌인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뒤따른다면 도시 역귀농이나 2차귀농의 빈도 또한 파악이 좀 더 용이해질 것이다.

(4) 귀농 준비 체크리스트 세분화

: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역의 지인 등을 통해 비공식적인 루트로 땅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사기에 휘말리는 등 위험이 크게 뒤따르며 피해사례도 다수 관찰되고 있다. 이는 귀농 준비자들이 땅구입 등을 쉽게 보고, 신중한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실수이기도 하다. 토지 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부터 차근차근 제시하는 방식의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이 필요하다. 또한 수확 이후 판로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작정 농사부터 시작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땅 매입부터 마케팅까지, 이른바 귀농 A부터 Z까지의 계획을 돕는 체크리스트나 매뉴얼의 개발이 좀 더 다양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5) 토박이 주민에 대한 귀농귀촌 교육

: 지금까지 귀농귀촌의 실패는 대부분 ‘개인주의적인’ 귀농인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최근에는 귀농인만 일방적으로 토박이 주민들의 생활방식에 맞춰주고 이해하려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귀농귀촌인 인구가 증가하고있는 만큼 이들과 지역 안에서 융화되려면 농촌에서도 도시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의 특성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6) 각 지자체 귀농귀촌 관계자 네트워크의 활성화

: 현재 귀농귀촌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각 시군간 교류는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각 시군별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더 활발하게 공유하고 효과가 좋은 지원 정책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진안군의 상주시 등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전원마을지원사업이나 진안군의 지역사회기여사업, 하동의 귀농귀촌인유치 인센티브제 등과 같이 소규모의 예산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는 방식들이 각 시군 차원에서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기타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안 정책

1) 농업정책적 측면 :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귀농자의 귀농만 지원하는 취지로,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심사를 받아 통과되어야만 인정농업자 자격을 취득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생산법인-인정농업자 3개 주체가 이끌어가는 제도이다.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가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아무 준비 없이 귀농에 뛰어들었다가 발생할 수 있는 실패의 여지를 줄여주는 효과, 귀농 초기 정착기간에 가장 클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줌으로써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의 농업인으로서 정착 가능하게 돕는 효과가 있다.

2) 농촌정책적 측면 : 지역사회 내 일자리의 조직적 제공(특히 여성일자리 강화)

귀촌자의 경우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나, 일반적인 지역 내 채용 여건에서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경우 지역 차원에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을 공모, 심사를 통해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실적에 따라 포상하는 제도이다. 이는 진안군의 지역사회기여사업을 벤치마킹한 모델로, 이는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하며 귀촌자 개인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지역사회 내에 자연스럽게 지역에 뿌리내리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면 다양한 아이템의 사업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남편을 따라 귀농·귀촌한 여성을 지역활동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3) 기존 제도·체계의 보완 측면

(1) 100일 인턴제 : 현재 고용노동부의 농산업인턴제는 귀농희망자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이나, 현재처럼 1개 농가에서만 6개월의 기간동안 일하는 것은 지나치게 긴 측면이 있다. 또 이는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농장주로 하여금 인건비 부담을 느끼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끔,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 마을간사제를 벤치마킹한 ‘이장도우미’ 제도 : 이는 귀촌자가 지역에 자연스럽게 정착하도록 돕는 제도라는 취지에서는 진안의 마을간사제와 비슷하나 전문적인 직업이라기보다 귀농·귀촌자가 이장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제도이다. 특히 고령인 이장에게 부족한 문서작성 능력이나 조사업무 등을 지원하면서 재능도 발휘하고, 동네에서는 이장과 함께 지역 내 ‘주류’로 자리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3)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사랑방’ 역할 강화 : 귀촌인은 지역 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반면 지역 차원에서는 꼭 필요로 하지만 인력을 구하지 못해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자차가 없는 고령농의 직판장 출하품 배송, 읍내 이동, 돌봄 등의 서비스 등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이다.

일자리와 인력이 잘 매칭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 자리잡고 있는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귀농·귀촌 상담과 홍보를 통한 이주 유도가 중요한 만큼 귀농·귀촌 후 정착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 또한 중요한 업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일일이 1:1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온라인상에서 일자리와 인력에 관한 정보가 활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정보교환공간을 구축한 뒤 매일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와 인력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홍보함으로써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4) 전입신고시 ‘귀농귀촌 정보키트’ 전달 : 면사무소 전입신고 과정을 약간 보완한 것으로, 전입신고를 받는 직원이 귀농·귀촌 여부를 확인해 관련 생활정보, 유의사항, 이장 전화번호 등이 담긴 기초정보 키트를 제공하고, 이장에게는 해당 귀농·귀촌자의 전입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방법이다.

[참 고 문 헌]

- 강대구(2006), 「귀농자의 귀농유형별 영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2), 한국농업교육학회.
- _____ (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한국농업교육학회.
- _____ (2010), 「귀농·귀촌의 현황과 정책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7(4), 한국농촌지도학회.
- 김성수 외(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 한국농촌지도학회.
- 김소라 외(2013), 「귀농인들의 귀농 전과 후 지각된 삶의 질 수준의 비교 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40(3), 한국농업정책학회.
- 김정섭(2009),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6(3), 한국농촌지도학회.
- 김정호(2006), 「예비 취농자 및 신규 취농자의 영농에 대한 태도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 한국농업교육학회.
- 김철규 외(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연구보고서.
- 김형용(1998), 「귀농자의 실상과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4(1), 한국축산경영학회.
- 남인현 외(2011), 「직장인의 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업경제연구』 52(3), 한국농업경제학회.
- 마상열(2012),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식조사와 시사점」, 『경남정책 BRIEF』, 경남발전연구원.
- 문승태 외(2012), 「귀농인의 삶의 질 인식 수준」,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 한국농업교육학회.
- 박경옥 외(2012), 「농촌생활경험에 따른 귀촌자의 귀촌방식 및 주택마련」,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47, 한국농촌건축학회.
- _____ (2013), 「귀촌형 공동체마을의 개발특성별 거주자의 마을조성 및 정착과정 비교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9(12), 대한건축학회.
- _____ (2014), 「지속가능한 귀촌형 공동체마을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0(1), 대한건축학회.
- 박공주 외(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12(4), 한국농촌계획학회.
- 박기서(2012), 「귀촌 도시민의 선호지역과 결정요인」, 『한국주거환경학회지』 10(2), 한국주거환경학회.
- 박성복(2013),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와 그 요인들 간의 통합적 영향관계」, 『한국사회와 행정

연구』 24(3), 서울행정학회.

박은경(2008), 『귀농인 이주만족도 조사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윤 외(2013), 「귀농귀촌 시대의 공동체의 역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3), 한국지방자치학회.

박찬숙(2013), 「어느 원조귀농민의 30년 촌살이 보고서」, 『황해문화』 80, 새얼문화재단.

서만용·구자인(2005), 「귀농자의 농촌정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농촌관광연구』 12(2), 한국농촌관광학회.

서정원 외(2013), 「산촌생태마을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7(3), 한국산림휴양학회.

성지혜(2013), 「귀농한 가족, 귀농하지 않은 여성」, 『농촌사회』 23(2), 한국농촌사회학회.

손상락(2012a), 「경남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경남발전』 119, 경남발전연구원.

_____ (2012b), 『경남지역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오수호(2011), 「도시민의 농촌지향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동향 : 1996~2010년의 국내문헌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2), 한국도시지리학회.

_____ (2012), 「농촌지향 이주 가구의 귀촌적응과정과 영농실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1), 한국지역지리학회.

_____ (2013), 『귀농·귀촌 가구의 이주·정착 특성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지리정보학과 인구 및 도시지리전공 박사학위논문.

유학열(2011),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실태 및 유형별 특징」, 『열린충남』 54, 충남발전연구원.

윤석환(2010), 「기초자치단체 귀농지원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공공관리학보』 24(4), 한국공공관리학회.

이민수 외(2009), 『도시민의 귀촌행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전북발전연구원

_____ (2012), 「도시민의 귀촌행태 유형화와 시사점」, 『농촌지도와 개발』 19(4), 한국농촌지도학회.

이병기(2010), 「농촌 과소화 실태와 전망」, 『농촌지도와 개발』 17(4), 한국농촌지도학회.

이상호(2008), 「경북지역 귀농인의 지역 및 지역주민과의 만족도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5(3), 한국농업정책학회.

이수행(2012), 『한국 농업의 새로운 트렌드 : 귀농·귀촌』, 경기개발연구원.

이승우 외(2012), 『귀어·귀촌의 실태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시자(2010), 『귀농자의 안정적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춘희(2012), 「비은퇴자 귀농가족의 가족 강점과 귀농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4), 한국가족관계학회.

전경호(2013), 「귀농인들에 의한 농촌의 마을 만들기 사례 연구」, 『농촌사회』 23(1), 한국농촌사회학회.

전남수(2010), 『귀농 활성화를 위한 경남의 정책 방향』, 경남발전연구원.

- 정삼철(2011), 「충북농촌 활력제고를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충북발전연구원.
- 조영재 외(2013), 「농촌지역 귀농·귀촌인 정주현황 및 커뮤니티 실태 분석」, 『농촌계획』 19(4), 한국농촌계획학회.
- 진명숙 외(2012), 「귀농·귀촌여성의 농촌생활 경험 분석 : 진안지역 사례」, 『여성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진양명숙(2009), 「젊은 도시민의 농촌 이주의 양상과 성격」, 『지역사회연구』 16(4), 한국지역사회학회.
- 채상헌(2013), 「귀농 정착 현황 및 귀농 정착 성공요인 분석」, 『한국농·산업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농·산업교육학회.
- 최윤지(2009), 『귀농인 농촌정주 지원을 위한 ‘농촌사회서비스’ 표준화 방안 연구』, 국립농업과학원.
- _____ (2010b), 『귀농 유형과 정착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국립농업과학원.
- _____ (2013),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귀농귀촌정책의 현황과 과제」, 『국토연구』 384, 국토연구원.
- 황정임(2011a), 『귀농 유형과 정착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국립농업과학원.
- _____ (2011b), 「농촌 이주 도시민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실태 및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8(4), 한국농촌지도학회.
- _____ (2013), 『귀농·귀촌인 영농활동 및 정주 지원 연구』, 국립농업과학원.
- Irving Seidman(2009), 박혜준 외 역,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 학지사.

일본 농림수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부록 1] 귀농귀촌 적응현황 관련 설문조사지

귀농귀촌 적응현황 관련 설문조사

우리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2010년, 2011년 귀농·귀촌자의 정착현황을 파악하고 정착률을 위한 지원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통계 분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은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한 질문도 빠뜨리지 마시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조사 담당자 : (사) 농정연구센터 김혜민

■ 설문조사 문의 : <전화> 02-585-7790, <이메일> ecotopia216@naver.com

.....[귀농/귀촌 당시].....

먼저 2010-2011년 귀농 또는 귀촌 당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 최초 귀농/귀촌 년도

1-1. 2010년(2011년) 당시 귀농하셨습니까? 아니면 귀촌하셨습니까?

(#여기서 귀농이란 자신의 땅 혹은 임대한 땅에서 300평(1,000㎡) 이상 규모의 농지 또는 100평(330㎡) 이상 규모에서 하우스 등 농업생산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축산업에 종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귀농 2)귀촌

1-2. 2010년(2011년) 귀농(귀촌) 당시 거주지를 읍면단위까지 응답해주세요.

2010년(2011년) 당시 거주지 : ()시 ()읍, 면

1-3. 귀농(귀촌)시 함께 이주한 가구 구성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1)혼자서만 2)배우자 3)자녀 4)부모 5) 기타 가족(형제, 자매 등)

1-4. 2010년(2011년)귀농(귀촌)시 거주형태는 다음 중 무엇이였습니까?

1)신축이나 구입

2)임차(전세, 월세)

3)지역에 살고있던 가족이나 지인과 동거 4)임시거주(귀농인의집, 컨테이너박스 등)

5)기타

1-5. 2010년(2011년) 귀농(귀촌)하실 때 귀하의 준비자금은 얼마정도였습니까?
()억 ()천 ()백 ()만원 (#응답 및 기입의 통일을 위해 만원 단위로 기입)

1-6. 2010년(2011년) 당시 귀하의 귀농(귀촌) 동기는 다음 중 무엇과 가장 가깝습니까?

- 1) 퇴직 후 노후대책
- 2) 실직이나 사업 실패
- 3)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과 선호
- 4) 가족이나 친지의 농사 승계를 위해
- 5) 농업노동을 전문적으로 하고싶어서
- 6) 기타()

1-7. 2010년(2011년) 귀농(귀촌)을 앞두고 준비하신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귀농(귀촌) 관련 문의, 주변 사람들과의 논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하신 것은 귀농(귀촌)을 실행에 옮기기 얼마 전부터였습니까?

()년 ()개월 전

1-8. 그렇다면 귀농(귀촌) 지역이나 농지 탐색 등 귀농(귀촌)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하신 것은 귀농(귀촌)을 실행에 옮기기 얼마 전부터였습니까?

()년 ()개월 전

1-9. 다음 중 귀농(귀촌) 당시 및 귀농 후 받았던 지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 1) 이사비용 지급
- 2) 영농기술 교육
- 3) 농산업인턴제
- 4) 영농자금 지원
- 5) 주택수리비 지원
- 6) 정착장려금 지급
- 7) 토박이 주민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
- 8) 지역 내 일자리 알선
- 9) 농지알선
- 10) 빈집정보 제공
- 11) 기타

1-10. (문1-1에서 1)응답자만) 2010년(2011년) 귀농시 최초 농사형태는 어땠습니까?

- 1) 부모에게 승계받았거나 부모와 함께 경영
- 2)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해서 새롭게 농사를 시작함
- 3) 나의 농지 없이 다른 농가나 농업법인에 실습자 겸 보조자로 취업
- 4) 일감이 있을 때에만 일하는 일용노동자
- 5) 기타()

.....[현재 분류].....

2-1. 현재 거주지를 동읍면단위까지 표시해주세요.

(#최초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 동일 여부 먼저 체크)

- 1) 최초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가 같음
- 2) 최초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가 다름

현재 거주지 : (시도 시구군) () 동, 읍, 면

⇒ 현재 거주지가 '동'단위면 2-2로 이동함

2-1-1. 최초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 확인

- 1) 최초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가 다름(읍면지역으로 이동) QQ=3(재이주자)(문4-1로)
- 2) 최초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가 다름(동지역으로 이동) (문2-2로)

2-2. (⇒현재 거주지가 '동'인 경우) 2010년(2011년) 이후 도시로 이주하셨네요? 그러면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않고 계시는지요?

- 1) 현재 농사는 짓고 있지만 거주지는 도시로 옮김
- 2) 농사는 짓지 않음(지은 적 없음 포함)
- 3) 이전한 적 없음. 행정구역이 동으로 변동된 것임

⇒문2-2에서 1) 응답자는 아래 문2-3을 자동으로 1) 코딩하고 QQ=2로('귀농유지자').
문2-2에서 2) 응답자는 QQ=4로("역귀성") 코딩한 후 문4-1로 이동
문2-2에서 3) 응답자는 QQ=1로 코딩한 후 문2-3으로 이동

2-3 현재는 귀농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귀촌 상태이십니까?

- 1)귀농 2)귀촌

[⇒QQ=1 또는 2이면 문3-1로 이동함]

[⇒QQ=3이나 4는 문4-1로 이동]

.....[현재 귀농/귀촌 유지자(도시지역 귀농유지자 포함)].....

귀촌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므로 3-1에서 3-3은 질문지속함

3-1. 농지의 소유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1)내가 소유한 농지에서만 재배한다(순수자경)
- 2)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농지에서만 재배한다(순수임차)
- 3)내가 소유한 농지, 빌린 농지 모두에서 재배한다(자경+임차)
- 4)소유 농지 없음. 농사안함(⇒문3-6으로 이동)

3-2. 현재 영농중인 경우, 소유 또는 임차중인 농지면적은 전부 어느 정도입니까?

(#단위먼저 체크 후 숫자 입력)

4)농협직원 5)이장 또는 반장 6)도움 준 사람 없음 7)기타

3-14. 귀농(귀촌)초기 농사 및 농사 외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 1)지역의 친한 귀농(귀촌) 선배 및 동료에게 상담 2)지역의 친한 원주민에게 상담
- 3)이장에게 상담 4)인터넷 검색, 이메일 등 온라인 귀농귀촌인 상담창구 활용 상담
- 5)상담할 사람이 별도로 없음 6) 기타

3-15. 다음의 이주 후 귀농(귀촌)인 지원 중 가장 강화되었으면 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1)현장에 도움되는 영농교육(전문기술, 경영관리, 실습 등) 확충
- 2)지역내 농민과의 1:1 멘토링 지원 3)농창업비용 지원
- 4)경지임대차 및 휴경지알선 지원 5)농업외 일자리 창출 및 알선 지원
- 6)지역 토박이 주민과의 관계형성 지원(집들이, 모임, 회의 등)
- 7)농업생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8) 기타

.....[현재 재이주자(QQ=3) 및 역귀농자(QQ=4) 응답].....

4-1. 2010년(2011년) 귀농(귀촌)했던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역귀농, 혹은 또 다른 농촌지역으로 재이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오픈으로 응답, 최초 귀농시기 보다 이후여야 함)

4-2. 2010년(2011년) 귀농(귀촌) 후 해당 지역에서 귀농(귀촌) 생활을 중단하시기까지 당시 거주지에서 귀하 및 귀하의 가족구성원이 직접 버는 농업소득은 월 혹은 연평균 약 얼마였습니까? 순 수입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월 평균 약 ()만원 또는 연 평균 약 ()만원

(##농업소득없으면 0 기재하고 ⇨문4-4로 이동)

4-3. 처음 귀농(귀촌) 후 최초로 농업소득을 얻은 시기는 다음 중 언제였습니까?

- 1)1년 이내 2)2년 이내 3)3년 이내 4)3년 이상

(#‘농업 외 소득활동’에 대한 인지를 위해 4-7을 4-4 보다 먼저 질문)

4-7. 당시 본인 및 배우자, 기타 다른 가족구성원이 참여했던 농업 외 소득활동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본인	배우자 및 기타 가족
①	농산물 가공판매 관련 업무		
②	농촌관광 관련 업무 (체험마을 사무장, 농가민박, 농가레스토랑 등)		
③	지역사회 서비스분야(방과후학교, 요양보호사 등)		
④	지역사회서비스와 무관한, 소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건설노동, 상점점원, 식당서빙, 부동산 등)		
⑤	농업 외 소득활동 없음		
⑥	기타		

4-4. 2010년(2011년) 귀농(귀촌) 후 해당 지역에서 귀농(귀촌) 생활을 중단하시기까지 당시 거주지에서 귀하 및 귀하의 가족구성원이 직접 버는 농업 외 소득은 월 혹은 연평균 약 얼마였습니까? 순수입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월 혹은 년 단위 먼저 체크 후 숫자 입력)

월 평균 약 ()만원 또는 연 평균 약 ()만원

(##농업외소득없으면 0 기재하고 >문4-7로 이동)

4-5. 처음 귀농(귀촌) 후 최초로 농업 외 소득을 얻은 시기는 다음 중 언제였습니까?

1)농업외소득 없었음(#삭제)

1)1년 이내 2)2년 이내 3)3년 이내 4)3년 이상

4-8. 2010년(2011년) 귀농(귀촌) 후 해당 지역에서 귀농(귀촌) 생활을 중단하시기까지 당시 지역에서 귀하 및 귀하 가족구성원이 직접 버는 소득 중 이미 응답하신 농업소득과 농업 외 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십니까? 예로 도시에 있는 가족으로부터의 용돈, 기초생활수급비, 연금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월 혹은 연평균 약 얼마이십니까?

(# 월 혹은 년 단위 먼저 체크 후 숫자 입력)

월 평균 약 ()만원 또는 연 평균 약 ()만원

(##없으면 0 기재)

4-9. 2010년(2011년) 귀농(귀촌) 후 해당 지역에서 귀농(귀촌) 생활을 중단하시기까지 귀하 및 귀하 가족구성원의 월 혹은 연평균 지출은 얼마입니까?(영농비 포함)

(# 월 혹은 년 단위 먼저 체크 후 숫자 입력)

또는 월 평균 약 ()만원 또는 연 평균 약 ()만원으로 직접 기재

4-10. 2010년(2011년) 귀농(귀촌) 후 해당 지역에서 귀농(귀촌) 생활을 중단하시기까지, 급여를 받지 않으며 본인 및 배우자, 기타 다른 가족구성원이 참여 중이었던 지역사회활동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본인	배우자 및 기타 가족
①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문해교육, 방법 등)		
②	지역 내 토박이주민들과 함께하는 조직활동(농민단체, 동호회 등)		
③	지역 내 귀농인 조직활동(귀농귀촌인 협의회, 후배귀농인 상담, 귀농교육 등)		
④	농업기술센터, 군청 등이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		
⑤	지역사회 활동 안 함		
⑥	기타		

4-11. 귀농(귀촌) 후 농사를 직접 짓는 과정에서, 농사를 지은 지 얼마나 되었을 때 자신감이 붙었습니까?

- 1)6개월 이내 2)1년 이내 3)2년 이내 4)3년 이내 5)3년 이상 6)아직 자신감 없음
7)농사를 지은 적 없음(문4-2에서 농업소득이 0이면 노출 안됨)

(#문4-2에서 농업소득이 0이면 노출 안됨)

4-12. 농사지식이나 정보와 관련해 누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었습니까?

- 1)읍면 및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2)선배 귀농인
3)지역 토박이주민 4)농협직원
5)이장 또는 반장 6)도움 준 사람 없음 7)기타

4-13. 이주 초기 농사와 관련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 1)어려웠던 점 거의 없음
- 2)재배 및 사육기술 터득
- 3)기계작업 및 수리기술 터득
- 4)판매의 어려움
- 5)농지 구하는 과정의 어려움
- 6)경영자금 부족
- 7)기타()

4-14. 귀농(귀촌)초기 농사 및 농사 외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소하셨습니다?

- 1)지역의 친한 귀농(귀촌) 선배 및 동료에게 상담
- 2)지역의 친한 원주민에게 상담
- 3)이장에게 상담
- 4)인터넷 검색, 이메일 등 온라인 귀농귀촌인 상담창구 활용 상담
- 5)상담할 사람이 별도로 없었음
- 6) 기타

.....[지역 이전 관련 질문:모든 응답자에 대해 유형별로 질문].....

5-1. [⇒QQ=4, QQ=2] 동 지역으로 이사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생활하기에 소득이 부족해서
- 2)농업노동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 3)지역 토박이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 4)의료, 교통 등 생활환경의 불편 때문에
- 5)자녀 교육에 제약이 많은 환경 때문에
- 6)외로움 고립감 등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 7)가족들의 농촌생활에 대한 불만 때문에
- 8)기타

[⇒QQ=4, QQ=2는 설문종료]

5-2. [⇒QQ=3] 2010(2011)년 당시와 다른 읍면지역으로 이사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작목변경, 혹은 기후나 토양 등 자연조건이 농사짓기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 2)기존 지역 토박이주민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 3)귀농(귀촌) 지원정책 혜택을 현재보다 많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 4)의료, 교통 등 생활환경이 좀 더 편리한 곳으로 가기 위해
- 5)자녀교육에 제약이 덜한 곳으로 가기 위해
- 6)도움을 요청할만한 다른 귀농·귀촌인이 많이 사는 곳으로 가기 위해
- 7)기타()

5-3. [⇒QQ=1,3]앞으로도 지금 살고있는 농촌(읍, 면 지역)에서 사시겠습니까?

- 1)앞으로도 지금의 농촌지역에 살겠다(5-3-1로 이동)
- 2)도시로 돌아갈 것이다(5-3-2로 이동)
- 3)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사가겠다(5-3-3으로 이동)

5-3-1. 농촌에 계속 살고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도시에서와 비슷하거나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 2)농업노동 자체가 적성에 맞기 때문에
- 3)지역 주민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문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 4)도시보다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 5)건강에 도움이 되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 6)기타()

5-3-2. 도시로 돌아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생활하기에 소득이 부족해서
- 2)농업노동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 3)지역 토박이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 4)의료, 교통 등 생활환경의 불편 때문에
- 5)자녀 교육에 제약이 많은 환경 때문에
- 6)외로움, 고립감 등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 7)기타()

5-3-3. 다른 읍면지역으로 이사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작목변경, 혹은 기후나 토양 등 자연조건이 농사짓기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 2)기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 3)귀농(귀촌) 지원정책 혜택을 더 많이 보유한 곳으로 가기 위해
- 4)의료, 교통 등 생활환경이 좀 더 편리한 지역으로 가기 위해
- 5)자녀교육에 제약이 덜한 곳으로 가기 위해
- 6)도움을 요청할만한 다른 귀농·귀촌인이 많이 사는 곳으로 가기 위해
- 7)기타()

[부록 2] 귀농귀촌자 지역리더 간담회 내용

1. 개요

○ 목적

- 귀농·귀촌인의 농촌 초기 정착 단계의 애로사항 청취
- 귀농·귀촌인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현장 실행 과제 아이디어 논의

○ 간담회 대상

- 현·전 마을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 당진, 구례, 상주 : 귀농·귀촌이 활발한 시군 중 지역 안배
- * 귀농·귀촌인으로서 초기 정착에 성공한 경험자이면서 동시에 현재 귀농·귀촌인을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 다양한 사례 및 현실적인 문제 요소를 파악하고 있는 인원

○ 개최 현황

- 2014.7.4. 충남 당진시 신평면 : 5명
- 2014.8.13. 전남 구례군 구례읍 : 5명 (귀농인 부부 포함)
- 2014.8.14. 경북 상주시 함창읍 : 4명
- * 개인 의견 등을 고려, 성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자료에 밝히지 않음

2. 주요 논의 내용 : 초기 이주자의 상황, 문제요소 중심

□ 귀농·귀촌 초기 정착 실태

○ 귀농·귀촌의 방식

- 은퇴 후 귀농·귀촌하는 경우가 많으나 비연고지 정착은 드물게 있고, “귀향”인 경우가 많음
- * 당진 5명 중 4명, 상주 4명중 3명이 귀향(소위 U턴) 케이스로 나타남 [귀향 2~15년차]
- * 간담회 참석 40대 귀농인은 모두 귀향인
- * 면담에서도 전혀 모르는 귀향·귀촌인 보다 귀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설명
- *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 구례의 경우 지역 연고 없는 예술인 등의 귀촌, 간담회는 개최되지 않았으나 흥성은 친환경·공동체를 지향하는 무연고자의 귀농·귀촌이 활발
- 귀향의 경우에도 마을 적응이 쉽지 않음, 오히려 실패자라는 인식 등 여러 불편한 상황이

존재

○ 토지, 주택

- 귀촌인은 주택을 확보, 신규로 집을 짓고 귀촌하는 경우가 많음
- 귀농의 경우 경지확보가 중요하나, 초기 단계에 매입, 임차하는 것이 어려움, 혹시 매입·임차가 되더라도 불리한 조건이 됨 (정보의 중요성과 연계, 초기 정착의 경우 불확실한 정보, 적절한 정보 중개자가 부재 / 빈집은 지원센터 등에서 공지하고 있으나 실제 영농을 위한 경지 정보는 초기 이주인이 접근하기 어려움)
- 토지 가격이 비싼 경우 귀농 정착의 저해 요소, 사전에 알아보고 오지만 실제 토지 매입 혹은 임차에 나서면 비싸게 느껴짐 (토지 가격이 저렴한 지역에 귀농 희망자가 많음)
- 이주 후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 그 기간 동안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지 임차 등이 가능해야 하지만 그러한 조건을 만들기가 쉽지 않음

○ 정보의 부족, 접근 미흡

- 귀농·귀촌인 스스로 정보 획득 노력을 해야 하나, 기본적인 정보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귀농인이 농지 원부 만드는 방법, 농업인 의료보험 지원 등 기초적인 생활정보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농지원부는 만들기가 매우 까다로움 (절차도 잘 모르고, 담당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연차가 되어야 내주고 있음)

○ 소득 및 영농

- 귀농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농기계 운용이 어려움,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를 구입하면 부채 부담 등 우려 > 농기계 투입을 하지 않으면 규모가 적어 소득 확보가 곤란한 딜레마에 처함
- *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귀농·귀촌인에게 우선순위 부여 :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귀농·귀촌인 명의로 빌려 일반 농업인이 사용하는 부작용도 있음)
- 귀농의 꿈을 안고 버섯, 시설채소 등 투자가 큰 품목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는 경우
- * 버섯 등 소위 컨설팅, 자재업자 등이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세 변동, 판로 미확보, 기술력 부재로 인한 시설 환경 대처 미흡(온도 관리 실패 등), 재해(수해, 화재), 종자 문제 노출 등 여러 이유로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 / 시설 투자를 위한 연대 보증 등으로 묶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나타남
- 일정 규모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가 중요, 반면 귀농·귀촌인 스스로 최소한의 소득에 만족하거나 불안정한 소득에 머물며 편한 생활을 즐기겠다는 경우도 있음 (소득확보, 초

기 안정 노력을 하는 귀농·귀촌인을 선별 지원해야)

- 품목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초기 귀농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음 >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탄력화할 필요가 있음
- 초기 귀농인의 판로 문제가 있음 : 규모가 작고 작목반의 문턱이 있어 농협 계통 출하가 여의치 않음, 게다가 친환경, 결국 직거래를 선택하지만 적은 규모로 안정 소득 확보에는 무리
- 귀농인은 직불금 혜택도 받기 어려움 > 직불금도 결국 경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
- 고용노동부 인턴, 농촌진흥청 멘토제 등 인턴방식이 있으나, 농가의 노동수요(6개월 단위가 아니라 1~2개월이 필요한 경우)와 안 맞고 농가의 자부담 부담 등으로 효과적이지 못한 점이 있음

□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 : 사회적 측면

○ 마을 사회 적응의 개인차

- 귀촌인의 경우 마을과의 교류를 최소화하고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음
- 귀농·귀촌인 스스로 마을 주민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정착에 유리
- 기존 마을의 활동방식, 공유재 [예를들어 농로, 관정 등]에 대한 개인의 권리 포기 등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귀촌”인의 문제 - 첫단추

- 귀농·귀촌 이주 당시에 적극적으로 마을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 이 시기를 놓치면 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음
- 귀촌인의 경우 진입로, 주택 신축 등을 위해 “측량”부터 하게 되고 농로 등을 두고 마을 주민과 마찰·갈등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 기존 주민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시각

- 역차별, 귀농귀촌인에게 지원을 하며 막상 기존 주민이 지원의 후순위로 밀린다는 반감
- 귀농인끼리 조직을 만들고 스스로 교육 > 귀농인협의회 등 단체가 되면서 귀농인이 귀농인에게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상황, 사회적 측면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는 등 유리하나 농업기술, 지역 정착에는 저해 요소가 존재
- 귀농·귀촌인이 많아지니 기존 주민도 이제는 수궁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음

3. 귀농·귀촌인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 논의

□ 새로운 시책 관련

○ 부이장제 혹은 이장도우미

- 귀농·귀촌인이 지역상황을 이해하고 지역민과 융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이장의 다양한 조사, 회의, 문서작업(컴퓨터활용)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지역과 융화
- 월5만원 정도의 소액 예산으로 운용
- > 마을에 이장 뿐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총무 등 기존의 활동 방식이 있어 이장도우미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드는 것도 지역에서 수용해야 가능
- > 이장도 조례로 정해진 제도가 있는 것, 이를 개정해야 할 수도 있음, 행정에서 요청하는 방식이라면 수용할 여지가 있음

○ 귀촌인 지역일 쿠폰제

- “마을도우미”, “이동도우미” 등 여러 가지 지역 일들이 존재
- 특히 고령농 돌봄 서비스가 필요, 직판장 출하품 배송, 읍내 장보기 이동 등 귀농·귀촌인들이 도울 수 있는 영역
- “지역일 쿠폰제”가 되면 고령 주민도 편히 부르고 귀촌인도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 될 것

○ 귀농인 농업노동력과 교육을 겸하는 아이디어 : 영농쿠폰

- 귀농인이 초기에 다양한 영농경험을 하고, 작목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함
- 6개월 상주하는 인턴방식을 보완, 쿠폰지원으로 여러 농가, 여러 작목을 경험하고 농가 입장에서라도 불시에 필요한 노동력을 활용
- > 고용주의 자격 문제 등, 대농이면 단순 노동력으로 접근할 수도 있음

○ 귀농·귀촌인 멘토제 [구례군 시행 사례]

- 멘토 10명, 귀농귀촌 2~3년차 50명을 멘티로 선발
- 궁금한 것 무엇이든, 언제든지 10명의 멘토에게 물을 수 있게 하고 멘토는 활동에 따라 20만원/월 지원

○ “귀농귀촌인 정보 키트” : 전입신고 대응

- 면사무소 전입신고 할 때, 신고 받는 직원이 귀농·귀촌 여부를 확인

- 귀농·귀촌인에 해당하면 귀농·귀촌 관련 생활정보, 유의사항, 이장 전화번호 등이 담긴 기초 정보 키트를 제공
- 해당 마을 이장에게 통지하여 마을 소개 및 상호 교류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 > 면에 전입하면 농협상품권을 주는 등 혜택(당진)이 있는데 막상 소개, 설명을 해주지는 않음
- > 면사무소가 귀농·귀촌인이 처음으로 접하는 공적인 지역공간.... 면사무소에 귀농귀촌인 상담인 혹은 상담공간을 지정하는 등 수용노력 필요

○ 인정 귀농제

- 소유 경지가 없어 (실제 경작을 하고 있음에도) 직불금을 못 받거나, 빈집 고치는 것도 농지 원부가 없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 일정한 조건하에 귀농인 자격을 부여하여 농업인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 > 귀농인으로서 인정하고 왜 지역에서 우선하여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기존 지역민도 수용가능, 또한 귀농·귀촌인 본인의 노력도 담보할 수 있는 방식

○ 귀농·귀촌 여성 지원

- 귀농·귀촌가구의 부인들, 특히 청장년층 부인의 지역내 문화 교류 등 활동 공간 제공
- 시군 조사업무 등에 참여하는 기회 부여 등
- * 보육관련 “방문 아이돌봄 서비스”(당진시)와 연결되어야, 이미 시행되고 있어 도움이 됨, 문제는 그런 지원이 있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 정보 전달 문제

□ 기존 시책 관련

○ 창직인턴(고용노동부)

- 지원기준이 35세로 낮아졌음, 기존 기준인 40세로 해야 필요 인력 확보
- * 창직 인턴 관련 제도 변경 사항, 수요 등 추가 확인 필요

○ 지자체 정착 지원

- 빈집 수리, 정착지원금 등 예산이 부족, 귀농귀촌 인원이 늘면서 실제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
- 귀향인이고 세대를 부모와 합가하여 이주한 경우, 실질적인 귀농이면서도 정부, 지자체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 군, 면 단위 소규모 가공센터

- 농업만으로 이루어지는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보완
- 6차산업 개념으로 접근하여 귀농·귀촌인이 일하고 소득 확보하는 기회 제공

○ 지역에서의 농업기술 교육 심화

- 지역 이주한 상황에서는 기술센터 등의 귀농인 교육이 수준에 따라 심화된 것이 필요
- 귀농인의 경우 기존 교육에 안주하여 과도한 자신감을 갖는 경우도 있으니, 지역에 일반화되어 있고 농협 판로가 가능한 품목, 심화 기술 교육 등으로 현실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부록 3] 귀농·귀촌 중단사례 면담 내용(30인 중 1인)

△ 면담일시 : 2014년 9월18일 16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 면담대상 : 노OO(1961년생, 남)

△ 전체 귀농기간 : 2012. 3~2014. 3

△ 귀농 이전 거주하던 지역 : 중국(한국기업의 주재원으로 근무)

△ 귀농 아이템 : 고추, 아로니아(재배는 못함)

△ 가족 : 부부, 장인, 장모

△ 귀농 계기 : 20년동안 지속되어 온 해외 주재원(중국) 근무에 지쳐서 귀농을 생각하게 됨, 은퇴와 함께 약 5개월 정도의 귀농교육을 마치고 바로 귀농함

<농업 관련>

○ 귀농하기까지의 히스토리

중국 주재원이어서 부부가 함께 해외생활을 오랜기간 해왔음. 아이들과는 떨어져서 살아옴. 농촌의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싶었고, 회사 퇴직 이후 터닝포인트가 필요했음. 활력을 찾고 싶기도 했음. 하지만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생활만 해본 아내는 반대함. 마침 장인장모는 오랜기간 도시생활을 했음에도 고향(E군)으로 돌아가고 싶어했고, 장인 장모를 모시고 E군으로 함께 귀농하자고 부인을 설득해 귀농을 실행에 옮기게 됨.

설득하는 과정에서 도시민대상 귀농교육을 두 차례(각 2개월, 3개월 단위) 등 귀농교육을 알아봐서 받게 됨. 사전조사기간까지 따지면 준비기간은 1년 정도 됨. 귀농교육과정 선배이자 E군에 귀농한 사람(당시 E군귀농인협의회장)이 땅을 소개해줘 땅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음. E군에서도 도시가 아닌 시골적인 분위기라 좋았음. 땅을 사기 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다른 데와 물려있다든지, 다른 사람이 쓰고있다든지, 예상치 못하게 산소, 사당일 경우 등) 활용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고민, 부동산 시세도 확인했는데 결정적으로 땅을 사는 데는 선배의 도움이 컸음. 땅 1,500평, 시설 250평, 나대지 1,200평이었으며 집은 신축했음.

준비자금은 총 4억5천만원(귀농인농업창업지원 융자 2억4천 포함)이었음.

작목은 지역에서 특산물 추천해주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고추와 아로니아를 시작함, 각각 귀농교육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실제 농사경험이 없어 시행착오는 있었음.

귀농 포기 원인 : 수익창출에 실패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농사를 하다 허리를 다쳐 허리 수술을 함, 농사를 더 지을 수 없게 됨. 대출이자를 못 갚을 정도로 허덕이다 잘못됐다는 생각에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정함.

○ 귀농 생활중 힘들었던 일

1) 수익창출 문제 : 가장 큰 문제는 투자만큼 수익이 안 나온다는 것이었음. 고추는 풍성하게 자랐는데 다 팔아도 생활이 안 됨. 계산해보니 2년간 총매출이 500만원 이하, 1년 250만원 수익이 난다는 것인데 온 가족이 이 수익으로 살아갈 수 없었음. 그 돈으로 만일 장사를 했다면 버젓하게 돈을 벌었을텐데, 농사는 왜곡된 구조 때문에 수익내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음. E군 농협에서 고추를 수매해갔는데 수매가격이 턱없이 낮았음. 돈을 벌려면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는 수밖에 없는데 판로개척에도 추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로를 개척하나 농협에 수매하나 결국 수익금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고추에 병이 든 것도 아니고 농사가 잘 됐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끝물’에 팔리는 것은 상자당(10kg) 몇 천원 밖에 받지 못했음. 나중에는 차라리 인심이라도 연자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말았음. 장인, 장모, 아내, 본인 등 4가족이 모두 농사를 지었지만 2년동안 1인당 100만원밖에 못 번 것이며, 이게 농촌의 현실임. 고추의 경우 농약은 적게 치고 주로 EM을 많이 활용해서 재배했음. 아로니아는 3년 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하고 재배도 못했음.

2) 과도한 노동 : 한 시절밖에 안 쓰는 농기계를 구입하자니 비싸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를 하거나 가능하면 몸으로 직접 하다보니 지나치게 무리하게 됨. 장인 장모는 도시생활을 했고 연로하셔서 농사지을 몸이 안 되었는데 농사지으면서 고생하심

3) 초기의 과도한 투자금 : 땅이 계단식 논이었음. 처음 수익이 나지 않을 때 도시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투자를 많이 함. 계단식 논에 토목비를 많이 투자해서 평지로 만들어놓음. 땅을 내놓으면서 구매가에 이 비용을 추가하니 시세보다 약간 높아져서 사람들이 사려고 하지 않음. 현재 집과 농지 전부 그대로 있는데 일을 찾아 부인과 도시로 복귀했고, 장인 장모는 아직도 E군에 떨어져 계심. 오매불망 도시로 오고싶어 하셔서 팔리는대로 모시고 올 것임.

4) 아내의 적응 문제 : 도시에서 바쁜 생활 속에서 살다가 패턴이 바뀌니 적막감, 외로움을 느낌. 여자인데 인간관계가 끊어지니 더 적응을 못했음. 하지만 장인장모가 함께 있

어 그런 부분 애로점이 심하지는 않았음. 이전에 미술교사를 했는데 농사를 갑자기 하니 생활패턴에 변화가 있음. 지금은 도시에서 생활하니 직접 일을 하지는 못해도 미술관을 구경 다니거나 관련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간접경험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임. 귀농생활을 하면서는 전혀 그런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문화생활을 할 기회도 없이 일하느라 힘들어했음.

○ 기타 의견

- 귀농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해야만 가능함, 그게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하면 안 됨. 자식과 분가해서 귀농한다면 근근이 살아가면 되나 40~50대라면 자식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지출이 있음. 시골이라 돈을 많이 안 쓰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고정지출이 있어 지출이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 하는데 월 200~300 벌어도 신통찮은데 그 정도도 벌지 못함. 각종 들어가는 이자가 월 100만원 수준인데(농창업융자 포함) 감당이 되지 않았음. 이자는 현재까지 계속 갚고 있음.

- 귀농 당시 땅을 소개시켜준 선배와 2년차 마을기업 일을 잠깐 했지만 곧 못하게 됨. 당장 먹고살기 힘든 상황이 되다보니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씬. 선배 1명 외에 교류가 거의 많지 않았음. 동네사람과의 유대관계가 별로 없었음.

- 가족들과 모여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 내 땅에 살 수 있다는 여유로움은 좋았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좋았을 것임. 향후에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지 않은 이상 귀농할 생각이 없음. 노후연금이나 수당이 나온다면 의미있을지 몰라도, 돈벌 목적으로 귀농한다면 반대함. 수익구조 자체가 다름.

- 정책적으로 해결될 것은 없음.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함. 기존의 귀농지원정책도 괜찮고, 유지되어야 함. 다만 지금 금리가 1%도 안 되는데 귀농 창업자금 대출은 3%임. 이자가 비싸던 시기에는 싸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별로 싸게 느껴지지 않음. 수치가 안 떨어지는데, 시세가 반영되었으면 좋겠음.

○ 귀농중단 이후 생활

- 서울로 직장을 알아본 이후에 새 직장을 구해 아내와 올라옴. 땅은 선배에게 관리를 맡겼지만 안 팔려서 맡긴 것이므로 관리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함. 따로 위탁하지는 않음.

- 역귀농 이후 재취업이 굉장히 힘들었음, 지금은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음. 나의 역귀농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음.